

#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연구책임	신기현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최지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이진용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이정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제출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차

<요약> .....	v
1 장: 서론 .....	1
I. 연구 개요 .....	1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2 장: 기본소득 인식 기초 연구 분석 및 시사점 .....	9
I.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적 인식 .....	9
II.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시사점 .....	13
3 장: 전 세계 사례 기반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시사점 .....	17
I. 전 세계 사례 개요 .....	17
II. 기본소득 전세계 사례 요약 .....	65
4 장: 광역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및 기본소득 모형 개발 .....	71
I. 경기도의 기본소득: 보편성 실험에서 가치 보상으로의 전환 .....	71
II.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개 과정: 상세 .....	72
III.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상세 .....	76
IV. 전남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인구 소멸 대응과 절차적 정당성 .....	97
V. 전남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상세 .....	99
VI. 전북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농촌 소멸 대응과 독자 모델 모색 .....	117

Ⅶ. 전북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상세 .....	119
Ⅷ. 경기도 및 전라남도 기본소득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 .....	138
Ⅸ.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시사점 .....	145
5 장: 국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및 기본소득 모형 개발 .....	149
Ⅰ. 제 22 대 국회 기본소득 법안 발의 동향 및 특징 .....	149
Ⅱ. 국회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제도화 설계 요소 .....	150
Ⅲ.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시사점 .....	151
Ⅳ.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 기반 기본소득 모형 개발 시사점 .....	154
6 장: 지역형 기본소득 개발 논리-1 .....	157
Ⅰ. 복지 규모의 재조정: ‘보완’을 넘어선 ‘독자 생존’ 전략 .....	157
Ⅱ. 장소 기반 정책: ‘직업’에서 ‘장소’로의 패러다임 전환 .....	158
Ⅲ. 공유부 배당: 재정 자립과 지속 가능성 확보 .....	159
Ⅳ. 지역 순환 경제: ‘돈이 도는’ 경제 생태계 조성 .....	160
Ⅴ. 전환기 관리: ‘중층적’ 소득 안전망 구축 .....	163
Ⅵ. 실험주의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의 입증과 확산 .....	164
Ⅶ. 종합 제언: 전북형 모델의 정체성 확립 .....	165
6 장: 지역형 기본소득 개발 논리-2 .....	167
Ⅰ. 경기도형 기본소득 분석: 「청년·기회 지향형」 .....	167
Ⅱ. 전남형 기본소득 분석: 「농촌·공익 지향형」 .....	167
Ⅲ.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연구 시사점 .....	168
Ⅳ. 결론: 전북형 기본소득으로의 전략적 자리 매김 .....	170

7장: 전북형 기본소득 이행 방향 .....	173
I. 「기본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융합 기반 시사점 .....	173
II. 제도적 기반 구축: '통합 기본 조례' 제정 및 법적 체계 정비 .....	177
III. 거버넌스 및 추진 체계: '실행력'과 '민주성'의 동시 확보 .....	178
IV. 시범사업 설계 및 실행: '소멸 대응'과 '에너지 자립'의 결합 .....	179
V. 성과 관리 및 확산 전략: 데이터 환류와 국가 정책 견인 .....	180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상세 해설 .....	188
참고문헌 .....	203
1. 법률안 및 조례/조례안/공고문 .....	203
2. 의회 회의 자료 .....	205
2. 문헌/자료 상세링크 URL (알파벳순) .....	211
3. 문헌/자료 상세링크 URL (본문 인용순) .....	218
4. 기사/단행본/논문/보고서 (국내) .....	225
5. 기사/단행본/논문/보고서 (국외) .....	227
표 1. 기존 정책과 전북형 기본소득(안) 비교 .....	5
표 2. 기본소득 관련 사업별 특성 비교 .....	10
표 3. 기본소득 재원 유형 비교 .....	14
표 4. 전세계 주요 기본소득 사업 사례 .....	61
표 5. 기본소득 사례 유형별 비교 .....	69
표 6. 기본소득 전문가 자문 비교 .....	138
표 7. 정책 실행·지표 연계 매핑: SDGs/기본사회/기본소득 .....	175
표 8. [상세 비교표] 경기도형 vs 전남형 vs 전북형 기본소득(안) .....	182
표 9.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상세 해설 .....	184



## <요약>

### 1. 연구 배경과 문제 인식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소멸, 초고령화, 농촌 공동화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임. 기존의 선별 복지 및 단기 소득 지원 정책만으로는 거주 유지·정착 유도 효과에 한계가 있음.

농어민공익수당, 재난지원금 등은 범주형·일회성 정책으로 구조적 소득 안전망 역할 수행이 곤란함.

이에 따라 전북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역형 기본소득 모형 필요성이 제기됨.

### 2. 연구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전북형 기본소득의 정책 논리·재원 구조·제도화 방안·실행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국가 단위 기본소득이 아닌 광역지자체 차원의 실현 가능한 모델 설계에 초점을 둠.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기본조례(안), 거버넌스, 평가 체계까지 포함한 실행 중심 연구로 구성됨.

### 3. 기본소득 개념 정리와 이론적 쟁점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됨.

핵심 원칙은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임.

기존 복지 대비 행정비용 절감, 낙인효과 해소, 정책 수용성 제고 장점이 있음.

다만 재정 부담, 노동 유인 저하, 기존 복지 대체 우려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 됨.

#### 4. 기본소득 찬반 논의와 정책적 함의

해외 실증 사례에서 빈곤 완화, 건강·교육 지표 개선 효과가 확인됨.  
노동 포기보다는 불안정 노동 완충 및 전환기 안전망 역할이 강조됨.  
반대 논리는 주로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현실성에 집중됨.

전북형 기본소득은 전면적 보편 지급이 아닌 단계적·재원 연동형 모델로 설계 할 필요가 있음.

#### 5. 해외 기본소득 및 유사 제도 사례 분석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자원 수익을 공유부로 적립·배당하는 안정적 모델로 제시 됨.

몽골 사례는 자원 가격 변동과 정치 개입으로 안정화 장치 부재 시 실패 가능성을 보여줌.

다수의 도시형 파일럿은 기부·한시 재원 의존으로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공유부 기반 재원과 제도적 보호 장치의 결합이 핵심 요건으로 도출됨.

#### 6 국내 광역지자체 기본소득 논의 분석

경기도는 청년·농촌기본소득 등 단계적 실험과 성과 검증 중심 전략을 채택함.  
전라남도농어민공익수당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햇빛·바람 연금)을 발전시켜 옴.

전남형은 지역 존속과 인구 유지에 초점을 둔 공유부 기반 소득 모델로 평가 됨.

전북은 두 사례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함.

## 7. 경기도·전라남도 전문가 자문 종합 시사점

경기도 자문은 재정 구조 내 설계, 단계적 확대, 정책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함.

전라남도 자문은 지방재정의 한계, 재생에너지 모델의 제약, 국가 정책 연계 필요성을 강조함.

공통적으로 지방 단독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유부·국가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됨.

전북형 기본소득은 실험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 8.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의 핵심 설계

전북형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대응형 기본소득으로 정의됨.

재원은 조세 중심이 아닌 재생에너지·지역 개발이익 등 공유자원 기반을 원칙으로 함.

개인 단위 지급,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강화함.

기존 농어민공익수당 등과는 대체가 아닌 보완·중복 구조를 허용함.

## 9. 제도화·거버넌스·시범사업 전략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함.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급 범위, 중복 여부, 재원 운용을 심의하도록 설계함.

인구감소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마을자치연금 운영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함.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협약 기반 재정 분담 구조를 채택함.

## 10. 성과 평가, 확산 전략 및 종합 결론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 설정, 데이터 수집, 전문기관 평가를 의

무확함.

인구 유입, 지역 소비, 삶의 만족도 등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예산·계획에 환류함.

전북형 기본소득은 복지 확대 정책이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임.

공유부 기반 자원, 단계적 시행, 제도적 안정성이 결합될 때 국가 정책으로 확산 가능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음.





#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1 장: 서론

### I.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도의회)가 의회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과제로, 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독자적 기본소득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 내 재생에너지 등 공유 자원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과 법적·제도적 기반(조례, 위원회)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임.

### 1. 연구 배경

#### 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 전환과 지역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

- 대한민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명문화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정책 설계의 기본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화함.
-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제8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제20조), 성과 점검 의무(제11조 등)를 부과하고 있어, 소득·복지 정책 역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전북도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 농촌 소멸 위험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소득 보장 정책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법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대응 가능한 소득 보장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됨.

#### 나. 대내외적 정책 환경의 변화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 종식(SDG 1), 불평등 감소(SDG 10),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지속가능한 지역사회(SDG 11)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sup>1)</sup>

- 기본소득은 소득 하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절대빈곤을 예방하고, 불안정 노동과 지역 간 격차를 완충하는 수단으로 SDGs와 높은 정책적 정합성을 가짐.<sup>2)</sup>

-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기존 선별 복지나 직업 중심 정책만으로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거주 자체를 보호하는 소득 기반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sup>3)</sup>

- 전복형 기본소득은 SDGs를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

#### 다. 한국 사회의 ‘기본사회’ 전환 논의와 소득 보장의 재정의

-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체계를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개념이 주요 국가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음.

-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재정의하며, 이 중 소득은 다른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기초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 복지 체계가 구조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 무조건적·보편적 소득 보장 논리가 정책적으로 설득력

1)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https://sdgs.un.org/2030agenda>

2) ILO.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Work for a brighter future. 2019. ; <https://www.ilo.org/media/410956/download>

3) OECD. Rural Well-being: Geography of Opportunities.2020,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support-materials/2020/10/rural-well-being\\_8d2d0140/Rural-Well-Being-policy-highlights-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support-materials/2020/10/rural-well-being_8d2d0140/Rural-Well-Being-policy-highlights-en.pdf)

을 가짐.

- 전복형 기본소득은 기본사회의 국가적 방향성과 지역 소멸 대응을 연결하는 중간 정책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라. 전북도의 제도적 한계와 기존 정책의 구조적 제약

- 전북도는 현재 광역 차원의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부재하여,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적 정책 운영에 머물러 있음.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군·가구 단위·의무 이행 조건을 전제로 하는 선별 정책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조례 보조금을 이하 농어민공익수당으로 지칭)<sup>4)</sup>
-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무조건성·개별성·보편성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농업 정책 또는 공익 보상 정책의 성격에 가까움.
- 또한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은 단기적 경기 대응 수단에 머물러, 구조적 인구 감소와 삶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마. 지역 기반 혁신 사례와 지속가능한 자원 논리의 등장

- 2025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는 특정 면 단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실험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됨
-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 사례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동체 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통해, 외부 재정 의존도가 낮은 지역 자원 창출형 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줌.
-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강조하는 환경·경제·사회 통합 원리와 부합하며, 전복형 기본소득의 자원 설계 논리를 구체화하는 실증적 근거로 활용 가능함.

4) 2019년 10월 11일에 최초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 임업인, 농가경영체만 용어 정의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업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양봉농가까지 용어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범주, 가구 단위, 공익적 가치 유지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바. 연구 필요성 종합

-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이행 요구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정책 응답임
  - SDGs의 지역 내 실현 수단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연구임
  - 기본사회 국가 비전과 지역 소멸 대응을 연결하는 정책 매개 연구임
  - 기존 선별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소득 안전망 재설계 연구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복지 정책 검토가 아니라, 전북도의 지속가능한 존속과 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기반 연구로 위치 지워질 필요가 있음

구분	지속가능발전	기본사회	기본소득 <sup>5)</sup>
상위 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정과제·국가비전	소득보장 정책수단
핵심 가치	통합성·장기성	보편적 기본권	무조건성·보편성
정책 질문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무엇을 보장할까?	어떻게 보장할까?
전북 적용 의미	지역 소멸 대응	농촌 거주권 보장	최소 소득선 확보

지속가능발전 SDG 목표	지속가능발전 목표 내용	기본사회 연계 요소	기본소득 연계 성격
SDG 1	빈곤 종식	기본소득	최소소득 보장을 통한 절대·상대빈곤 완화
SDG 2	기아 해소	기본소득·기본돌봄	식료품·영양 접근성 확보
SDG 3	건강과 웰빙	기본의료·기본소득	의료 접근 + 소득 안정의 결합
SDG 4	양질의 교육	기본교육·기본소득	교육비 부담 완화, 학습 지속성
SDG 5	성평등	기본돌봄·기본소득	여성 돌봄 부담 완화, 경제적 자율성
SDG 7	에너지 접근	기본에너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SDG 8	양질의 일자리	기본소득	불안정 노동 완충 장치
SDG 9	산업·혁신	기본소득	전환기 위험 완화
SDG 10	불평등 감소	기본소득	소득 분배 구조 개선
SDG 11	지속가능한 지역	기본소득·기본주거	지역 정주 여건 안정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	기본소득	생존형 소비 압박 완화
SDG 13	기후 대응	기본에너지·기본소득	전환 비용의 사회적 분담
SDG 16	제도 신뢰	기본사회 전체	사회계약 회복
SDG 17	파트너십	기본사회 협치	중앙-지방-시민 협력

5)

## 2. 연구 목적

### 가. 전북 특화형 기본소득 모형 설계

- 전북의 인구 구조, 열악한 재정 여건, 그리고 농생명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북 맞춤형 기본소득 모형을 설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함.
- 현재의 범주형(농어민공익수당) 정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농민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며 단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전략을 제안함.

표 1. 기존 정책과 전북형 기본소득(안) 비교

구분	농어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전북형 기본소득(안)
정책 성격	선별·직업기반	지역 한정 실험	지역 존속 전략
지급 단위	가구	개인	개인
지급 조건	공익의무 이행	없음	없음
지급 범위	농어민	특정 면 단위	도민(단계적)
지급 기간	연 단위	시범기간	상시 제도
재원 구조	일반회계	도·군비	공유부·기금
제도 안정성	낮음	중간	높음

### 나.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

-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주민 수용성 분석을 바탕으로 정밀한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틀 등을 적용하여 소득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효과 분석 체계를 설계함.
- 기본소득의 이상적인 철학(무조건성, 보편성)과 현실 제도(범주성) 간의 간극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단계별 전환 조건을 마련함.

### 다. 제도화 기반 구축 및 공론화

- 개별 조례를 포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도출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행정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실행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개별 조례를 포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도출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행정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궁극적으로 전북형 기본소득 재원 시나리오를 제안하여 추후 지역사회 기본소득 공론화를 가능하도록 함.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 범위

#### 가. 공간적·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례 연구는 국외의 경우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선형 사례로 학술, 정책적 참고가 되는 것을 망라하며, 국외의 경우에는 제도화와 실행에 이르러 중앙정부 사례로 확산시킨 경기도와 인전 전라남도를 사례로 하여, 시간적으로는 2010년대에서 2020년대에 이르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봄, 20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까지 포괄함.

#### 나. 내용적 범위

- 국내외(경기도, 전남 등) 기본소득 조례 및 시범사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북형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급여, 재원 조달 방안(공유 자산 활용), 지급 수단(지역화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
- 이 연구가 전북도의회 의뢰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 지역 의회의 사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경기도, 전남 등) 기본소득 조례 및 시범사업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해당 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전북형 기본소득의 기본 조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자 함

## 2. 연구 방법 및 전략

### 가. 문헌 및 제도 분석

- 국내외 기본소득 관련 조례, 법안, 정책 보고서 및 이론적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기본소득의 정의, 유형, 필수 설계 요소 등을 도출하고, 타 지자체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성을 확보함.

### 나. 사례 비교 분석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보편 지급), 신안군 햇빛연금(이익 공유), 익산시 마을자치연금(공동체 수익) 등의 운영 방식과 재원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전북형 모델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추출함.

- 핀란드, 나미비아, 알래스카(영구기금) 등 해외 사례에서 재원 마련 방식과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정책 설계의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강화함.

### 다. 전문가 자문

- 기존 선행 연구 및 자료를 재분석하여 정책에 대한 수용성, 도덕적 해이 등 우려 사항, 기대 효과를 파악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함.



## 2 장: 기본소득 인식 기초 연구 분석 및 시사점

### I.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적 인식

#### 1. 기본소득의 논의 개요

• 주요 연구 대상: 알래스카 영구기금, 나미비아와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등 다양한 국제 사례를 통해 빈곤 감소, 노동 유인,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실증적 선행 사례를 수집함. 이러한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소득 개념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하면 기본소득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을 자산 조사 또는 근로 요건 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불로 정의

•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더 짧은 형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자산 조사나 노동 요구 사항 없이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되는 현금 지불(BIEN 총회, 서울, 2016년).

이 점에서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보유한 것으로 이해함.

①정기성(Periodic) : 일정 기간(예 : 매월)으로 지급되며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음

②현금 지급(Cash Payment) : 적절한 교환 매체를 통해 지불되며, 이를 수령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③개별성(Individuality) :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 예를 들어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음

④보편성(Universality) : 자산 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

⑤무조건성(Unconditionality) : 일할 의지 또는 일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지 않고 지급<sup>6)</sup>

---

6) Malcolm Torry, What's a definition? And how should we define 'Basic Income'? A paper for the BIEN Congress in Lisbon, 2017

이러한 기본소득의 특성을 전북 지역 기본소득과 연결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구분할 수 있음<sup>7)</sup>

표 2. 기본소득 관련 사업별 특성 비교

기본소득 특성	농촌기본소득 <sup>8)</sup>	농어민공익수당 <sup>9)</sup>	마을자치연금 <sup>10)</sup>
①주기적	월간	매년	월간
②현금지급	15만원(일부)	60만원(일부)	10만원(일부)
③개별성	○	농어가	○
④보편성	○	농어민(범주)	70세 이상
⑤무조건성	○	어느 정도의 의무	○
지속가능성 <sup>11)</sup>	5년(혹은2년)시범사업	1년단위 연속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한

## 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 논리

### 가. 빈곤 감소 및 소득 불평등의 획기적 완화

- 소득 불평등 개선: 알래스카 PFD(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형식과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과 매우 유사함. PFD가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로 만드는 데 기여했고, 모든 시민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며, 빈곤을 줄이고 실업의 덫을 완화하며, 노동자의 자유를 증진한다고 주장되기도 함.<sup>12)</sup>
- 절대 빈곤 및 영양 상태 개선: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BIG) 결과, 학비와 진료비 납부율이 거의 100%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아동 영양실조율도 42%에서 10%로 떨어지는 등 생존권 보장에 효과를 보임.<sup>13)</sup>
- 건강 및 위생 증진: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실험에서는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정기적인 식사, 깨끗한 물,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위생 상태와

7) Kie Hyun Shin, "Is a Sustainable Basic Income Possible: Comparative Analysis of Sustainability of 3 Pilots Related to Rural Areas in Korea" Country Case Studies on Basic Income BIEN Congress in Seoul, 2023의 표를 2025년 중앙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공고 등과 연계하여 재구성; 표에서 ○표시는 1열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함.

8)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025년 상반기에 전북도도 계획했었지만 하반기에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전국 확산

9) 전북도 및 전남도에서 농어민 대상으로 시행된 공익수당 사업

10) 익산시 상당포구 마을의 마을자치연금

11)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속성으로 지속가능성은 강조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이나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음

12) 알래스카는 미국 모든 주 중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균등하며,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인 가구 수도 가장 적음.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배당금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배당금 도입 이후 알래스카의 소득 분배 평등과 빈곤 완화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https://www.ippr.org/articles/a-citizens-income-and-wealth-fund-for-the-uk-lessons-from-alaska>

13)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건강이 향상되었고, 캐나다 Mincome 실험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입원율이 감소함.<sup>14)</sup>

- 심리적 안정감 제공: 빈곤층이 겪는 일상적인 생존 압박과 인지 자원(cognitive resources) 고갈을 막아주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사회적 응집력을 향상시킴.

#### 나. 경제 성장 및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알래스카의 경우 배당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시간제 근무를 1.8%포인트(17%)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 효과를 보정한 결과, 실증 분석은 현금 지원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반 균형 효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sup>15)</sup>

- 인적 자본 투자 및 자기 계발: 생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학업을 지속하거나 기술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며, 실제 캐나다 실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률이 상승하고 나미비아에서는 학교 중퇴율은 2007년 40%에서 2009년 5%로 감소.<sup>16)</sup>

- 불안정 노동 보호: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임금 정체, 단기 계약직 증가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열악한 조건을 강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다.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재평가

- 행정 비용 절감 및 낙인 해소: 자산 조사나 소득 심사와 같은 복잡한 선별 과정이 생략되므로 관료주의적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발생하는 급여 사기나 수급자가 겪는 사회적 수치심(낙인효과)을 제거함.

---

14) Brotoni Roy, "Universal Basic Income in India ? a promising experience."

<https://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15)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2Fpol.20190299>

16)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utm\\_source=chatgpt.com](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utm_source=chatgpt.com)

- 젠더 평등 및 무급 노동 가치 인정: 가사 노동, 육아, 노인 돌봄 등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개인 단위로 지급될 경우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가정 내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여 성평등을 촉진함.

### 3.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

#### 가. 막대한 재정 부담 및 비용 효율성 문제

- 천문학적 예산 소요: 유의미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핀란드나 영국의 사례 연구에서 보듯이 이는 급격한 세금 인상이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 재앙이 될 수 있음.
- 금액 설정의 딜레마: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낮추면 빈곤 해결에 효과가 없고, 효과적인 수준으로 높이면 재정이 파탄 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나. 노동 유인 저하 및 경제적 부작용

- 근로 의욕 감소: 무조건적인 소득 지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유쾌한 즐거움을 위해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인플레이션 및 물가 상승: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지급된 기본소득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인도의 반대 논리처럼 공공배급 제도를 현금으로 대체할 경우 곡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다. 기존 복지 제도의 축소 및 빈곤층 손실

- 복지 축소의 역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료 보조, 주거 지원 등)를 통폐합할 경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나 장애인의 실질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어 불평등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본적 해결 미흡: 단순한 현금 지급은 알코올 중독, 건강 악화, 기술 부족, 사회적 고립 등 빈곤의 복합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며, 맞춤형 서비스가 결여된 현금 살포는 빈곤 탈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라. 도덕적 해이 및 사회적 우려

- 유혹 상품 소비 및 도덕적 해이: 지급된 현금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교육비가 아닌 술, 담배, 도박 등 유혹 상품 소비에 탕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적 자금이 비생산적이고 도덕적으로 유해한 활동에 쓰인다는 비판을 받음.

- 이민자 유입 우려: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저개발 국가나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을 유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스위스 국민투표 등에서 주요 반대 논거로 작용함.

## II. 전복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시사점

### 1. 재원 모델: ‘세금’이 아닌 ‘공유부’ 기반 구축

- [알래스카 모델의 확장]:

기본소득 반대 논리의 핵심인 조세 저항과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알래스카가 석유 수익을 배당하여 불평등을 완화했듯이 전복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및 새만금 부지’를 공유 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안될 수 있음.

- [실행 방안]:

도민의 세금을 걷어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 공유 자원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적립하여 배당하는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제안됨.<sup>17)</sup>

---

1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81호(2025.9.1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공고에서는 지역재원창출형 기본소득을 제시함. 여기서 지역재원창출형은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임. 관련 예시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화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칭하였음.

표 3. 기본소득 재원 유형 비교

구분	일반회계	국비 의존	공유부 기반
정치적 안정성	낮음	낮음	높음
재정 부담 인식	높음	중간	낮음
지속 가능성	낮음	중간	높음
주민 수용성	낮음	중간	높음
전북 적합성	×	△	○

## 2. 정책 설계: 기존 복지의 ‘대체’가 아닌 ‘보완’

### • [복지 축소 우려 불식]:

반대 측이 우려하는 ‘복지 축소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형 모델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농민수당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제도 위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요구될 것으로 시사됨.

### • [중복 지급 허용]:

특히 농촌 소멸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농어민 공익수당’과 시범 사업인 ‘농촌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설계를 통해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구 유입 유인을 극대화해야 함을 의미함.

## 3. 노동 유인 논란 대응: ‘소멸 대응’과 ‘사회적 가치’ 프레임 전환

### • [농어촌 활력 증진]:

전북의 현실은 ‘노동 회피’가 아니라 ‘일할 사람의 부재’가 문제이므로, 기본소득이 노동을 안 하게 하는 돈이 아니라 청년 농부나 귀농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기회소득’임을 강조해야 함.

### • [사회적 가치 연계]:

농촌에서의 환경 정화, 마을 돌봄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일하지 않는 자에게 준다"는 도덕적 비판을 불식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4. 지역 경제 순환: '지역화폐' 의무화 및 사용처 최적화

- [역외 유출 방지]:

반대 논리 중 '유혹 상품 소비'나 자금의 역외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복형 기본소득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 [소비 편의성 제고]:

읍·면 단위의 경우 사용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을 완화하거나 찾아가는 장터 등을 운영하여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5. 성과 검증: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효과 입증

- [실증 데이터 확보]:

찬반 양론 모두 나미비아, 인도 등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듯이,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증 데이터가 필수적이므로 전복형 시범사업 시 반드시 비교집단(통제군)을 설정해야 함.

- [효과 입증 및 환류]:

인구 유입, 지역 소비 증대, 주민 행복도 변화 등을 계량화하여 입증함으로써, 향후 정부 공모 사업 선정 및 국가 정책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선점하고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sup>18)</sup>

---

18)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용역 공고 및 관련 자료를 참조



### 3 장: 전 세계 사례 기반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시사점

#### I. 전 세계 사례 개요<sup>19)</sup>

##### 1. Alaska Permanent Dividend Fund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 위치: 미국 알래스카
- 자원 창출 방식: 석유 및 광물 자원 수익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후, 그 투자 수익을 배당함
- 지속 가능성 평가: 주(州) 헌법에 기반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안정적이나, 자원 및 투자 수익 변동 리스크가 존재함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주(州) 헌법 기반, 석유 수익을 활용한 대표적 자산 환원 사례임<sup>20)</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알래스카 영구기금(APF)은 1976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배당금(PFD) 지급을 시작함.
  - 이는 '공유부'인 천연자원 수익을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세계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모델임.
  - 최근 유가 변동과 주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배당금 규모를 축소하고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기금 수익을 전용하려는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공유부 개념의 확장 및 법제화: 알래스카 모델은 한국 농촌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유부'로 정의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됨. 전복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조례나 특별법으로 '전복 미래세대 기금(가칭)'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19) 기본소득사업/시범사업의 운영 중, 운영 종료에 따른 판단은 유사 사업 시행의 지역별 차이, 사업 평가, 사업 분석, 사업 주체의 존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

20) <https://pfd.alaska.gov/>

를 마련해야 함.

- 재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단순히 세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권 변화에 취약함. 알래스카처럼 헌법(또는 조례)에 기반한 기금 운용 원칙을 세워야 하며, 전복형 모델 연구 시 기업 유치 수익이나 지방세 수입의 일부를 자동으로 기본소득 계정으로 이전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주민 수용성 제고: 알래스카 주민들이 배당금을 통해 자원 개발을 지지하듯,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 반대 여론을 '이익 공유'를 통해 찬성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수적임.

## 2. Black Resilience Fund (BRF)

- 위치: 미국 포틀랜드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기부 기반 (비영리 단체 Brown Hope 운영)
- 지속 가능성 평가: 기부 흐름에 좌우되어 불안정하며 확장성에 제한이 있음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2022~2026)
- 분류: 민간기부형
- 근거/메모: 지역사회 기반 모금, 안정성 낮음<sup>21)</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BRF는 구조적 인종차별과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흑인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됨.
  - 정부 예산이 아닌 크라우드 펀딩과 지역 사회 기부에 의존하며, 단순 현금 지급 외에도 멘토링과 커뮤니티 빌딩 서비스를 결합하여 운영함.
  - 'Village Building'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의 장기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모금 실적에 따라 지원 규모가 유동적인 한계가 있음.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민간 재원의 보조적 활용: 이 사례는 기부금 기반 모델의 불안정성을 보여줌. 따라서 전복형 기본소득의 주 재원은 공공 예산이나 자원 수익이어야 함. 단,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활용하여 농촌 기본소득의 '마중물' 재원으로 쓰거나, 청년 농부 정착금 등 특정 타겟형 지원에 민간 기금을 매칭하는 혼합형 재원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21) <https://www.blackresiliencefund.com/>

- 커뮤니티 회복력 강화: 현금 지급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소멸 위기 농촌 마을의 공동체성(Resilience)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지표 관리가 필요함. BRF처럼 현금 지원과 함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연계하여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함.

### 3. Baltimore Young Families Success Fund

- 위치: 미국 볼티모어
- 재원 창출 방식: ARPA(미국 구조계획법) 연방 기금 자선 기부 혼합
- 지속 가능성 평가: 파일럿 중심 설계로 장기 지속성 낮음
- 현재 운영 여부: 종료됨 (2022~2024)
- 분류: 민간기부형 (실질적으로 공공-민간 혼합)
- 근거/메모: 연방 코로나 구제자금 + 민간기부 혼합<sup>22)</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소득 보장 시장단(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젊은 부모들에게 월 1,000달러를 24개월간 지급함.<sup>23)</sup>
  - 재원의 핵심이 한시적인 연방 정부 보조금(ARPA)이었기에, 자금 소진 후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파일럿의 함정'을 겪음.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한시적 국비 지원의 출구 전략: 현재 한국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3~5년 단위의 한시적 지원이 대부분임. 볼티모어 사례는 외부 지원 중단 시 사업이 좌초될 위험을 경고함. 전복도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체적인 재원 조달 파이프라인(예: 지역 자원 시설세 신설, 유희군유지 임대 수익화 등)을 구축하는 출구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 효과성 입증 데이터 축적: 볼티모어는 종료되었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근거로 쓰임. 전복의 연구 역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민 삶의 변화(소비 패턴, 건강 상태, 정주 의향 등)를 정밀하게 추적 조사하여, 향후 '농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야 함.

22) <https://guaranteedincome.us/baltimore>

23) <https://guaranteedincome.us/baltimore> : <https://www.mayorsforagi.org/>

#### 4. Chicago Future Fund

- 위치: 미국 시카고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 비영리 기반 기금
- 지속 가능성 평가: 파일럿 규모 기반, 지속성 불확실
- 현재 운영 여부: 종료됨 (2021~2023)
- 분류: 기타
- 근거/메모: 범죄피해자·저소득층 중심, 비영리 지원<sup>24)</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들에게 월 500달러를 지급한 실험임.
  -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 비용(범죄, 수감 비용 등)을 얼마나 절감하는지를 검증하려 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사회적 비용 절감 논리 개발: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접근해야 함. 농촌 노인 빈곤은 고독사, 질병 악화로 이어져 막대한 의료비와 행정 비용을 유발함. 전복형 연구에서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노인 의료비 감소, 요양 시설 입소 지연 등에 미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계량화하여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 사각지대 해소: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까다로운 조건(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농촌 빈곤층에게 무조건부 현금 지급이 더 효과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5. Community Love Fund

- 위치: 미국 보스턴
- 재원 창출 방식: 자선 기금 기반 (Philanthropy)
- 지속 가능성 평가: 불확실 (기부 기반 → 외부 자원 의존)
- 현재 운영 여부: 진행 중 (1년 파일럿)

24) <https://policiesforaction.org/node/817> ; <https://f4gi.org/pilot/chicago-future-fund/>

- 분류: 민간기부형
- 근거/메모: 지역 커뮤니티 조직 중심<sup>25)</sup>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신뢰(Trust)'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증빙 서류 없이 현금을 지원함.
  - 관료주의적 절차를 배제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고 수혜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임.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기본소득 시사점:
  - 행정 간소화 및 전달 체계 혁신: 현재 농민수당 등은 신청 서류가 복잡하여 고령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음. 전북형 모델은 '신뢰 기반'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마을 이장이나 지역 활동가를 통한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행정 비용 절감: 선별 복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조사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여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필요함. 보편적 지급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6. Dallas Targeted Eviction Prevention Program Fund

- 위치: 미국 달러스
- 재원 창출 방식: 공공+민간 기금 혼합
- 지속 가능성 평가: 퇴거 방지 목적, 지속성 낮음
- 현재 운영 여부: 종료됨
- 분류: 공공-민간 혼합형
- 근거/메모: 주거안정 지원 기금, BI보다는 조건부지원 성격<sup>26)</sup>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25) <https://f4gi.org/pilot/community-love-fund/>  
<https://truthout.org/articles/this-program-gives-direct-cash-support-to-incarcerated-women/>  
 26)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dallas-targeted-eviction-prevention-program-fund/>

- 팬데믹 기간 급증한 퇴거 위기를 막기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라기보다는 긴급 구호 성격이 강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기본소득 시사점:
  - 주거와 소득의 패키지 정책: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소득만으로는 부족함. 델러스 사례는 주거 불안이 소득 효과를 상쇄함을 보여줌. 전북형 기본소득은 '농촌 빈집 리모델링(주거)'과 '기본소득(생계)'을 결합한 패키지 모델로 설계하여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함.
  - 사후 처방 vs 사전 예방: 델러스의 퇴거 방지는 사후적 조치임. 농촌기본소득은 빈곤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정책임을 강조하여, 위기 대응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더 효율적임을 정책적으로 어필해야 함.

## 7. Eastern Band of Cherokee Indians Casino Revenue Fund

- 위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재원 창출 방식: 부족 카지노 수익 배당
- 지속 가능성 평가: 안정적 (카지노 수익 변동성 존재)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부족 공동체 자산 환원 사례<sup>27)</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1988년 IGRA(Indian Gaming Regulatory Act)<sup>28)</sup> 시행 후 부족 소유 카지노 수익을 부족원에게 매년 배당함에 따라 처음 20년 동안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음: 아동 빈곤율은 약 11% 감소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음, 부족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약 7%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의 3%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임.<sup>29)</sup>

27) <https://ebci.com/> ;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eastern-band-of-cherokee-indians-casino-revenue-fund/>

28) <https://www.nigc.gov/office-of-general-counsel/laws-and-regulations/indian-gaming-regulatory-act/>

29)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5/11/tribal-casinos.html?fbclid=IwY2xjawPWWdpl eHRuA2F1bQlxMABicmlkETFkRzZHeDBZZ09wRHU5Z1doc3J0YwZhcHBfaWQQMjlyMDM5MTc4ODI>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기본소득 시사점:
  - 지역 자산 수익화의 롤모델: 체로키 부족에게 카지노가 있다면 전북 농촌에는 '햇빛, 바람, 경관'이 있음. 이 사례는 지역의 핵심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 전체가 공유할 때 사회 문제가 해결됨을 증명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효과: 이 기금의 효과는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두드러짐.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 시,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수당을 강화하거나, 미래 세대(청년 농부)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도록 가중치를 두는 설계를 고려해볼 수 있음.

## 8. Family Goal Fund

- 위치: 미국 시카고/LA/DC/NY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재단·자선 기부 기반
- 지속 가능성 평가: 불안정 (기부 흐름 유지 의존)
- 현재 운영 여부: 종료됨; 지역차이 존재 (2020~2023)
- 분류: 민간기부형
- 근거/메모: 도시별 다중 파일럿, 비영리 주도<sup>30)</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교육, 저축 등)를 달성하도록 현금을 지원하며, 전문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구의 자율성을 존중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기본소득 시사점:
    - 사용자들의 자율성 보장: 농민수당 등이 특정 사용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례는 사용의 자율성이 목표 달성 효율을 높임을 시사함. 전북형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농자재 구입부터 자녀 학원비까지 폭넓은 사용처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정책 만족도와 효능감을 극대화해야 함.
    - 가구 단위 vs 개인 단위: 가족 목표 펀드는 가구 단위를 지원함. 한국 농촌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 지급 시 가부장적 구조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에게 혜택이 덜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단위' 지급 원칙을 고수해야 함을 역

wMDg5MgABHg4cRaOlGfGjMWWUzG3KYncTW3pVAKI9JQBOMSi50MH8HyU7areVV-fv6lnB\_aem\_BeklblzhfiBjzFZipHhafw

30)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family-goal-fund-new-york-city/>

설적으로 시사함.

#### 9. Houston Equity Fund

- 위치: 미국 휴스턴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기부 기반
- 지속 가능성 평가: 불안정 (기부 기반, 확장성 제한)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형태 다양)
- 분류: 민간기부형
- 근거/메모: 기업·재단 후원<sup>31)</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기업과 자선가들의 기부금을 통해 인종 간 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기업 ESG 경영과의 연계: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NPS), LX공사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ESG 자금을 농촌 상생 기금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익산시의 마을자치연금 사례처럼, 기업 후원금을 재생에너지 설치비로 지원하고 그 발전 수익을 영구적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기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 10. Madison Forward Fund

- 위치: 미국 매디슨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재단·기부 기반
- 지속 가능성 평가: 불안정 (지속성 낮음)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종료 (2022~2023)
- 분류: 민간기부형

---

31)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houston-equity-fund/>

- 근거/메모: 지자체 협력, 외부 기부<sup>32)</sup>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매디슨 시장 주도로 시작된 소득 보장 실험으로, 대학 연구팀(위스콘신대)과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지자체가 행정을, 민간이 재원을, 대학이 연구를 맡는 3자 협력 모델임.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기본소득 시사점:
  - 지자체-대학-연구원 협력 거버넌스: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북연구원, 전북대학교 등 지역 싱크탱크와의 결합이 필수적임. 매디슨 사례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Data-driven Policy)를 확보해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법률 제정을 설득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의 리더십: 매디슨 시장의 의지가 프로젝트의 동력이 되었듯, 전북도지사 및 기초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정치적 리더십이 농촌기본소득 실현의 핵심 변수임을 시사함.

## 11. San Francisco Housing Stability Fund

- 위치: 미국 샌프란시스코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및 공공 혼합 (퇴거 방지 및 주거 안정 기금)
- 지속 가능성 평가: 임시 목적성이 강해 지속성이 제한적이며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종료됨
- 분류: 공공-민간 혼합형
- 근거/메모: 주거 중심 조건부 지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BI)과는 성격이 다름<sup>33)</sup>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이 펀드는 샌프란시스코의 살인적인 임대료로 인한 저소득층의 퇴거 위기를 막기 위해 조성됨. 팬데믹 기간 동안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 체납분을

32) <https://www.irp.wisc.edu/MadisonForwardFund/>

33) <https://www.sf.gov/departments--housing-stability-fund-oversight-board--about> ;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san-francisco-housing-stability-fund/>

지원하거나 긴급 이사 비용을 제공하는 등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조건부 현금 지원 성격이 강함.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주거 안정이 소득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남김.<sup>34)</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주거+소득' 결합 패키지 전략 필요: 샌프란시스코 사례는 소득 지원만으로는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효과가 반감됨을 시사함. 한국 농촌의 경우 '주거비'보다는 '주거 환경(폐가, 노후 주택)'이 문제임. 전복형 기본소득 연구에서는 단순히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전북도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에게 '리모델링 된 주거 제공(주거 기본권) + 기본소득(생활 기본권)'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 정책을 설계해야 함. 이는 청년층의 농촌 유입 장벽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 또한, 주거 불안정이 해소될 때 기본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12. Human Development Fund (몽골)

- 위치: 몽골
- 재원 창출 방식: 광물 자원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 후 배당함
- 지속 가능성 평가: 자원 가격 및 재정 정책에 좌우되어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2016년 폐지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몽골 광물 자원 기반 배당형 모델이었음<sup>35)</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몽골은 구리, 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 수출 수익을 '인간개발기금(Human Development Fund)'에 적립하여 전 국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해 옴. 2010~2012년 사이에는 매월 현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했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기금 운용으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지급이 중단되거나 아동수당 등으로 축소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음.<sup>36)</sup>

34) <https://sf.gov/topics/housing>

35) <https://www.mof.gov.mn/> ;

<https://www.brookings.edu/articles/mongolias-quest-to-balance-human-development-in-its-booming-mineral-based-economy/>

36) <https://www.local2030.org/library/221/Natural-Resource-Revenue-Sharing.pdf>

<https://www.mof.gov.mn/>; 자원 수익을 시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는 '자원 기반 배당·공유' 개념 자체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안정화 장치(Stabilization Fund) 마련 필수: 몽골의 실패는 자원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 부재에서 기인함. 전복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때, 수익이 많이 나는 해에는 잉여금을 적립하고, 수익이 적은 해에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함.
  - 정치적 독립성 확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고무줄처럼 변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을 도지사의 재량권에서 분리하여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이는 정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임.

### 13. GI 305 Community Fund

- 위치: 미국 마이애미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커뮤니티 기금 기반
- 지속 가능성 평가: 규모가 작고 기부 기반이라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 분류: 민간기부형
- 근거/메모: 소규모 지역사회 기금으로 운영됨<sup>37)</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마이애미의 젠트리피케이션 위기 지역(우편번호 305) 주민들을 돕기 위한 풀뿌리형 기본소득 실험임. 대규모 자본보다는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기금을 모으고, 수혜 대상 선정부터 지급 방식까지 커뮤니티가 직접 결정하는 '참여형 복지' 모델을 지향함.<sup>38)</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 아닌, 읍·면·동 단위 마을 자치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기본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줌. 전복형 기본소득 연구 시, 마을 공동체 사업 수익이나 지역 내 기부금을 재원으로

는 유지되고 있지만, HDF 이름의 제도는 중단된 상태임. 현재는 Chinggis Fund 등 새 구조 아래에서 수익 관리 및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https://en.wikipedia.org/wiki/Chinggis\\_Fund](https://en.wikipedia.org/wiki/Chinggis_Fund)

37) <https://www.gi305.org/>

38) <https://www.gi305.org/>

하는 '마을 자치형 소액 기본소득'을 공공 자원과 매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공동체성 회복: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함. 익산시 상당포구마을처럼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함.

#### 14. Renda Basica de Cidadania (Marica, 브라질)

- 위치: 브라질 Marica
- 자원 창출 방식: 석유 로열티 (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 지속 가능성 평가: 지속적인 석유 로열티 수익 기반으로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20년 등록 완료 후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52,000명 대상 월 130 reais(약 \$64) 지급, 지역화폐 mumbuca 사용<sup>39)</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브라질 노동자당(PT)의 기본소득 운동가 에두아르도 수플리시의 철학이 구현된 도시임. 시 앞바다 유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로열티를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뭉부카(Mumbuca)'라는 디지털 지역화폐를 지급함. 이 화폐는 지역 은행이 관리하며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어, 글로벌 대기업(월마트 등)으로 부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킴. (관련 근거: Vox, Marica Info)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핀테크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마리카의 성공 요인은 편리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임. 전복도는 고령층도 쉽게 쓸 수 있는 '전복형 기본소득 카드/앱'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이나 배달 앱과 연동시켜야 함.
  - 자원 수익의 지역 내 순환 강제: 새만금 태양광 수익 등이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함. 마리카처럼 자원 수익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강제하는 '닫힌 경제 회로(Closed

3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10/30/20938236/basic-income-brazil-marica-supply-workers-party>

Loop Economy)' 설계가 필요함. 이는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임.

#### 15. Iran National Basic Income (이란 전국)

- 위치: 이란 전국
- 자원 창출 방식: 연료 보조금 개혁 (에너지 및 식품 보조금 절감 자원)
- 지속 가능성 평가: 인플레이션, 경제 제재, 유가 변동에 의존하여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2010년 시작되어 지속 조정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모든 시민 대상 보조금 대체 현금 지급, 인플레이션 부작용 존재<sup>40)</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2011년 이란은 빵과 연료에 대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개혁을 단행함. 초기에는 빈곤율 감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미미해짐. (관련 근거: World Bank Report)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기존 보조금 통합의 신중한 접근: 이란 사례는 기존 혜택(보조금)을 없애고 현금을 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함. 한국 정부가 농업 직불금 등을 통합하여 농촌기본소득으로 전환하려 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 농민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 전복형 연구에서는 '물가 연동형 기본소득' 설계가 필수적임.
  -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화폐를 찍어내거나 빚을 내면 안 됨. 전복도는 확실한 세입원(재생에너지 수익, 지방세 등)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야 하며,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함.

40) [https://en.wikipedia.org/wiki/Subsidies\\_in\\_Iran](https://en.wikipedia.org/wiki/Subsidies_in_Iran) :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by\\_country#:~:text=Iran%20was%20the%20first%20country,to%20reduce%20inequality%20and%20poverty.](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by_country#:~:text=Iran%20was%20the%20first%20country,to%20reduce%20inequality%20and%20poverty.)

<https://borgenproject.org/universal-basic-income-in-iran/#:~:text=Iran%20started%20their%20universal%20basic.income%20per%20person%20per%20day.> :

## 16. Renta Dignidad (볼리비아)

- 위치: 볼리비아 전국
- 재원 창출 방식: 탄화수소 세금 수익(IDH) 30% + 국유화 기업 배당
- 지속 가능성 평가: 세금 기반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함
- 현재 운영 여부: 2008년 시작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60세 이상 보편적 노인 연금, 연 \$340(무연금자) 지급<sup>41)</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모랄레스 정부의 천연가스 국유화 조치 이후, 그 수익을 전 국민(60세 이상)의 노후 보장으로 돌린 사례임. 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노인 빈곤율을 14% 이상 감소시킴. 이는 자원 민족주의가 사회 복지와 결합된 대표적 성공 모델로 평가받음. (관련 근거: IDB, World Bank)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보편적 노인 복지의 확대: 한국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지만, 볼리비아 모델은 자원 수익을 통해 100% 보편 지급을 실현함. 전북 농촌은 초고령 사회이므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해 '전복형 농촌 기초연금'을 신설, 국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 공공의 자원 통제권: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공공이 쥐고 있었기에 가능했음.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등에서 민간 주도 개발(PF) 방식의 한계를 직시하고,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 부문이 지분에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를 강화해야 함.

## 17. Citizen's Account Program (사우디아라비아)

- 위치: 사우디아라비아 전국
- 재원 창출 방식: 석유 수익 기반 경제 개혁 (보조금 절감)

41)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ressource.ressourceId=53854>

- 지속 가능성 평가: 석유 수익 다각화 노력으로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17년 시작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에너지 가격 상승 보상을 위한 저소득층 현금 지급<sup>42)</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비전 2030' 개혁의 일환으로 전기, 수도, 휘발유 가격을 현실화(인상)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타겟형 완충 장치'에 가까움. 370만 가구 이상이 등록되어 혜택을 받음. (관련 근거: Saudi Press Agency)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에너지 전환 비용의 사회적 합의: 한국도 탄소 중립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혜택 축소 등이 논의될 수 있음. 이때 사우디 모델처럼 보조금 감축분을 '농어민 기후 수당'이나 기본소득 형태로 직접 보상하여 정책 저항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함.
  - 가구 단위 차등 지급의 교훈: 사우디는 가구 소득과 규모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함. 전복형 기본소득 연구 시, 모든 도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재원 한계상 소득 역진적 설계(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18. Ho-Chunk Nation Per Capita Payment (미국)

- 위치: 미국 위스콘신 (Ho-Chunk 부족)
- 재원 창출 방식: 카지노 수익 배당
- 지속 가능성 평가: 카지노 수익 변동성이 존재하나 지속적임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부족원 대상 배당, 지역 공유 자산 환원 사례<sup>43)</sup>

42)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27s\\_Account\\_Program\\_\(Saudi\\_Arabia\)](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27s_Account_Program_(Saudi_Arabia))

43)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9638268/> ;

<https://www.wsaw.com/2021/06/24/ho-chunk-legacy-payments-continue-uninterrupted/>

[https://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nrgi\\_undp\\_exec-summary.pdf](https://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nrgi_undp_exec-summary.pdf)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Ho-Chunk 부족은 카지노 수익(순이익)의 약 70-80%를 부족 운영비와 서비스에 쓰고, 나머지를 부족원들에게 'Per Capita(1인당 배당금)'로 지급함. 중요한 점은 아동의 배당금은 신탁 기금(Trust Fund)에 묶어두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만 찾을 수 있게 하여 교육을 장려한다는 것임. (관련 근거: Ho-Chunk Nation Constitution)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미래 세대를 위한 신탁(Trust) 제도 도입: 전복형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아동·청소년 수당의 일부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성인이 되어 지역에 정착(대학 진학, 취창업)할 때 '목돈(사회출발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강력한 족쇄(Lock-in) 효과를 낼 수 있음.
  - 공동체 자산 관리의 투명성: 카지노 수익 공개와 배분 원칙이 명확하듯, 마을 발전소나 공동체 사업 수익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간 불신을 해소해야 함.

19. Shakopee Mdewakanton Sioux Community Dividend (미국)

- 위치: 미국 미네소타 (Shakopee 부족)
- 재원 창출 방식: 카지노 및 리조트 수익 (2개 카지노, 호텔 등)
- 지속 가능성 평가: 경쟁 카지노 증가 및 온라인 도박 위협으로 불안정 요소 있음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성인 부족원에게 연간 100만 달러(\$1.08m) 상회 지급 사례 존재<sup>44)</sup>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44) <https://shakopeedakota.org/>  
<https://www.nytimes.com/2012/08/09/us/more-casinos-and-internet-gambling-threaten-shakopee-tribe.html>  
[https://en.wikipedia.org/wiki/Shakopee\\_Mdewakanton\\_Sioux\\_Community](https://en.wikipedia.org/wiki/Shakopee_Mdewakanton_Sioux_Community)

- 추가 설명 및 검증:
  - 미니애폴리스 인근의 유리한 입지 조건 덕분에 카지노 수익이 막대하여, 부족원 1인당 연간 배당금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 리치' 부족 사례임. 그러나 최근 주변 주의 카지노 합법화와 온라인 도박 성행으로 수익 모델의 위협을 느끼고 리조트, 골프장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임. 지나친 현금 지급이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됨. (관련 근거: NY Times, Star Tribune)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재원 포트폴리오 다각화: 특정 자원(예: 태양광)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함. 기술 변화나 정책 변경(REC<sup>45</sup>)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해 전복도는 바이오매스, 스마트팜 임대 수익, 관광 수입 등으로 '기본소득 재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함.
  - '일하는 기본소득' 문화 조성: 막대한 불로소득이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 전복형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니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 활동(환경 정화, 마을 돌봄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급여' 성격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활동성을 유지시켜야 함.

## 20. Quapaw Tribe Per Capita (미국)

- 위치: 미국 오클라호마 (Quapaw 부족)
- 재원 창출 방식: 카지노 리조트 수익 (게이밍, 호텔, 골프 등)
- 지속 가능성 평가: 직접 고용 및 경제 영향력이 커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부족 기업 수익 공유 및 지역 경제 기여<sup>46)</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Quapaw 부족은 카지노 수익을 바탕으로 소고기 가공 공장, 온실, 커피 로

45)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약자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

46) KlasRobinson Q.E.D. (2012, May 15). Quapaw Tribe of Oklahoma: Economic impact of Downstream Casino Resort. Bureau of Indian Affairs.  
<https://www.bia.gov/sites/default/files/dup/assets/as-ia/raca/pdf/14%20-%20Quapaw%20Tribe.pdf>

스팅 등 다양한 '부족 기업(Tribal Enterprise)'을 설립함. 배당금 지급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진 모범 사례임. 수익을 소비재로 탕진하지 않고 생산 수단에 재투자함.<sup>47)</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기본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기본소득 재원이 되는 수익 사업(예: 태양광 유지보수, 마을기업) 자체가 주민들의 일자리가 되어야 함. 전복도는 기본소득을 통해 형성된 구매력이 지역 내 2차, 3차 산업(가공, 서비스)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기본소득을 연동해야 함.
  - 식량 주권과 연계: Quapaw 부족이 소고기 공장을 운영하듯, 전복은 '농도(農道)'로서의 강점을 살려 농산물 가공 유통 센터를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임.

## 21. Citizen Potawatomi Nation Dividend

- 위치: 미국 오클라호마 (Potawatomi 부족)
- 재원 창출 방식: 카지노 순 수익의 48%를 할당함
- 지속 가능성 평가: 부족 총회 투표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되므로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1998년부터 시작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등록 부족원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며 과세 대상임<sup>48)</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Citizen Potawatomi Nation(CPN)은 부족 헌법과 예산 위원회를 통해 카지노 수익(Grand Casino Hotel & Resort 등)의 사용처를 엄격히 결정함. 주목할 점은 수익의 전액을 배당하지 않고, 약 48%는 부족원 배당(Per Capita)으로, 나머지는 재투자 및 정부 서비스(의료, 교육)에 할당한다는 점임. 이는 배당금이 '공돈'이 아니라 부족의 주주로서 받는 정당한 이익임을 명확히 하며,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함.

47) KlasRobinson Q.E.D. (2012, May 15). Quapaw Tribe of Oklahoma: Economic impact of Downstream Casino Resort. Bureau of Indian Affairs.

<https://www.bia.gov/sites/default/files/dup/assets/as-ia/raca/pdf/14%20-%20Quapaw%20Tribe.pdf>

48) <https://www.potawatomi.org/> ;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_Potawatomi\\_Nation](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_Potawatomi_Nation)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배당률 결정: CPN은 배당 비율(48%)을 부족 총회 투표로 결정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함. 전복형 기본소득(특히 새만금 태양광 수익 공유 모델) 도입 시, 발전 수익의 몇 퍼센트를 주민에게 배당하고 얼마를 재투자할지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도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과세 문제의 선제적 검토: 미국 부족 배당금은 과세 대상임. 한국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이나 햇빛연금이 '기타 소득'인지 '배당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져 고령 농민에게 불리할 수 있음. 전북도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조항 신설이나 건보료 감면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함.

## 22. Macau Wealth Partaking Scheme

- 위치: 마카오
- 재원 창출 방식: 정부 예산 (사실상 카지노 게임 산업 수익)
- 지속 가능성 평가: 연간 정책으로 매년 연장되어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주민 ID 소지자에게 연간 현금을 지급하여 인플레이션 완화를 도모함<sup>49)</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카지노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재정 흑자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부의 분배 계획(Wealth Partaking Scheme)'을 시행 중임. 영구 거주민과 비영구 거주민 모두에게 매년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함(2024년 기준 영구 거주민 10,000 파타카, 약 170만 원).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 생활고를 덜어주고, 도박 산업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sup>50)</sup>

49) [https://en.wikipedia.org/wiki/Wealth\\_Partaking\\_Scheme](https://en.wikipedia.org/wiki/Wealth_Partaking_Scheme) ;  
<https://asgam.com/2021/04/12/macau-government-to-expedite-wealth-partaking-scheme-in-2021/>

50) <https://basicincome.org/topic/wealth-partaking-scheme/> ;  
<https://d-nb.info/1042713464/34>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특정 산업 수익의 사회적 환원: 마카오는 카지노 수익을 재원으로 함. 전복에는 '새만금 카지노' 유치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음. 만약 내국인 출입이 제한된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그 막대한 세수와 기금을 전복 도민 전체 (혹은 농촌 거주민)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정하는 '전복형 이익 공유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임.
  - 물가 상승에 대한 보전책: 마카오 모델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방어임. 농촌기본소득 역시 유가 상승이나 농자재값 폭등 시 농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농가 경영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농업 보조금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23. Kuwait Annual Citizen Grant

- 위치: 쿠웨이트
- 재원 창출 방식: 석유 수익 잉여 (기록적 유가 상승 시기)
- 지속 가능성 평가: 유가 변동에 의존하고 일회성이 강해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2004년 등 간헐적으로 운영됨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시민 1인당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공무원 급여 인상을 대체함<sup>51)</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쿠웨이트는 고유가로 재정 흑자가 발생할 때 국왕의 칙령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보너스(Amiri Grant)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2011년에도 '아랍의 봄'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1,000 디나르(약 400만 원)와 무료 식량 배급을 실시함. 그러나 이는 제도화된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통치권 유지를 위한 시혜적 성격이 강하며, 유가 하락 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일회성 포퓰리즘 경계: 쿠웨이트 사례는 제도화되지 않은 현금 살포의 한계를 보여줌. 전복형 기본소득은 선거철에만 반짝 지급되는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됨. 반드시 조례에 지급 주기와 금액 산정 방식을 명시하여 도

51) Deseret News. *Kuwaitis get oil bonus*. 2004.11.01.

<https://www.deseret.com/2004/11/1/19858947/kuwaitis-get-oil-bonus/>

<https://www.kuna.net.kw/ArticleDetails.aspx?id=2138389&language=en>

지사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지속되도록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재정 흑자의 적립 원칙: 예상보다 많은 세수나 발전 수익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바로 현금으로 나누어주기보다는 '기금'에 적립하여 흉년이나 발전 수익이 저조한 해를 대비하는 '평탄화(Smoothing) 전략'을 수립해야 함.

#### 24.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Dividend Proposal

- 위치: 노르웨이
- 재원 창출 방식: 석유·가스 수익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 지속 가능성 평가: 환경·사회 고려 및 윤리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1990년 설립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연 3% 예상 수익 내에서만 정부 지출을 한정하여 미래 세대를 보호함<sup>52)</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로, 석유 수익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투자 수익의 일부(약 3%)만 정부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재정 준칙을 철저히 지킴. 직접적인 현금 배당(Citizen's Dividend) 제안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지만, 현재는 간접적인 복지 서비스 확충과 미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수함. 이는 '자원의 저주'를 피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임.<sup>53)</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전복형 미래세대 기금 조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수익을 당장 농촌 노인 수당

52) <https://www.nbim.no/en/about-us/about-the-fund/>  
<https://www.nbim.no/en/news-and-insights/submissions-to-ministry/2025/review-of-norges-banks-management-of-the-government-pension-fund-global/>  
<https://www.lifeinnorway.net/oil-fund-facts/#:~:text=The%20fund's%20returns%20have%20made%20significant%20contributions,supporting%20various%20public%20services%20and%20welfare%20programs> ; <https://namu.wiki/w/자원의%20저주> ;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o-benefit-from-plenty-lessons-from-chile-and-norway\\_238030862800.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o-benefit-from-plenty-lessons-from-chile-and-norway_238030862800.html)  
<https://eiti.org/documents/facing-resource-curse-norways-oil-development-program>

53) <https://www.nbim.no/en/news-and-insights/submissions-to-ministry/2025/review-of-norges-banks-management-of-the-government-pension-fund-global/>

으로 다 쓰는 것은 근시안적임. 노르웨이처럼 수익의 일정 비율(예: 50%)은 '전북 미래 농업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 수익으로 청년 농부 육성과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재투자해야 함. 이것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임.

- 윤리적 투자 가이드라인: 전북도가 조성한 기금은 화석연료 기업이나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ESG 투자 원칙'을 천명해야 함. 이는 '청정 전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여줄 것임.

## 25. Ecuador Resource Revenue Sharing

- 위치: 에콰도르
- 자원 창출 방식: 광업 세금·로열티 및 신규 세금
- 지속 가능성 평가: 불법 광업 대응 재원으로 활용되어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자원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여 채굴 산업 수용성을 높임<sup>54)</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에콰도르는 광업법을 통해 정부가 징수한 광물 로열티의 60%를 채굴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규정함. 이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것을 무마하고, 불법 채굴 대신 합법적 기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임.<sup>55)</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모델 시사점:
  - 주민 수용성 확보 수단: 전북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보다 더 강력한 '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당(지역 가중치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대 여론을 찬성으로 전환

54) <https://ideas.repec.org/p/zbw/diedps/152016.html>: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3, November 30). Ecuador - Mining.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ecuador-mining>

55) <https://corralrosales.com/en/amendments-to-general-regulations-of-the-mining-law/>  
<https://eiti.org/countries/ecuador>

시켜야 함.

- 불법/난개발 방지: 에콰도르가 불법 광업을 막기 위해 제도를 양성화했듯, 전북도 난립하는 소규모 태양광 업자들을 통제하고, 주민 참여형 공공 주도 대규모 단지로 유도하여 체계적인 수익 관리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함.

## 26. Mexico Resource Revenue Sharing

- 위치: 멕시코
- 자원 창출 방식: 석유·탄화수소 생산 및 수출 세금
- 지속 가능성 평가: 지표 기반 공유 공식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연방 세수 공유 기금을 통해 지방으로 환원함<sup>56)</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멕시코는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수익과 석유세를 연방 정부가 걷은 뒤, '재정 조정법'에 따른 복잡한 공식을 통해 주(State)와 시(Municipality) 정부에 교부금 형태로 배분함. 이는 자원이 나지 않는 가난한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재정 균형 장치 역할을 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모델 시사점:
  -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는 군산, 부안에만 수익이 집중되면 전북 내 다른 시군(무주, 진안, 장수 등)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 전북도는 멕시코 모델을 참조하여, 재생에너지 수익을 '전북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통합 관리하고, 인구 소멸 지수가 높은 내륙 산간 지역에 더 많은 기본소득 재원을 배분하는 재정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중앙정부와의 분권 협상: 현재 에너지 관련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으로 귀속됨. 전북도는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역 자원 시설세 등의 세율을 높이거나 지방 귀속 비율을 높이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농촌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으로 삼아야 함.

---

56) [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12/05/WPM\\_46.pdf](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12/05/WPM_46.pdf)  
[https://api.resourcegovernanceindex.org/system/documents/documents/000/000/505/original/2021\\_RGI\\_Mexico\\_mining\\_profile\\_English.pdf?1631086355](https://api.resourcegovernanceindex.org/system/documents/documents/000/000/505/original/2021_RGI_Mexico_mining_profile_English.pdf?1631086355)

## 27. Uganda Resource Revenue Sharing

- 위치: 우간다
- 자원 창출 방식: 석유·가스 수익 지표 기반 공유
- 지속 가능성 평가: RGI(Resource Governance Index, 자원거버넌스 지수) 점수가 개선 중이며 안정적임<sup>57)</sup>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지역 환원 공식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함<sup>58)</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우간다는 알버트 호수 유전 개발을 앞두고 '공공재정관리법'을 제정하여 석유 로열티의 6%를 생산 지역 지방 정부에 배분하도록 명시함. 아직 본격적인 생산 전이지만, 법적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기대를 관리하고 있음.<sup>59)</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선제적 입법의 중요성: 우간다가 생산 전에 법을 만들었듯, 전복도는 새만금 수변도시나 대규모 풍력 단지가 완공되기 전에 '이익 공유 및 기본소득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함. 수익이 발생한 뒤에 나누려 하면 이해관계자 간 분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음.
  - 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개발도상국인 우간다도 투명성(EITI<sup>60)</sup> 가입 등을 강조함. 전복형 기본소득 기금 운용 내역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57)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resource-governance-index-drives-reform-uganda>  
58)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2021). Uganda: Oil and gas (2021 Resource Governance Index). <https://resourcegovernanceindex.org/country-profiles/UGA/oil-gas> ; <https://www.local2030.org/library/221/Natural-Resource-Revenue-Sharing.pdf>

59)

[https://www.ugandainvest.go.ug/wp-content/uploads/2016/02/Uganda\\_Public\\_Finance\\_Management\\_Act\\_2015\\_3.pdf](https://www.ugandainvest.go.ug/wp-content/uploads/2016/02/Uganda_Public_Finance_Management_Act_2015_3.pdf) 75조 참조(THE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2015).

60)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EITI, 추출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기구로, 석유, 가스 및 광물 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EITI는 채굴 부문의 주요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28. Kazakhstan Oil Fund Dividend

- 위치: 카자흐스탄
- 재원 창출 방식: 석유·가스·광물 세금 잉여 수익
- 지속 가능성 평가: 안정화 기금 역할을 하며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00년 설립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598억 달러 자산 보유, 가격 변동 완화 역할<sup>61)</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카자흐스탄 국부펀드(Samruk-Kazyna 등)는 최근 2024년부터 '국민 어린이 펀드' 프로그램을 시작함. 국부펀드 연간 투자 수익의 50%를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특별 계좌에 적립해주고, 18세가 되면 주거비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임.<sup>62)</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아동·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카자흐스탄의 아동 펀드 모델은 전복 농촌의 미래 세대 육성에 완벽한 벤치마킹 대상임. 전복형 기본소득의 일부를 떼어 농촌 거주 아동에게 '전복 꿈나무 계좌'를 만들어주고, 20년간 복리로 적립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 정착 자금으로 준다면 인구 유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족쇄(Lock-in effect)가 될 것임.
  - 자산 기반 복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청년들이 자산(주택, 창업 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립 지원임.

## 29. Zambia Mining Revenue Sharing

- 위치: 잠비아
- 재원 창출 방식: 광업 세금·로열티의 국가 예산 통합

61) <https://www.investopedia.com/terms/k/kazakhstan-national-fund.asp>

62)

<https://astanatimes.com/2023/09/kazakhstans-national-fund-to-allocate-funds-to-children/>

- 지속 가능성 평가: EITI 점수가 높아 투명성이 강화됨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지역으로 직접 이전되지 않고 국내 자원 동원에 활용됨<sup>63)</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잠비아는 아프리카 2위의 구리 생산국이나, 광산 수익을 지역에 직접 배분하는 제도는 미흡함. 대신 중앙정부 예산으로 흡수하여 국가 전체 인프라 투자에 사용함. 최근에는 광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현금 혜택은 적은 편임. (관련 자료: Zambia EITI Report)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간접 투자 vs 직접 배당의 균형: 잠비아처럼 수익을 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만 쓰면 주민들의 체감도는 낮음. 전복도는 농촌 개발 예산(SOC)과 주민 기본소득(현금) 간의 황금 비율(예: 7:3)을 찾아야 함. 인프라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한국 농촌 상황에서는 잠비아 모델보다는 직접 배당 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민 만족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임.
  - CSR의 제도화: 잠비아의 CSR 의무화 시도처럼, 전복에 입주하는 대기업(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 등)에게 지역 공헌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거나 세제 혜택과 연계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확충해야 함.

#### 30. Ghana Heritage Fund Cash Transfer

- 위치: 가나
- 자원 창출 방식: 석유 수익의 30% 이상을 할당함
- 지속 가능성 평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벤치마크 수익 후 잔여분을 분배하며 공공의 지지를 받음<sup>64)</sup>

63) <https://eiti.org/countries/zambia>

6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9/11/using-extractive>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 추가 설명 및 검증:

○ 가나는 2011년 석유수익관리법(PRMA)을 제정하여 석유 수익의 일부를 '가나 헤리티지 펀드(Ghana Heritage Fund)'로 적립함. 이는 자원 고갈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임.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경제 위기 때마다 이 펀드를 털어 쓰자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기금의 독립성 유지가 핵심 이슈임. 일부 시민단체는 이 기금 수익을 활용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sup>65)</sup>

###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정치적 외풍 차단 장치: 가나의 사례는 기금이 쌓이면 정치인들이 이를 단기 부양책에 쓰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짐을 보여줌. 전복형 기본소득 기금은 '특별법'이나 '기금 운용 조례'에 사용 목적을 엄격히 제한(예: 오직 주민 배당과 미래 투자에만 사용 가능)하여, 도지사가 바뀌거나 재정이 어렵더라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잠금 장치(Lock-box)'를 마련해야 함.

○ 시민 사회의 감시: 가나의 시민단체들이 기금 방어에 앞장서듯,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NGO)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감시단'을 구성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게 해야 함.

## 31. Timor-Leste Petroleum Fund Dividend

- 위치: 동티모르
- 재원 창출 방식: 해외 석유·가스 수익을 적립함 (\$18 billion 규모)
- 지속 가능성 평가: 생산 감소 및 2030년대 고갈 위험으로 인해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2000년대 설립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정부 지출을 한정하고 인간·물리 자본 투자를 강조함<sup>66)</sup>

---

-revenues-for-sustainable-development\_cd22e52c/a9332691-en.pdf

65) <https://www.bog.gov.gh/ghana-petroleum-funds/about-petroleum-funds/>  
<https://bristoluniversitypressdigital.com/gsc/view/journals/gscj/4/2/article-p208.xml>

6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imor-Leste's opportunity to turn its wealth into economic development. 2025.06.1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6/10/cf-timor-lestes-opportunity-to-turn-its-wealth-into-economic-development> ;

[https://en.wikipedia.org/wiki/Timor-Leste\\_Petroleum\\_Fund](https://en.wikipedia.org/wiki/Timor-Leste_Petroleum_Fund)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동티모르 석유기금(Petroleum Fund)은 노르웨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 예산의 약 80~90%를 총당하는 절대적인 재원임. '배당(Dividend)'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알래스카처럼 주민에게 직접 현금을 쫓아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정부 재정으로 이전되어 무상 의료, 교육, 인프라 건설 등 간접적 혜택과 보훈 연금 등으로 분배되는 구조임. 현재 유전 고갈이 임박해지면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비석유 부문 경제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sup>67)</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단일 자원 의존의 위험성 회피: 동티모르 사례는 특정 자원(석유)에만 의존하는 재정 구조가 자원 고갈 시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전복형 기본소득 역시 '태양광'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됨. '재원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통해 태양광 수익, 풍력 수익, 바이오매스, 농촌 관광세, 지역 자원 시설세 등을 결합하여, 특정 에너지원의 수익성이 떨어져도(예: REC 가격 하락)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sup>68)</sup>
  - 인적 자본 투자로의 전환: 자원 수익을 단순 소비형 현금으로만 소진하지 말고, 농촌의 교육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여 자원이 고갈된 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길러야 함을 시사함.

### 32. Peru Canon Minero Revenue Sharing

- 위치: 페루
- 재원 창출 방식: 광업·석유·가스 수익의 50%를 지역에 분배함 (로열티·캐논)
- 지속 가능성 평가: 2001년 법률 기반 및 투명성 포털 운영으로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지방 정부와 대학에 할당되어 사회·인프라 투자에 사용됨<sup>69)</sup>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페루의 '캐논(Canon)' 제도는 채굴 산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를 해당 자원이 추출된 지역(주/지자체)으로 직접 이전하는 제도

67) [https://gropedia.com/page/timor\\_leste\\_petroleum\\_fund](https://gropedia.com/page/timor_leste_petroleum_fund)

68) [https://gropedia.com/page/timor\\_leste\\_petroleum\\_fund](https://gropedia.com/page/timor_leste_petroleum_fund)

69) <https://eiti.org/countries/peru>

임. 이는 자원 개발의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 광산 개발에 대한 반감을 줄이려는 목적임.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극심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의 행정 역량 부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패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음(관련 자료: OECD Regional Development Reviews: Peru).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공간적 형평성(Spatial Equity) 확보: 전복의 경우 새만금(군산, 김제, 부안)에 재생에너지 수익이 집중될 가능성이 큼. 페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익의 일정 부분은 생산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하되, 나머지 상당 부분은 '전복 농촌 상생 기금'으로 적립하여 자원이 부족한 동부 산악권(무주, 진안, 장수)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재분배하는 '광역 단위 이익 공유 시스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
  - 지자체 기금 운용 역량 강화: 막대한 수익금이 들어와도 이를 운용할 역량이 없으면 낭비됨. 전복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기금 운용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해야 함.

### 33. Colombia Royalties Revenue Sharing

- 위치: 콜롬비아
- 재원 창출 방식: 천연자원 수익 로열티
- 지속 가능성 평가: 자원의 저주 증거 및 효율성 저하 문제로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2012년 개혁 이후 지속)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지방 지출 효율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교육·의료 서비스 저하 우려 존재<sup>70)</sup>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콜롬비아는 기존 로열티 제도가 생산 지역에만 부를 편중시키고 부패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2년 '일반 로열티 시스템(SGR)'으로 개혁을 단행함. 이를 통해 자원 비생산 지역에도 로열티를 배분하여 빈곤 감소와 지역 개발을 도모함. 과학기술 혁신 기금 등에 로열티의 10%를 의무 할당하는 등 수익금을 미래 동력 확보에 쓰려는 노력이 특징적임

70) Ayala-García, J., & Dall'erba, S. (2021). The natural resource curse: Evidence from the Colombian municipalities. *Papers in Regional Science*, 100(2), 581-603. ;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reforming-colombias-extractive-sector-royalty-distributions-key-changes-and-coronavirus>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기본소득과 공공 서비스의 균형: 콜롬비아 사례에서 로열티 수입이 늘었음에도 공공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은, 현금 지급이 기존 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적임. 전복형 농촌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서비스 +  $\alpha$ (알파)'로 설계되어야지, 보건소 예산이나 농로 포장 예산을 깎아서 현금으로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방식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R&D) 연계: 콜롬비아처럼 자원 수익의 일부를 '농업 혁신 R&D'에 투자해야 함. 전복의 스마트팜, 종자 산업, 푸드테크 기술 개발에 기금을 투입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농민 소득 증대 방안임.

#### 34. Basic Income Grant (BIG) Pilot (Namibia)

- 위치: 나미비아 Otjivero-Omitara
- 재원 창출 방식: 교회/시민사회/후원(독일개신교권 후원 포함) 중심으로 조달
- 지속 가능성 평가: 자원 세금 기반 제안으로 안정적 수입원을 목표로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교회/시민회 후원 수준에서 종료됨
- 현재 운영 여부: 2008-2009 파일럿 종료, 제안 지속 중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모든 주민에게 월 N\$100 지급, 영양 개선 및 범죄 감소 효과 입증<sup>71)</sup>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본소득 실험 중 하나임. 루터 교회와 시민단체 연합이 주도하여 빈곤층 주민 전원에게 무조건부 현금을 지급하면서 5세 미만 아동 영양실조 42%→10%, 빈곤 관련 범죄 42%까지 감소, 학비와 진료비 납부율이 거의 100%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주민들이 소액 자본으로 소규모 창업(빵 굽기, 벽돌 만들기 등)을 시작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 그러나 집권당의 정치적 반대로 전국 확대는 무산됨<sup>72)</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정치적 리더십과 설득 논리: 파일럿이 아무리 성공해도 정치적 의지가 없으

71) [http://www.bignam.org/BIG\\_pilot.html](http://www.bignam.org/BIG_pilot.html) ;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43247> ;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72)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43247>

면 확대되지 못함. 나미비아의 교훈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전북도는 농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 정책'임을 강조하여 보수층과 도시민을 설득해야 함을 보여줌.

- 소액 자본의 창업 효과: 월 1~2만 원의 적은 돈도 극빈층에게는 생산 수단을 마련하는 자본이 됨. 전북형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농촌 노인들이 텃밭을 가꾸거나 소일거리를 늘리는 등 '생산적 복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함.

### 35. National Benefits-Sharing Framework (Canada)

- 위치: 캐나다 전국 (원주민 커뮤니티)
- 재원 창출 방식: 자연자원 개발 수익 공유 (로열티, 세금)
- 지속 가능성 평가: 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일관성이 향상되어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2025년 발표 및 운영 중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원주민 그룹과 자원 수익을 공유하여 경제적 화해를 촉진함<sup>73)</sup>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캐나다 연방 정부는 원주민(First Nations, Inuit, Metis)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원 개발 이익을 원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시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 기존의 파편화된 계약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수익 공유 틀을 마련함으로써, 원주민 정부의 재정 자립을 돕고 자원 개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전략임.<sup>74)</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모델 시사점:
  -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접근: 캐나다가 원주민의 '토지권'을 인정하듯, 전북도는 농민과 농촌 거주민이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고 식량을 안보하는 '공익적 기여'에 대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해야 함. 이는 시혜적 복지 논쟁을 넘어설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됨.
  -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 요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익 공유 방식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 에너지 정의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

73) <https://natural-resources.canada.ca/natural-resources-indigenous-peoples/national-benefits-sharing-framework> ;

<https://www.iea.org/policies/18033-canada-national-benefits-sharing-framework>

74)

<https://natural-resources.canada.ca/natural-resources-indigenous-peoples/national-benefits-sharing-framework>

해야 함. 전복도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이를 국가 표준으로 격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36. First Nations Resource Revenue Sharing (Ontario)

- 위치: 캐나다 온타리오
- 자원 창출 방식: 산림, 광업, 재생에너지 수익 (산림 45%, 광업 40% 등 공유)
- 지속 가능성 평가: 협정 기반으로 지속적 자원 개발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2020년 시작되어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원주민 커뮤니티에 수익을 분배하여 경제 개발을 지원함<sup>75)</sup>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온타리오주는 3개의 주요 원주민 부족 협의회(Grand Council Treaty #3 등)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서 걷히는 산림 수입의 45%, 광업세 및 로열티의 40% 이상을 원주민 정부와 공유함. 이는 원주민들이 자원 관리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며, 공유된 수익은 지역 사회의 교육, 보건, 문화 보존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됨.<sup>76)</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구체적인 배분 비율의 명문화: 온타리오 사례처럼 '산림 45%, 광업 40%'와 같이 명확한 수치를 조례에 규정해야 함. 전복형 모델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의 30%, 풍력 발전 수익의 20%' 등으로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관리해야 함.
  - 자율적 사용권 보장: 공유된 자원의 사용처를 도청이 간섭하지 않고, 읍·면 단위 마을 자치회가 스스로 결정(도로 포장 vs 노인 급식 vs 장학금 등)하게 해야 함.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장이자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임.

### 37. Economic Development Agreements for Mining (BC)

- 위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75) <http://www.ontario.ca/page/resource-revenue-sharing>

76) <http://www.ontario.ca/page/resource-revenue-sharing>

- 재원 창출 방식: 광업 세금 수익 공유 (신규 광산 및 확장 프로젝트)
- 지속 가능성 평가: 세금 기반으로 경제 기여도가 높아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원주민 그룹과 광업 세금 수익을 공유하는 정부 간 계약(G2G) 모델<sup>77)</sup>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는 광산 프로젝트별로 원주민과 '경제 개발 협정(EDA)'을 체결하여 광물세(Mineral Tax) 수익을 공유함. 이는 프로젝트 단위의 개별 계약이므로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설계가 가능함. 이를 통해 원주민들은 광산 개발의 파트너가 되며, 개발 지연 리스크가 줄어들어 기업에게도 이득이 됨<sup>78)</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프로젝트별 맞춤형 협약: 전북 내에서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름. 서남권 해상 풍력, 새만금 태양광, 동부권 산림 자원 등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주민-기업-지자체 3자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례로 뒷받침해야 함.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현장 맞춤형 이익 공유 모델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간 협력(G2G): BC주 정부와 원주민 정부 간의 계약처럼, 전북특별자치도(광역)와 시·군(기초)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재정 분담 협약이 선행되어야 농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실행이 가능함.

### 38. Forestry Revenue Sharing Agreements (Canada)

- 위치: 캐나다 (원주민 그룹)
- 재원 창출 방식: 산림 자원 추출 수익 공유
- 지속 가능성 평가: 자원 추출 효율성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아 다소 불안

<sup>77)</sup>

[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natural-resource-stewardship/consulting-with-first-nations/first-nations-negotiations/economic-and-community-development-agreements](http://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natural-resource-stewardship/consulting-with-first-nations/first-nations-negotiations/economic-and-community-development-agreements)  
 Indigenous Corporate Training Inc. (2013). Resource revenue sharing and Aboriginal peoples. <https://www.ictinc.ca/blog/resource-revenue-sharing-and-aboriginal-peoples>

<sup>78)</sup>

[https://news.gov.bc.ca/factsheets/province-first-nations-pursue-economic-development?utm\\_source=chatgpt.com](https://news.gov.bc.ca/factsheets/province-first-nations-pursue-economic-development?utm_source=chatgpt.com)

## 정합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지방 정부와 원주민 간 경제 혜택 공유 모델<sup>79)</sup>

###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검증 및 추가 설명: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산림 수익 공유는 벌목권 수수료(Stumpage fees)의 일부를 원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임. 하지만 목재 가격 변동이나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수익이 들쭉날쭉하고, 배분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음. 최근에는 단순 수익 공유를 넘어 산림 관리권 자체를 원주민에게 이양하는 추세임<sup>80)</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산림 자원의 재발견: 전복의 동부 산악권(진안, 무주, 장수)은 산림 자원이 풍부함. 단순히 나무를 베는 수익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Forest Carbon Offset)' 판매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함. 숲을 보존하는 행위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의 확장판이 될 수 있음.<sup>81)</sup>
  - 행정 절차의 간소화: 캐나다 사례의 비판점(복잡한 절차)을 반면교사 삼아, 산림청이나 도청을 거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면 즉시 마을 기금 계좌로 입금되는 '자동 이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39. Basic Income Guarantee in Rural Japan

- 위치: 일본 농촌 지역
- 재원 창출 방식: 농촌 기본소득 보장 (지역 자원 활용 제안)
- 지속 가능성 평가: 제안 단계로 실제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운영 여부: 제안 중임
- 분류: 공동사업형
- 근거/메모: 보편적, 무조건적, 평생 월 현금 이전을 목표로 함<sup>82)</sup>

79) Brink, M. Impacts of Forestry Consultation and Revenue Sharing Agreements on First Nations community wellbeing: Outcomes in British Columbia.

80)

<https://www2.gov.bc.ca/gov/content/industry/forestry/forest-tenures/timber-harvesting-rights/first-nations-woodland-licence>

81)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는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payments-ecosystem-services-getting-started>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일본의 학자들과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모델로, '한계취락(소멸 위기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보조금을 농촌 거주민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함. 이는 농업 생산물에 대한 보조가 아닌 '농촌 거주'라는 행위 자체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직불금 개편의 논리적 근거: 현재 한국의 공익형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비례하거나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필수임. 일본의 제안처럼 이를 '농촌 거주 수당'으로 과감히 개편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은퇴 농민이나 귀촌 청년에게도 지급해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음. 전북도는 중앙정부에 직불금 제도의 유연한 적용(선택적 직불금의 기본소득화)을 건의하는 시범 지역이 되어야 함.
  - 국토 보전의 대가: 농촌 주민은 국토를 관리하고 경관을 유지하는 '공공 관리인' 역할을 함. 전복형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국토 관리 용역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함.

40. Local Resources for Resilient Future Initiatives (Japan)

- 위치: 일본 (농촌 및 지역)
- 재원 창출 방식: 차, 대나무, 해초 등 전통 자원 활용 (현대 기술 결합)
- 지속 가능성 평가: 지역 자원 기반 협력 사업으로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25년 기준 운영 중임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지역 자원과 기술 융합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함<sup>83)</sup>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82) Okanouchi, T. (2014). The Idea of Basic Income Guarantee in Rural Japan. In Paper for ARSA Conference in Laos.  
<https://takunseminar.ws.hosei.ac.jp/wp/wp-content/uploads/2014/09/Paper-for-ARSA-2014-revised-version-by-OKANOUCI.pdf>

83)  
<http://weforum.org/stories/2025/06/japan-local-resources-power-resilient-future-through-tradition-and-innovation/>

- 추가 설명 및 검증:
  - 일본 지방 창생(Local Revital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쇠락하는 지방의 고유 자원(차, 목재 등)에 바이오 테크나 IT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 사회 유지 비용으로 쓰는 모델임. 예를 들어, 방치된 대나무 숲을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해 수익을 내고 산림도 정비하는 방식임.<sup>84)</sup> 일본에서는 지역 자원 수익을 주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관련 논의는 제안·담론·실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음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특화 자원형 기본소득: 전복의 순창(장류), 고창(복분자/장어), 임실(치즈) 등은 이미 특화 자원이 있음. 이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 공헌세'나 기금으로 걷어 해당 주민 전체에게 배당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 기업 수익이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될 때, 기업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높아짐.
  - 기술 기반 자원화: 전복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여, 농촌의 폐기물(뽕짚, 축산 분뇨)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고 여기서 나오는 매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순환 경제형 기본소득' 모델을 실증해야 함.

#### 41. Taiwan Universal Cash Payment

- 위치: 대만 전국
- 재원 창출 방식: 세금 잉여금 및 정부 예산 (경제 불확실성 대응)
- 지속 가능성 평가: 일회성이며 경제 상황에 의존하여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2023년 첫 지급, 2025년 두 번째 운영 중
- 분류: 공공지원형
- 근거/메모: 모든 시민에게 NT\$6,000 일회성 지급<sup>85)</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대만 정부는 2022년 초과 세수(Tax Surplus)가 발생하자 이를 '경제 성장

84)

<http://weforum.org/stories/2025/06/japan-local-resources-power-resilient-future-through-tradition-and-innovation/>

85) 첫번째 지급 사례 <https://international.thenewslens.com/article/180994?plan/> ; 두번째 지급 사례 <https://www.immigration.gov.tw/5475/5478/141457/141990/400936/>

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현금(약 26만 원)으로 지급함. 이는 국가 재정 흑자를 빚 갚는 데만 쓰지 않고 시민 배당으로 돌린 사례로,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평가받음. (관련 자료: Taipei Times)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초과 세수의 환원 법제화: 한국 지자체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전북도는 결산 후 남는 잉여금의 일정 비율(예: 30%)을 다음 연도 추경이나 도로 포장에 쓰지 않고, '도민 배당 기금'으로 적립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함. 이는 예측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음.
  - 경제 충격 완화 기제: 대만처럼 경제 침체기나 고물가 시기에 적립된 기금을 풀어 도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도민의 구매력을 보전하는 강력한 경기 대응책이 됨.

## 42. UBI Taiwan Single-Parent Basic Income Pilot

- 위치: 대만
- 재원 창출 방식: 민간 및 정부 지원 (기부 등)
- 지속 가능성 평가: 파일럿 단계로 불안정함
- 현재 운영 여부: 2025년 중간단계 도달, 운영 중
- 분류: 민간기부형
- 근거/메모: 한부모 가구 대상 기본소득 실험<sup>86)</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대만의 기본소득 단체인 'UBI Taiwan'이 주도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 가구에 무조건부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임.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엄격한 소득 심사 등)를 보완하고, 한부모의 근로 의욕 고취와 아동 양육 환경 개선 효과를 입증하려 함.<sup>87)</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86) Prochazka, T. UBI Taiwan's single-parent basic income reaches a new 'milestone'. Basic Income Earth Network. 2025.02.07.

<https://basicincome.org/news/2025/02/ubi-taiwans-single-parent-basic-income-reaches-a-new-milestone/>

87) <https://ubitaiwan.org/en/>

- 대만에서는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는 없으나, 시민사회 주도로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 현금 지급 실험이 제한적으로 구상되었지만 이는 법·예산 기반의 정책 사례가 아닌 소규모 파일럿 실험으로, 전북도의회 연구를 위한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인구 소멸 대응의 타겟팅: 전북 농촌에는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많음. 보편적 지급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이들 위기 가구에 우선적으로 '두터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민관 협력 거버넌스: 대만 사례처럼 민간 NGO가 실험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정책 실험에 유리함. 전북도는 '전북형 기본소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 주도의 경직된 행정을 탈피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유연한 실험을 설계해야 함.

#### 43. Madhya Pradesh Universal Basic Income Pilot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기본소득 실험)

- 위치: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Madhya Pradesh), 농촌 및 부족(Tribal) 지역
- 재원 창출 방식: 국제기구(UNICEF) 및 민간·시민단체(SEWA) 협력 기반 개발 프로그램 예산
- 지속 가능성 평가: 파일럿 실험으로서 단기적 효과는 입증되었으나, 법·제도 기반이 없어 장기적 지속성은 낮음
- 현재 운영 여부: 2011~2013년 실험 종료
- 분류: 정책 실험형(공공지원·파일럿)
- 근거/메모: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영양·건강·위생·교육·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대표적 개발도상국 기본소득 실험<sup>88)</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이 시범사업은 'Madhya Pradesh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Project(MPUCT)'로 불리며, 2011년부터 약 12~18개월간 인도 중부 농촌 지역에서 시행됨. 국제기구 UNICEF와 인도 여성자영업자협회(SEWA)가 공동으로 설계·운영하여 8개 지급 마을과 12개 비교 마을, 그리고 별도의 부족(Tribal) 마을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급 마을과 비지급 마을 간의 통제집단 비교(Randomized Control) 방식으로 효과를 검증함.<sup>89)</sup>

88) <https://www.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

- 지급 방식은 무조건적·개인 단위 현금 지급으로, 초기에는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지급함.
- 총 6,000명 이상이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받았으며 기본소득 수급 가구는 정기적인 식사 확보, 깨끗한 식수 구입,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위생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됨. 또한 아동의 학교 출석률과 학용품 구매가 증가하고, 고금리 대부업 의존도가 감소함.
- 특히 노동 의욕 저하나 근로 포기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규모 농기구·가축·원자재 구입을 통한 자영활동 및 생산적 노동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기본소득 시사점:
  - 현금 이전의 ‘기초 생활 안정 효과’ 검증 사례: 인도 사례는 기본소득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식사·식수·의약품)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이는 전북 농촌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건강·복지 지출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을 시사함.
  - 정책 설계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시사점: 인도 사례는 통제집단 비교, 반복 조사, 다차원 성과 지표(영양·건강·교육·노동)를 활용한 평가 구조를 갖추고 있음. 이는 전북형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할 경우 사전·사후 비교 기반의 성과 평가 설계에 직접적인 참고 모델이 됨.
  - 한계 인식의 중요성: 다만 본 사례는 국제기구·민간 재원에 기반한 단기 실험으로, 알래스카 영구기금처럼 자립적·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갖춘 제도는 아님. 따라서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에서는 인도 사례를 ‘효과 검증용 실험 사례’로 한정하여 활용하고, 재원 설계 논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 44. 농민기본소득 (한국 경기도)

- 위치: 경기도 전체 (농민 대상)
- 재원 창출 방식: 경기도 예산 (농업 지원 예산, 농어민기회소득과 통합)
- 지속 가능성 평가: 농업·농촌 기본법과 연계되어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되어 지속 운영 중
- 분류: 일반형
- 근거/메모: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월 5~15만 원 수준 지급<sup>90)</sup>

89)

<https://www.almendron.com/tribuna/wp-content/uploads/2016/04/Report-on-Unconditional-Cash-Transfer-Pilot-Project-in-Madhya-Pradesh.pdf>

)

90) <https://farmbincome.gg.go.kr/main>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농민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공익적 가치(식량 안보, 환경 보전)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임. 기존 농민수당이 농가(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여성 농민이나 청년 농민이 소외받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단위로 지급한 점이 혁신적임.<sup>91)</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농가'에서 '개인'으로: 전북 농민수당은 아직 가구 단위 지급 성격이 강함. 경기도 모델을 따라 전북도 '농민 개별 지급'으로 전환해야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과 청년 농부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 정책 통합의 방향성: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통합 확장하듯, 전북도 농민수당, 어민수당, 육아수당 등 파편화된 현금 복지를 '전복형 통합 기본소득'이라는 큰 우산 아래로 묶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키워야 함.

45. 곡성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 재원 창출 방식: 정부·지자체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지역화폐 지급)
- 지속 가능성 평가: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TF팀 운영으로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2025년 공모 유치 준비 중이었으며 2027년까지 월 15만원 지급 계획임
- 분류: 지역재원 창출형
- 근거/메모: 농촌 자산을 활용한 이익 환원 모델을 지향하며 범군민 서명운동 등 유치 노력을 전개함<sup>92)</sup>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91) <https://farmbincome.gg.go.kr/main>

92) 강성수,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아시아경제, 2025.09.25.  
<https://news.nate.com/view/20250925n30866?mid=n1101>

- 곡성군은 인구 2만 7천 명 붕괴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선택했음. 양수발전소 유치와 연계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주민 주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향식(Bottom-up) 정책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음. (관련 근거: 곡성군청)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모델 시사점:
  - 주민 수용성과 추진 의지: 곡성군의 범군민 서명운동은 중앙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있어 강력한 무기임. 전북의 시범사업 후보지(임실, 진안 등) 역시 관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형 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스스로 역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아짐.
  - SOC 사업과 현금 복지의 연계: 양수발전소 건설이라는 대규모 SOC 사업의 보상 차원을 넘어, 해당 시설에서 나올 미래 수익을 유동화하여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SOC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전북의 대형 국책 사업(새만금 등)에 적용해야 함.

#### 46. 신안군 햇빛연금

-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 재원 창출 방식: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 (주민 참여 REC 가중치 수익금 활용)
- 지속 가능성 평가: 재생에너지 수익 기반으로 누적 재원이 증가하여 매우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2018년 시작, 조례 제정, 2019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설립, 2021년 햇빛연금 최초 지급, 2023년 햇빛아동수당 지급, 2024년 햇빛연금 지급 누적 220억 원 돌파, 기타 2025년 바람연금 지급)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입증<sup>93)</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립 시 협동조합을 통해 지분(채권) 투자를 하도록 제도화함. 투자금의 4~10배 수익을 '햇빛연금'으로 배당하며, 섬 지역 거주민 전체에게 혜택

93)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9895.html>

이 돌아가도록 설계됨. 시행 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던 신안군의 인구가 순증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둠.<sup>94)</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한국형 지역재원 창출의 표준 모델: 신안군 사례는 세금 투입 없이 지역 자원(햇빛, 바람)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가장 성공적인 모델임. 전복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시 이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외부 대기업이 독점할 수익의 일정 비율(예: 30%)을 의무적으로 주민과 공유하도록 법제화해야 함.
  -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햇빛연금을 받기 위해 도시민들이 신안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현상이 뚜렷함. 전복형 농촌기본소득 역시 실거주요건을 강화하되, 전입 즉시 혜택을 주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귀농·귀촌의 강력한 유인책(Pull Factor)으로 활용해야 함. 이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처가 될 것임.

#### 47.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위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 재원 창출 방식: 경기도 지원 재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지속 가능성 평가: 정부·지자체 예산 기반으로 2025년까지 연장되어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2022년 시작)
- 분류: 공공지원형
- 근거/메모: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큼<sup>95)</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전국 최초로 면 단위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임. 시행 후 청산면 인구가 10% 가까이 증가하고 지역 상권 매출이 급증하는 등 소멸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줌. 사용처와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 지급이 승수 효과를 높임. (관련 근거: 경기도청 보도자료)

94) 신안군.신안소식(2022 여름, Vol.83); 신안군.2024년신안군정부혁신실행계획.햇빛연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2024.4); 김주영.오병기, 재원동반기본소득모델의 사례와 전남의 대응 방향. JNI이슈리포트(2025.6.23.).

95) farmbincome.gg.go.kr/contents/page/introducepolicy2/view?contentsId=1013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https://www.gg.go.kr/>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인구 소멸 대응의 실증 데이터 확보: 연천 사례는 기본소득이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숫자로 증명함. 전복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시, 연천의 데이터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었음.
  - 지역화폐 유통의 폐쇄성 극복: 지역화폐가 해당 면 단위에서만 쓰이게 강제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살아남. 전복형 모델 역시 지급된 기본소득이 전주나 군산 등 대도시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농촌 지역(면 단위) 내에서 순환되도록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48. 영광군 에너지 공유부 기본소득

-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 재원 창출 방식: 태양광·해상풍력 등 에너지 공유부 수익 및 발전기금 기부
- 지속 가능성 평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며 2037년 목표 달성 계획을 가져 안정적인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2025년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2027년 지급 시작 목표)
- 분류: 자원수익형
- 근거/메모: 에너지 공유부 수익을 지역화폐로 지급, 군민 1인당 연 353만원 목표<sup>96)</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영광군은 한빛원전과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 중임. 바람과 햇빛을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공유부'로 규정하고, 발전 사업자로부터 개발 이익을 환수하거나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함. 2025년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음.<sup>97)</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복형 기본소득 시사점:
  - 미래 비전(Vision 2037) 제시: 단기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전략이 돋보임. 전복형 연구 역시 '2030 전복형 기본소득 플랜'과 같이 단계별(시범사업 -> 확산기

96)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16500054>

97) 영광군청 홈페이지, <https://www.yeonggwang.go.kr/>

-> 정착기) 목표와 자원 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개발 시, 영광군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바람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는 어업 보상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 수익을 영구적인 주민 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49. 익산 성당포구마을 마을자치연금

-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 자원 창출 방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수익 + 체험·숙박 사업 수익
- 지속 가능성 평가: 민관 공동협력으로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하여 안정적임
-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2021년 시작)
- 분류: 자원수익형 + 공동사업형
- 근거/메모: 고령 주민 월 10만 원 지급, 마을 수익 50% 환원함<sup>98)</sup>

#### [검증 및 시사점 분석]

- 추가 설명 및 검증:
  -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과 지자체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과 마을 체험관 운영 수익을 합쳐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 제1호 사례임. 재생에너지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므로 재정 안정성이 높음.<sup>99)</sup>
- 한국 농촌기본소득 및 전북형 기본소득 시사점:
  - 공공기관 협력(ESG) 모델의 확산: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NPS), LX공사 등의 자금을 유치하여 초기 설비 투자비 부담을 줄인 것이 성공 요인임. 전북도는 도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1사 1마을 기본소득 결연' 캠페인을 추진하여 민간 자본을 농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끌어들이어야 함.
  - 표준 조례 제정을 통한 확산: 익산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마을자치연금 조례'가 이미 제정된 바 있음. 세금을 토대로 한 대규모 시범 사업의 확산과 지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당포구마을의 소규모 마을단위 기본소득화 사례를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98) 박경철. 농촌마을 공동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영향분석. 농촌지도와개발(vol.31, No.4)2024; 김동욱,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고 연금도 받고..., 세계일보, 2021.03.29.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29513347>

99) <https://www.iksan.go.kr/> ; <https://snuacwebzine.snu.ac.kr/?p=6188>

표 4. 전세계 주요 기본소득 사업 사례

사업명	위치	재원 창출 방식	운영 여부	분류	근거/메모
Alaska Permanent Dividend Fund	알래스카, 미국	석유·광물 자원 수익 → 영구기금 적립 → 투자 수익 배당	운영 중	자원수익형	주(州) 헌법 기반, 석유 수익을 활용한 대표적 자산 환원 사례
Baltimore Young Families Success Fund	볼티모어, 미국	ARPA 연방 기금 + 자선 기부 혼합	종료됨 (2022~2024)	민간기부형	연방 코로나 구제자금 + 민간기부 혼합
Basic Income Grant (BIG) Pilot	Otjivero-Omitara, 나미비아	광업 및 어업 자원에 대한 세금 부과 (자연자원 수익 기반)	운영 중 (2008-2009 파일럿, 제안 지속)	자원수익형	모든 주민 월 N\$100 지급, 빈곤 완화, 자연자원 세금으로 재원 확보 제안
Basic Income Guarantee in Rural Japan	일본 농촌 지역	농촌 기본소득 보장 (지역 자원 활용 제안)	제안 중	공동사업형	보편적, 무조건적, 평생 월 현금 이전
Black Resilience Fund (BRF)	포틀랜드, 미국	민간 기부 기반 (비영리 Brown Hope 운영)	운영 중 (2022~2026)	민간기부형	지역사회 기반 모금, 안정성 낮음
Chicago Future Fund	시카고, 미국	민간 / 비영리 기반 기금	종료됨 (2021~2023)	기타	범죄피해자·저소득층 중심, 비영리 지원
Citizen Potawatomi Nation Dividend	오클라호마, 미국 (Potawatomi 부족)	카지노 순 수익 48% 할당	운영 중 (1998년 시작)	자원수익형	등록 부족원 분기별 지급, 과세 대상
Citizen's Account Program	사우디아라비아 전국	석유 수익 기반 경제 개혁 (보조금 절감)	운영 중 (2017년 시작)	자원수익형	저소득 시민 대상 현금 지급, 에너지 가격 상승 보상, 3.7백만 가구 등록
Colombia Royalties Revenue Sharing	콜롬비아	로열티 (자연자원 수익)	운영 중 (2003-2011 데이터)	자원수익형	지방 지출 효율성 영향, 교육·의료 서비스 저하
Community Love Fund	보스턴, 미국	자선 기금 기반 (Philanthropy)	진행 중 (1년 파일럿)	민간	지역 커뮤니티 조직 중심
Dallas Targeted Eviction Prevention Program Fund	댈러스, 미국	공공+민간 기금 혼합	종료됨	공공-민간 혼합형	주거안정 지원 기금, BI보다는 조건부지원 성격
Eastern	노스캐롤라이나	부족 카지노 수익	운영 중	자원수익형	부족 공동체 자산

사업명	위치	재원 창출 방식	운영 여부	분류	근거/메모
Band of Cherokee Indians Casino Revenue Fund	미국	배당			환원 사례
Economic Development Agreements for Mining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광업 세금 수익 공유 (신규 광산 및 확장)	운영 중	자원수익형	원주민 그룹과 광업 세금 수익 공유
Ecuador Resource Revenue Sharing	에콰도르	광업 세금·로열티 (\$1 billion in 2024) + 신규 세금	운영 중	자원수익형	55,000 직접 일자리, \$229 million 신규 세금 예상
Family Goal Fund	시카고/LA/DC/NY, 미국	민간 재단·자선 기부 기반	종료됨 (지역차이) (2020~2023)	민간기부형	도시별 다중 파일럿, 비영리 주도
First Nations Resource Revenue Sharing	온타리오, 캐나다	산림, 광업, 재생에너지 수익 (45% 산림, 40% 광업 공유)	운영 중 (2020년 시작)	자원수익형	원주민 커뮤니티에 수익 분배, 경제 개발 지원
Forestry Revenue Sharing Agreements	캐나다 (원주민 그룹)	산림 자원 추출 수익 공유	운영 중	자원수익형	지방 정부와 원주민 간 경제 혜택 공유
Ghana Heritage Fund Cash Transfer	가나	석유 수익 30% 이상 할당	운영 중 (2011년 시작)	자원수익형	벤치마크 수익 후 잔여 분배, 공공 의견 지지
GI 305 Community Fund	마이애미, 미국	민간 커뮤니티 기금 기반	운영 중	민간기부형	소규모 지역사회 기금
Ho-Chunk Nation Per Capita Payment	위스콘신, 미국 (Ho-Chunk 부족)	카지노 수익 배당	운영 중	자원수익형	부족원 대상 배당, 지역 공유자산 환원
Houston Equity Fund	휴스턴, 미국	민간 기부 기반	운영 중 (형태 다양)	민간기부형	기업·재단 후원
Human Development Fund	몽골	광물 자원 수익 → 국부펀드 적립 → 배당	운영 폐지	자원수익형	몽골 광물 자원 기반 배당형
Iran National Basic Income	이란 전국	연료 보조금 개혁 (에너지 및 식품 보조금 절감 재원)	운영 중 (2010년 시작, 지속 조정)	자원수익형	모든 시민 대상 월 약 \$40 지급, 보조금 대체, 빈곤 완화 목적, 인플레이션 증가 부작용

사업명	위치	재원 창출 방식	운영 여부	분류	근거/메모
Kazakhstan Oil Fund Dividend	카자흐스탄	석유·가스·광물 세금 잉여 수익	운영 중 (2000년 설립)	자원수익형	\$59.8 billion 자산, 가격 변동 완화
Kuwait Annual Citizen Grant	쿠웨이트	석유 수익 잉여 (기록적 유가 상승)	운영 중 (2004년 예시, 간헐적)	자원수익형	시민 1인당 \$680 보너스, 공무원 급여 인상 대체
Local Resources for Resilient Future Initiatives	일본 (농촌 및 지역)	차, 대나무, 해초 등 전통 자원 활용 (현대 기술 결합)	운영 중 (2025년 기준)	자원수익형	지역 자원과 기술 융합으로 지속가능 발전
Macau Wealth Partaking Scheme	마카오	정부 예산 (카지노 수익 암시)	운영 중 (2008년 시작)	자원수익형	주민 ID 소지자 연간 현금 지급, 인플레이션 완화
Madhya Pradesh Universal Basic Income Pilot	마디아 프라데시주, 인도 (농촌·부족 지역)	국제기구(UNICEF) 및 시민단체(SEWA) 협력 기반 개발 프로그램 예산	종료 (2011~2013))	정책실험형	무조건적 현금 지급으로 생활 전반이 향상 되었음을 사례
Madison Forward Fund	매디슨, 미국	민간 재단·기부 기반	종료 (2022~2023)	민간기부형	지자체 협력, 외부 기부
Mexico Resource Revenue Sharing	멕시코	석유·탄화수소 생산·수출 세금	운영 중	자원수익형	연방 세수 공유 기금, 지방 환원
National Benefits-Sharing Framework	캐나다 전국 (원주민 커뮤니티)	자연자원 개발 수익 공유 (로열티, 세금)	운영 중 (2025년 발표)	자원수익형	원주민 그룹과 자원 수익 공유, 경제 화해 촉진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Dividend Proposal	노르웨이	석유·가스 수익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운영 중 (1990년 설립)	자원수익형	연 3% 예상 수익 내 정부 지출 한정, 미래 세대 보호
Peru Canon Minero Revenue Sharing	페루	광업·석유·가스 수익 50% 지역 분배 (로열티·캐논)	운영 중	자원수익형	지방 정부·대학 할당, 사회·인프라 투자
Quapaw Tribe Per Capita	오클라호마, 미국 (Quapaw 부족)	카지노 리조트 수익 (게이밍, 호텔, 골프 등)	운영 중 (2008년 시작)	자원수익형	부족 기업 수익 공유, 지역 경제 기여
Renda Basica de Cidadania	Maricá, 브라질	석유 로열티 (시 예산 대부분 석유 로열티)	운영 중 (2020년 등록 완료)	자원수익형	52,000명 대상, 월 130 reais (약 US\$64), 지역화폐

사업명	위치	재원 창출 방식	운영 여부	분류	근거/메모
					mumbuca 사용, 빈곤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Renta Dignidad	볼리비아 전국	탄화수소 세금 수익 (IDH 수익 30% 할당) + 국유화 기업 배당	운영 중 (2008년 시작)	자원수익형	60세 이상 보편적 노인 연금, 연 \$340 (무연금자) 또는 \$255 (연금 수령자)
San Francisco Housing Stability Fund	샌프란시스코, 미국	퇴거방지·주거안정 기금 (민간+공공 혼합)	종료됨	공공-민간 혼합형	주거 중심 조건부지원, BI와 차이
Shakopee Mdewakanton Sioux Community Dividend	미네소타, 미국 (Shakopee 부족)	카지노 및 리조트 수익 (2개 카지노, 호텔 등)	운영 중	자원수익형	성인 부족원 월 \$84,000 (연 \$1.08백만), 부족 주권 기반
Taiwan Universal Cash Payment	대만 전국	세금 잉여금 및 정부 예산 (경제 불확실성 대응)	운영 중 (2023년 첫 지급, 2025년 두 번째)	공공지원형	모든 시민 NT\$6,000 일회성 지급, 보편적 현금 분배
Timor-Leste Petroleum Fund Dividend	동티모르	해외 석유·가스 수익 적립 (\$18 billion)	운영 중 (2000년대 설립)	자원수익형	정부 지출 한정, 인간·물리 자본 투자 강조
UBI Taiwan Single-Parent Basic Income Pilot	대만	민간 및 정부 지원 (기부 등)	운영 중 (2025년 중간단계도달)	민간기부형	싱글 부모 가구 기본소득, 진척 강조
Uganda Resource Revenue Sharing	우간다	석유·가스 수익 지표 기반 공유	운영 중	자원수익형	지역 환원 공식, 투명성 강화
Zambia Mining Revenue Sharing	잠비아	광업 세금·로열티 국가 예산 통합	운영 중	자원수익형	지역 이전 없음, 국내 자원 동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전체 (농민 대상)	경기도 예산 (농업 지원 예산, 농어민기회소득과 통합)	운영 중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 지속)	일반형	농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농민기본소득과 통합되어 월 5-15만원 지급
곡성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라남도 곡성군	정부·지자체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지역화폐 지급)	준비 중 (2025년 공모 유치, 2027년까지 월	일반형	농촌 자산 활용 이익 환원 모델, 범군민 서명운동 등 유치 노력

사업명	위치	재원 창출 방식	운영 여부	분류	근거/메모
			15만원 지급 계획)		
신안군 햇빛연금	전라남도 신안군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 (주민 참여 REC 가중치 수익금)	운영 중 (2018년 시작, 2025년 기준 누적 220억 원)	자원수익형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연천군 청산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경기도 지원 재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중 (2022년 시작, 2025년 시행 계획)	일반형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효과
영광군 에너지 공유부 기본소득	전라남도 영광군	태양광·해상풍력 등 에너지 공유부 수익 (발전기금 기부)	운영 중 (2025년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2027년 지급 시작)	자원수익형	에너지 공유부 수익을 지역화폐로 지급, 군민 1인당 연 353만원 목표
익산 성당포구마을 연금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신재생에너지(태 양광) 발전 수익 + 체험·숙박 사업 수익	운영 중 (2021년 시작)	자원수익형 + 공동사업형	고령 주민 월 10만원 지급, 마을 수익 50% 환원

## Ⅱ. 기본소득 전세계 사례 요약

### 1. 연구 개요 및 핵심 방향성 정립

- ‘공유부’ 기반의 재원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확인

알래스카 영구기금(석유), 브라질 마리카(석유 로열티), 전남 신안(햇빛연금) 등 지속 가능성이 검증된 모델들은 모두 세금이 아닌 지역의 ‘천연자원 공유부’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원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 북이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태양광·풍력 자원 등을 도민의 공유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익 공유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함.

- 일회성 복지가 아닌 ‘지역 소멸 대응’과 ‘경제적 권리’로서의 접근

일본의 농촌 기본소득 제안이나 전남 영광군의 에너지 기본소득 비전은 단순

한 빈곤 구제를 넘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생존 전략’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하고 있음. 전북형 모델 또한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닌 ‘농촌 활력 증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정의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주민의 지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함.

## 2. 재원 조달 및 관리: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 설계 시사점

### 가. 에너지 및 자원 수익의 지역 환원 시스템 법제화

- 알래스카 및 동티모르 사례: 헌법적 보호와 기금의 독립성 확보  
알래스카와 동티모르는 자원 수익을 영구기금(Permanent Fund)에 적립하고,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배당이 지속되도록 헌법이나 법률로 기금 운용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 전북 역시 ‘전북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미래세대 기금’ 또는 ‘에너지 공유 기금’ 설치를 명문화하여,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기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오직 주민 배당과 미래 투자에만 쓰이도록 ‘잠금 장치(Lock-box)’를 마련해야 함.

-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사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의 표준화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에 지분 투자를 하고 수익(햇빛연금)을 배당받는 구조를 만들어 인구 순증의 기적을 이뤄냄. 전북은 새만금 및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이 모델을 적극 도입하되, 특정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 전체 혹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되는 ‘광역 단위 이익 공유제’로 발전시켜야 함.

- 브라질 마리카 사례: 자원 수익의 지역 화폐 의무화  
마리카 시는 석유 로열티 수익을 디지털 지역화폐 ‘뭉부카’로 지급하여, 이 막대한 자금이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순환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킴. 전북형 기본소득 또한 에너지 수익 배당금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득 보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닫힌 경제 회로(Closed Loop Economy)’를 구축해야 함.

### 나. 민간 및 기업 자원의 전략적 연계 방안

- 미국 부족(Tribes) 및 기업 상생 모델: 수익 사업의 다각화  
미국 원주민 부족들은 카지노 수익뿐만 아니라 가공 공장, 온실 등 ‘부족 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와 배당 재원을 동시에 마련하며, 기업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짐.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ESG 자금이나 대기업의 상생 기금을 유치하여 마을 발전소 설치 비용으로 활용하고, 발생 수익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익산 성당포구마을’ 식의 민관 협력 모델을 도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함.

- 나미비아 및 민간 기부 사례: 마중물 재원로서의 활용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민간 기금으로 시작되어 빈곤 감소와 창업 증가 효과를 입증했으나, 공적 자금으로 연결되지 못해 중단된 한계가 있음. 전북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모금된 민간 재원을 시범사업의 초기 마중물(Seed Money)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조례에 기반한 안정적인 공적 재원(지방세, 에너지 수익)으로 대체해 나가는 출구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함.

### 3. 지급 대상 및 방식: 인구 유입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설계

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과감한 타겟팅 및 보편성

- 연천군 청산면 사례: 면 단위 전원 지급의 인구 댐 효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면 단위 주민 전체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통해 인구가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멸 위기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함. 전북형 시범사업 역시 선별적 지급보다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면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 보편 지급’ 방식을 채택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미국 원주민(Ho-Chunk) 신탁 기금: 청년 유출 방지 족쇄 전략

Ho-Chunk 부족은 아동·청소년 몫의 배당금을 바로 주지 않고 신탁기금(Trust Fund)에 적립했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으로 지급하여 교육과 지역 정착을 유도함. 전북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아동 기본소득의 일부를 적립형으로 운용, 성인이 되어 지역에 정착할 때 ‘사회 출발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는 강력한 유인책(Lock-in

effect)으로 활용해야 함.

#### 나. 기존 복지와의 관계 및 중복 지급의 유연성

- 볼리비아 렌타 디그니다드(Renta Dignidad): 보편적 노후 보장

볼리비아는 가스전 수익을 활용해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춤. 전복 농촌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농촌 거주 노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복형 농촌 노인 기본소득'을 설계하여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재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란의 보조금 개혁 사례: 기존 혜택 축소의 위험성 경계

이란은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현금을 지급했으나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실패한 사례로 꼽힘. 전복형 모델 도입 시 기존의 농민수당이나 직불금을 선불리 통합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것은 농민 저항을 부를 수 있으므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수익 등 새로운 재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보장해야 함.

### 4. 거버넌스 및 제도화: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

#### 가.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검증 및 정치적 리더십

- 매디슨 및 나미비아 사례: 데이터와 정치적 의지의 결합

미국 매디슨시는 대학 연구팀과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나미비아는 효과 입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로 확대에 실패함. 전복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전복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인구 유입, 건강 개선, 지역 소비 증가 등의 효과를 정밀하게 계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도민을 설득하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논리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 우간다 및 가나 사례: 선제적 입법과 투명한 감시 체계

우간다는 석유 생산 전부터 수익 배분법을 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가나는 기금 전용 시도로 논란을 빚음. 전북도는 새만금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익 공유 및 기본소득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배분 원칙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기금 운용 감시단’을 운영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혁신

• 브라질 및 미국 보스턴 사례: 핀테크와 신뢰 기반 행정  
 마리카 시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나 보스턴의 신뢰 기반 지급 방식은 복잡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수혜자의 편의를 높임. 고령층이 많은 전북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신청 서류를 없애고 마을 이장을 통한 대리 신청이나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도입하며, 사용이 간편한 카드형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함.

표 5. 기본소득 사례 유형별 비교

유형	대표 사례	재원	지속성	주요 시사점
자원수익형	알래스카	석유	높음	공유부 배당
재생에너지형	신안	태양광	높음	지역 적용 가능
기부형	미국 도시	기부	낮음	확장성 한계
혼합형	몽골	광물+재정	낮음	안정화 필요

### 5. 종합 결론: 전북형 기본소득의 차별화 전략

• ‘에너지 자립’과 ‘소멸 대응’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

전세계 사례 분석 결과, 전북형 기본소득은 알래스카의 자원 배당과 일본/한국의 농촌 소멸 대응을 결합한 독창적인 모델이어야 함. 즉, 새만금과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유부’로 법제화하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거주에 대한 권리’로서 지급하는 ‘지역 자원 창출형·소멸 대응 특화 모델’로 정립되어야 함.

- 단계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선행:

공적인 모델들은 모두 장기적인 비전과 법적 기반 위에 서 있음. 전북도는 ‘시범사업(실증) → 조례 제정(제도화) → 기금 조성(재원 확보) → 전면 확대(정책)’의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재원 마련 방식(발전 수익 배분율 등)에 대한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속의 민주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4 장: 광역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및 기본소득 모형 개발

### I. 경기도의 기본소득: 보편성 실험에서 가치 보상으로의 전환

#### 1. 초기 제도화 과정과 '기본소득' 개념 정립의 진통 (민선 7기)

• 보편적 복지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조례 간 위계 정립: 경기도의회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최상위 규범인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개정을 통해 해당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됨을 명문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함. 초기에는 위원회 설치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다가 기본 조례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음.

• 개념적 혼란과 '범주형' 기본소득의 수용 논쟁: '청년기본소득(특정 연령)'과 '농민기본소득(특정 직업)' 도입 당시, 의회 내에서는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위배한다는 비판과 현실적 단계론이라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섬. 의회는 결국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범주형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정책 실험의 문을 열어 줌.

• 예산 편성 절차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사과: 농민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집행부가 근거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의회의 강력한 질타를 받았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계기가 됨. 의회는 조례 없는 예산 편성은 의회 경시 행태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사전 협의와 적법 절차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집행부의 사과를 받아냄.

#### 2.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증과 데이터 행정 (민선 7기~8기)

• 기본소득 원형(보편성)에 가장 근접한 실험의 법적 뒷받침: 경기도의회는 특정 직군이 아닌 면 단위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 유일의 지역 단위 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험을 가능하게 함. 특히 조례 심사 과정에서 고령층의 편익을 위해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연 매출 10억 등)을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주문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임.

- 비교집단(통제군) 운영을 통한 과학적 효과 검증 요구: 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에 비교주민 선정 및 사례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국가 정책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 '기회소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논의 (민선 8기)

- '기회소득'의 등장과 기존 정책과의 철학적 충돌 조정: 민선 8기에 들어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소득'이 도입되면서, 기존 기본소득과의 개념적 혼란이 발생함. 의회는 도정질문을 통해 두 정책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며 정책의 방향을 '가치 보상'으로 재정립함.

- 재정 부담에 따른 지자체 갈등과 보편 복지의 후퇴: 성남시, 고양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가 재정 부담과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 의회는 이를 두고 보편적 복지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으나, 결국 예산 감액과 선별적 지원(기회소득) 강화로 흐름이 바뀌는 양상을 보임.

## II.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개 과정: 상세

### 1. 2018~2019 년: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산

이 시기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및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한 단계

- 2018년:
  - 8월~12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2019년:
  - 3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자원봉사자 모집과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유도.
  - 8월~9월: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선정.
  - 10월~11월: 정부혁신박람회에 경기도관(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을 운영하고, 제2회 아이디어 공모전 및 영화제 공모 등을 진행.
  - 12월: 대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차년도 박람회 준비에 착수

## 2. 2020년: 코로나 19 대응(재난기본소득) 및 농민기본소득 준비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으며, 동시에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 1월~2월: 기본소득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했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마련
- 4월~5월: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홍보 포스터, 영상, 카드뉴스, 선불카드 신청 안내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또한 재난기본소득 소비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발주
- 5월~6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하여 농가조직화 및 농민교육을 담당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활동가 모집 공모를 2020년 5월에 최초 공고하고 6월에도 추가 모집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농민기본소득 활동가 교육 용역 입찰 공고도 시행하여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 농가조직화, 농민교육을 담당할 '농민기본소득 활동가' 양성에 돌입함; 이를 통해 농민 활동가들의 상호 교육·소통을 통해 마을 규약 제정 및 준수 활동 수행, 기초단위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계획함

- 6월~11월: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국토보유세,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에 대한 연구 인력을 집중 채용하며 이론적 토대를 강화
- 10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골목상권 재난기본소득) 사업 추진

### 3. 2021년: 사업의 본격화 및 다각화 (재난·농민·농촌)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과 더불어,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사회실험) 등 타겟형 기본소득 사업이 구체화된 가장 활발한 시기

- 1월~2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홍보, 외국인 신청 시스템 운영, 정산 및 통계 산출 용역이 긴급하게 진행됨. 또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 3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마련되며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 시작
- 6월~7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일정이 공고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도 지속
- 9월~10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홍보 및 콜센터 운영, 정산 용역이 진행
- 11월: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면 지역) 공모 진행

### 4. 2022년: 사업의 안착 및 연구 심화

기존에 도입된 청년, 농민,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단계

- 2월~3월: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와 기본계획 공고
- 4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선정

- 6월~7월: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
- 11월: 청년기본소득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5. 2023 년: '기회소득' 등장 및 사업 재정비

기존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장애인 기회소득 등 새로운 개념의 소득 지원 정책이 등장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단계

- 2월: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 7월:'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파일이 등장하여, 정책 기조에 새로운 소득 지원 형태(기회소득)가 추가되었음
- 8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시작
- 10월: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 논의

## 6. 2024 년: 정책의 고도화 및 확장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병행되며, 국토보유세 등 재원 마련에 대한 연구도 재개

- 1월~2월: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 4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연구용역 추진
- 7월:'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기본계획이 공고. 이는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병행되거나 개념이 확장/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줌
- 9월~12월: 농민기본소득 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농촌기본소득 정책효과 분

석, 청년기본소득 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7. 2025년 (예정 및 계획): 지속적인 운영 및 평가

- 1월~2월: 2025년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및 지침 마련
- 3월~4월: 청년기본소득 접수·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과 농민기본소득 지원 계획
- 12월: 청년기본소득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 예정

요약: 경기도의 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8~2019년의 준비기를 거쳐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과 농민·농촌기본소득 도입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브랜드가 등장하여 기존 기본소득 사업과 병행 또는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Ⅲ.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상세

### 1. 민선 7기 초기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기반 조성 (2018.07 ~ 2019.02)

#### 가. 기본소득 정책의 선언 및 추진 의지 표명

- 이재명 도지사 취임 및 정책 방향 제시 (2018.07.17.):
  -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보적 단계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하여 경기복지 기준선을 새롭게 제시하겠다고 천명함.
  -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약속함.

• 3대 기본복지 실현 강조 (2019.02.12.):

- 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순환 효과를 가져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공정 배분 정책임을 강조함.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경기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3대 기본복지 사업으로 제시하고, 특히 청년기본소득 등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2018.10.23.)

• 조례 제정 취지 및 의회 심사:

- 기획재정위원회 박OO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 제도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에 대해 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적 논의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기본소득의 제도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함.

-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반대 1명(이OO 의원)으로 가결됨.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제정 논의 및 쟁점 (2020.06)

가. 조례안 제안 및 주요 내용

• 제안 설명 (원OO 의원):

-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기본소득의 정의: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함.
-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의 기본소득 지급 추진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및 쟁점 사항

- 기본소득 정의와 현실 정책 간의 괴리: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5대 구성요건(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 지급)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시행 중인 '재난기본소득(일시적)'이나 '청년기본소득(특정 연령)'은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한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상위법령과의 충돌 문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소득을 수령할 때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등 상위 법령상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됨.

#### 다. 의회 주요 토론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 신OO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중수혜 금지 등 상위법령 문제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라는 조례상의 정의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함.

- 원OO 의원 (발의자):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며, 향후 국가적 차원의 사회부조 골레를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함. 현재 단계에서는 선언적 의미와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 수정안 발의 및 가결: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이라는 표현을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으로 수정하여 기본소득의 속성을 더 명확히 함.

#### 라. 농민기본소득 등 직군별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 제기

- 원OO 의원 5분 발언 (2020.06.22.):
  -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특정 직업군(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함.
  - 농민이 다수인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농민이 2~3%에 불과하여 타 직군(예술인,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및 포퓰리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함.
  -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고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선행할 것을 요청함.

### 3.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과 의회와의 갈등 (2019.11 ~ 2020.11)

#### 가. 초기 도입 논의 및 연구 (2019년 행정사무감사)

- 경기도의 추진 방향: '농가수당'이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원형에 가까운 방식을 추구함.
- 박OO 농정해양국장 답변: 연구용역 대신 TF팀(연구그룹)을 구성하여 농민단체, 학계와 토론을 진행함.

- 지급 대상 범위: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여성 농민, 농업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권적 확인 절차(마을 위원회 등)를 고려함.
- 재원 분담: 도비 30~50% 부담 및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차등 보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나. 예산 편성 절차 위반 논란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쟁점 사항: 근거 조례(농민기본소득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2021년도 본예산에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 의회의 강력한 질타:
  - 김OO 농정해양위원장: 의회 상임위와 사전 교감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이며,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함. 언론에 의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진OO 위원: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내로남불 식 행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함.
  - 박OO 위원: 코로나19 시국에 특정 직군(농민)만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조례 없이 예산을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함. 또한 농정 분야 타사업 예산 축소를 우려함.
- 집행부(김OO 농정해양국장)의 해명 및 사과:
  -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함.
  - 타 지자체에 비해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점, 시군의 수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 통과 즉시 집행하기 위한 의욕이었음을 해명함.
  - 의회와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향후 협의를 약속함.

#### 4. 농업 정책 현황과 기본소득의 필요성 논의 (2020.11)

##### 가. 농업의 위기와 정책 전환 필요성

-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10년 사이 경기도 농가 인구가 급감(31만 명 → 13만 명)하고, 40세 미만 경영주가 1% 미만인 소멸 위기 상황임이 지적 됨.
- 기존 정책의 한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가 인구가 감소한 것은 기존 농정 실패를 방증하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기본소득의 논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농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나. 농민기본소득 도입 시 고려사항

- 시군 재정 부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여주, 이천, 안성 등)의 경우 도비 매칭(5:5) 시 재정 부담이 커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시군과의 협의 및 차등 보조율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
- 중소농/영세농 소외 문제: 기존 스마트팜 등 현대화 사업이 대농 위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농민기본소득은 영세 소농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함.

#### 5. 해양 및 기타 관련 사안 (2020.11 행정사무감사)

##### 가. 경기평택항만공사 및 해양레저

- 제부마리나 운영 준비: 2021년부터 제부마리나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해양 레저팀) 신설 및 인력 충원 계획을 보고함.
- 조직 확대 계획 관련 혼선: 김철환 위원이 '1개 팀에서 4개 팀 신설'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질의하자, 문학진 사장은 "오타"라고 해명하며 1개 팀 신설 (총 5개 팀)이 맞다고 답변하는 등 업무 파악 미숙이 드러남-.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문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기재부가 운영비의 30% 수준만 반영하여 운영 차질이 우려됨. 국비 확보 노력이 요구됨.

#### 나. 친환경 학교급식 및 농산물 유통

-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차질: 학교 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교육청과의 협조 부족(꾸러미 사업 등)이 지적됨.
- 물류 체계: 경기도산 친환경 농산물을 도내에 보관하지 못하고 타도 창고를 임대해 쓰는 비효율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지적됨.
- 건강과일 사업: 공급 대상 확대(가정보육 어린이 등)에 따른 품질 관리(짓무름, 곰팡이 등) 및 물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강조됨.

####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및 본격 도입 (2021.04)

이 구간에서는 2021년을 중심으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제정, 기본소득 개념을 둘러싼 의회 내 논쟁(보편성 vs 범주형),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청산면)의 도입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룸

#### 가. 조례안 제안 및 주요 골자

- 추진 원칙: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급 대상 및 규모: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연 60만 원)을 지급함.
- 재원 분담: 도와 시·군이 50:50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둠.
- 위원회 구성: 마을, 읍·면·동, 시·군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 자치와 참여를 보장하고 부정 수급 등을 자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나. 의회 심의 과정의 주요 쟁점

- 지급 주기 명시: 조례안의 '지급 시기'를 '지급 주기'로 수정하여 매월 정기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함.
- 타 제도와 중복 문제: 청년기본소득(만 24세)과 농민기본소득 대상자가 겹칠 경우 중복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 필요성이 제기됨.
- 재정 부담 및 지속성 우려:
  - 향후 5년간 약 4,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 가중 및 기존 농정 예산 축소(풍선효과) 가능성이 우려됨.
  - 5:5 매칭 비율이 향후 도 재정 악화 시 시·군 부담 비율 상향(예: 3:7)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집행부는 비율 준수를 약속함.
- 의결 결과: 2021년 4월 29일 제351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6명으로 가결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

## 6. 기본소득 개념 확장과 '기본 시리즈' 정책 논쟁 (2021.04 ~ 2021.06)

### 가. 기본소득 개념(보편성)에 대한 비판

- 신OO 의원 도정질문 (2021.04.14.):
  - 특정 연령(청년), 특정 직업(농민), 일시적 지급(재난지원금) 등을 모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함.
  - 이러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도민들에게 개념적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청년 기본소득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청년 주거·활동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했음을 지적함.

### 나.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기본대출) 논의

- 기본주택: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정의하며, 이재명 지사는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 기본금융: 금융 소외계층에게 일정 금액을 저리로 대출해주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복지적 금융' 정책으로 설명됨.
- 비판적 시각: 박태희 의원 등은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의 차별성 및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신정현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상 실현 가능성 검토 없이 성급하게 홍보하는 것은 도민을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함.

## 7.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정 및 추진 (2021.10)

#### 가. 사업 개요 및 차별성

- 사업 내용: 소멸 위기가 높은 농촌 면(面) 지역 1곳(연천군 청산면 선정)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전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
- 기본소득 원형에의 접근: 특정 직군(농민)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민기본소득보다 보편성을 확보한, 기본소득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사회실험으로 평가됨.

#### 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 쟁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로 인해 조례 제정이 지연됨.
- 협의 결과: 2년간 시범사업 후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조건부 협의를 완료됨.

#### 다. 의회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

-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문제 (백OO 위원): 면 단위 시골 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 외에는 물건을 살 곳이 마땅치 않은데, 연매출 10억 이상 가맹점 제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집행부 답변: 낙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협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융통성 있는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시범지역 선정의 형평성 (양OO 위원): 특정 지역(1개 면)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및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우려가 제기됨.
- 재원 분담 비율 (진OO 위원): 도비 70%, 시·군비 30%로 시작하지만, 향후 도 재정 상황에 따라 시·군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중복 지급 금지: 농촌기본소득(보편)과 농민기본소득(직군), 청년기본소득(연

령) 간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이 논의됨.

라. 조례 통과: 2021년 10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국내 최초의 지역 단위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의 법적 토대가 마련됨.

## 8. 도지사 사퇴 이후 정책 지속성 및 예산 갈등 (2021.11 ~ 2021.12)

가. 도지사 부재와 정책 추진 의지 점검

- 박OO 대표의원 연설 (2021.11.02.): 이재명 지사의 사퇴(대선 출마) 이후에도 민선 7기의 핵심 가치인 재난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의 정책 기조가 훼손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야 함을 강조함.
- 권한대행 체제 점검 (박OO 의원): 오OO 권한대행에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주요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질의하였으며, 권한대행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나. 농민기본소득 예산 삭감 사태 (2021.12)

- 예산 심의 진통: 2022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농정해양위) 단계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약 200억 원 삭감되는 등 진통을 겪음.
- 원인:
  - 집행부의 소통 부재와 안일한 대응이 질타를 받음.
  - 농민기본소득 외의 타 농정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산 배분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줄다리기가 있었음.
- 결과: 농민기본소득(780억 원)은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나, 청년기본소득 예산

등은 일부 감액 조정됨.

#### 다. 사업 집행 부진 및 불용액 발생 (2021 결산)

- 집행률 저조 지적 (송OO 위원): 농민기본소득 사업에서 다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추궁함.
- 원인 해명: 코로나19의 영향보다는, 각 시·군의 조례 제정 지연, 예산 편성 시기 차이, 마을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9. 청년기본소득 및 기타 관련 조례 정비 (2021.12 ~ 2022.02)

##### 가.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

- 운영 미비점 보완: 2021년 12월, 청년기본소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
- 정산 문제 지적: 코나아이(운영 대행사)의 정산 결과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최종 정산이 미비되는 등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지적됨.

##### 나. 기본소득 관련 조례 일괄 정비 (2022.02)

- 법적 기반 강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어 가결됨. 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였음.

## 10. 민선 8기 출범과 '기회소득' 개념의 등장 및 정립 (2022.09 ~ 2022.11)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기회소득' 개념의 등장과 기존 기본소득 정책과의 차별화 및 통합 논의 과정

이 구간에서는 기존 민선 7기의 '기본소득' 정책과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회소득' 간의 개념적 차이, 통합 논의,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및 예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

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개념적 차이 논쟁

• 방OO 의원 도정질문 (2022.11.02.):

- 기존의 '기본소득'과 새롭게 제시된 '기회소득'의 개념이 혼재되어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두 정책의 차이와 방향성에 대해 질의함.

○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

- 기본소득: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재원 등의 문제로 장기적 과제로 접근해야 함.

-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정 대상(예술인, 장애인 등)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투자' 개념으로,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다름.

- 현실적 판단: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형(보편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만이 기본소득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는 입장을 밝힘.

## 나. 기존 농민기본소득 운영상 문제점 지적

- 사용처 제한 문제 (김OO 의원): 농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나, 농·축협에서 면세유나 농자재 구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큼을 지적하고, 사용처 제한 완화 또는 현금 지급 방안 검토를 요청함..
- 예산 추계 실패 (방OO 의원): 자격 요건 미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함.

## 11. 청년기본소득의 위기와 지자체 갈등 (2022.11 ~ 2023.09)

### 가. 사업 중단 위기 및 지급률 저조

- 성남시·의정부시 미편성 사태: 일부 시·군(성남시, 의정부시 등)이 재정 여건 및 정책 이견을 이유로 도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해당 지역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
- 행정안전부 데이터 거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대상자 파악 및 지급률이 하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
- 의회 대응: 장OO 의원 등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정상화를 촉구함.

### 나. 정책 실효성 논란 및 대안 모색

- 단순 용돈 전략 우려: 청년기본소득이 취업 역량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용돈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안 사업 비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이 청년기본소득보다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은 사용처가 자유로운 반면, 역량강화 사업은 목적이 특화된 사업이라 설명함.
- 김동연 지사의 입장: 청년기본소득이 특정 연령(만 24세)에만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으나, 수혜 대상자들의 기대와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하면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12. '기회소득' 정책의 구체화 및 확장 (2023.06 ~ 2023.11)

### 가. 다양한 기회소득 사업 등장

- 사업 확대: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농어민 등 총 6~7종으로 기회소득 사업이 다각화됨.
- 예술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선정 기준의 모호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인원을 2,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고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 협의가 쟁점이 됨.

### 나. 농민기본소득 vs 농어민기회소득 혼란

- 정책 명칭의 모순 지적 (이OO 의원): 같은 농어촌 지역임에도 농민에게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적용하는 기준과 철학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함.
- 통합 및 전환 논의: 김동연 지사는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엄밀한 의미의 기본

소득이 아니므로,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함.

#### 다. 절차적 문제 및 재정 부담

- 사전 절차 미이행 (박OO 의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하자가 반복됨을 비판함.
- 시·군 매칭 부담: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으로 추진되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군 부담 비율 완화를 촉구함.

### 13. 농촌기본소득(청산면) 성과 및 평가 (2023.06 ~ 2023.09)

#### 가. 인구 유입 효과 확인

- 오OO 위원 질의: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전 주민 월 15만 원)으로 인해 인구 유입, 특히 40~50대 및 자녀 세대의 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본소득 원형 인정: 김동연 지사는 청산면 시범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의 원형(보편성, 무조건성)을 갖춘 정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지를 밝힘.

#### 나. 예산 이월 문제

- 자금 없는 이월: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에서 '자금 없는 이월(명시이월)'이 발생한 점이 예산 결산 과정에서 지적됨.

## 14. 예산 심의 및 정책 지속성 논쟁 (2023.09 ~ 2023.12)

### 가. 확장 재정 vs 건전 재정 논쟁

- 김OO 대표의원 연설: 현 도정을 '이재명 시즌 2'라고 비판하며, 알맹이 없는 구호와 기본소득 등 퍼주기식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함. 국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확장 재정 기초를 비판함.

### 나. 2024년도 예산 심의 결과

- 청년기본소득 감액: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39억 원이 감액됨. 이는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와 청년 인구 감소가 반영된 결과임.
- 농민기본소득 유지: 반면,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농민기본소득(약 780억 원)은 원안이 유지되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임.
- 기회소득 조례 통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등이 가결되어 농민기본소득에서 기회소득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다. 통합 플랫폼 필요성 제기

- 박OO 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플랫폼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단일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

## 15.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정책적 정립 및 통합 논의 (2024.06 ~ 2024.12)

2024년 이후의 최근 논의,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인 감액 사유, 그리고 향후

## 기본소득 및 기회소득 정책의 전망에 대한 내용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기본소득'과의 관계 설정(통합 및 변경)이 구체화되고, 청년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특히 고양시)와의 갈등 및 예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

### 가. 농민기본소득의 '농어민 기회소득' 전환 논쟁

- 정책 명칭 및 철학 충돌 지적 (방OO 위원):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가치 보상을 지향하는 기회소득은 철학이 다름에도無理하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함.
- 김동연 도지사의 입장 정립:
  - 철학적 구분: 기본소득(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과 기회소득(사회적 가치 창출, 대상 한정)은 분명히 다른 개념임을 재확인함.
  - 전환의 정당성: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요건(보편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는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 진정한 기본소득: 현재 경기도 정책 중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 중인 '농촌 기본소득'만이 기본소득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함.

### 나. 기회소득의 확장과 형평성 문제 대두

-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비판 (이OO 위원): 선별 기준의 불명확성, 특정 직업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속적인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함.

- 집행부의 반박: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체육인은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등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이라고 답변함.
-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유OO 위원): 참여 인원을 2,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고,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군 매칭(재정 부담) 협의가 중요 쟁점이 됨.

## 16. 청년기본소득의 축소 및 존폐 위기 논란 (2024.02 ~ 2024.12)

### 가. 예산 감액 및 사업 위축

- 지속적인 예산 감액 (김OO 위원 질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를 추궁함. 집행부는 1인당 지원 단가(분기별 25만 원)는 동일하지만, 청년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함.
- 정책 방향성 논쟁: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짐.
- 집행부 입장: 만 24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의 상징성과 수혜자들의 기대를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되,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나. 행정적 난맥상 및 지자체 이탈

- 행정안전부 데이터 거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대상자 파악 및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이 지적됨.
- 성남시·의정부시 사례: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재정 부담 및 정책 이견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미편성하여 해당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함. (\* 의정부시는 이후 다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함).

## 17. 최근 지자체 갈등 및 지역화폐 정책 이슈 (2025.06)

### 가. 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중단 사태

- 일방적 중단 비판 (정OO 의원): 2025년 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청년 지원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보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함.
- 과감한 대응 주문: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들을 위해 도지사가 한 발 더 과감하게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 나. 경기지역화폐 매칭 거부 (고양시)

- 도비 매칭 불참 (이OO 위원):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만 유일하게 도비 매칭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국비 사업만 진행하기로 한 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됨.
- 집행부 확인: 경제실장은 고양시의 미참여 사실을 확인하며, 성남시와 화성시 같은 불교부단체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과 대비됨을 설명함.

### 다. 지역화폐 사용처 및 정책 제안

- 사용처 확대 요구 (이OO 위원): 정책적 목적(청년기본소득 등)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취약계층의 편익을 위해 병·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됨.

- 플랫폼 활용 제안 (박OO 의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다양한 도민 서비스 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을 주문함.

## 18. 기타 관련 조례 정비 및 정책 제안 (2024.12 ~ 2025.06)

### 가. 청년기본금융 조례 개정 (2024.12)

- 금융 지원 강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 이는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조치였음.

### 나. 새로운 수당 도입 제안

- 청소년 수당 (이OO 의원):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수당'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기본소득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언급함.
- 청년·노인 지원 확대 (이OO 의원): 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청년 기본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하고, 어르신 점심 제공 등의 정책을 제안함.

## 19. 종합 평가 및 전망

- 기본소득에서 기회소득으로의 중심 이동: 민선 8기 들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축소되고, 사회적 가치 보상을 강조하는 '기회소득'으로 정책 브랜드

드와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짐. 농민기본소득의 전환이 그 대표적 사례임.

- 농촌기본소득(청산면)의 위상: 김동연 지사는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만을 유일한 '기본소득 원형'으로 인정하며, 그 성과(인구 유입 등)를 바탕으로 정책 실험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임.
- 지자체 재정 및 정치적 갈등: 성남시, 고양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의 참여 거부는 재정 부담 외에도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및 정책 기조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도민(청년 등)의 피해 구제가 향후 과제로 남음.

#### IV. 전남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인구 소멸 대응과 절차적 정당성

##### 1. '농어민 공익수당'의 한계 지적과 개편 요구

- 가구 단위 지급의 맹점과 개인 단위 전환 촉구

전남도의회는 전복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6년째 가구당 연 60만 원에 묶여 있고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함. 의원들은 경기도 등이 개인 단위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과 정책 효능감을 위해 지급 단위를 '개인'으로 즉각 전환하고 금액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재정 위기 속 우선순위 갈등과 정책 지속성 우려

'출생기본수당'(18세까지 월 20만 원) 도입으로 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어민 수당 인상이 좌절되는 등 정책 간 자원 배분 갈등이 표출됨. 의회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교부세 감소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대책 없이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함.

## 2. '에너지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의 구체화와 비전

-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통한 자원 동반 모델 제시

의회는 신안군의 '햇빛연금' 성공 사례를 전남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도민 전체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함.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역의 공유 자원(바람, 햇빛)에 대한 권리로서 소득을 배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함.

-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한 지급액 현실화 요구

현재 분기별 소액 지급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귀농·귀촌의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월 50만 원~100만 원 수준까지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를 위해 '도민 발전 펀드' 조성 및 '이익 공유 조례'의 시·군 확산을 독려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함.

## 3. 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 포괄적 기본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는 2025년 3월, 농어민 수당 등 개별 조례를 넘어선 포괄적인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전 도민 대상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히 별도의 시범사업 조례 없이 기본 조례 내에 시범사업 근거를 둬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임.

- 밀실 행정 비판과 불공정 시범사업 개선 청원 채택

조례 제정 직후, 공개적인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지역(영광, 곡성)을 시범사업지로 내정한 것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짐. 의회는 주민 청원을 채택하여 도지사에게 원점 재검토와 투명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감대가 필수적임을 강력히 경고함.

## V. 전남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상세

2021년 2월 보편적 복지 논의부터 2022년 7월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교육 기본소득 도입 논쟁

### 1. 보편적 복지 및 인구 소멸 대응 논의 (2021년 상반기)

가. 제11대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02.02.)

- 보편적 복지 조례 제정: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함.
- 소상공인 지원 촉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김OO 의원)이 있었음.

나. 제11대 제35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06.16.)

-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 복지 확대: 전남교육청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6억 원)과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1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인구 유입과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함.
- 정주 여건 마련 강조: 윤OO 위원은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족 전체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소득 도입의 서막 (2021년 11월)

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11.03.) - 청년 기본소득 제안

- 청년 유출 방지 대책: 한OO 위원은 약 40만 명에 이르는 전남 청년 인구의 심각한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한 ‘전남형 청년수당’ 또는 ‘청년기본소득’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함.
- 구체적 지급 모델 제시: 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거나 분기별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예시로 들며, 예산 부족보다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함.
- 집행부(전남도)의 신중론: 윤OO 인구청년정책관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만 24세 특정 연령 대상)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금성 복지 도입 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 소멸 위기 지역 대응: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 중 전남 16개 군이 포함된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논의됨.

나.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1.11.10.~11.) - 에너지 기본소득(바람연금) 논의

- 해상풍력 이익 공유(바람연금) 제안: 임OO 위원은 신안 해상풍력 사업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바람연금’ 또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정의하고, 주민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 자원 공유 모델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집행부의 동의 및 과제: 김OO 에너지산업국장은 신안 태양광 이익 공유(햇빛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동의했으나, 지원 방식을 개별 가구 직접 지원으로 할지 면 단위 공동 기금으로 할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영농형 태양광의 한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70억 원 규모)이 주민 반대와 계통 연계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다.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1.11.23.) - 지역화폐와 농민수당

- 농민수당의 지역 경제 효과: 이OO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변동 사유를 설명하며,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순환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함.
- 에너지 자립마을 중단 지적: 주민 반대와 한전 계통 연계 용량 부족으로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임OO 위원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더 적극적인 조건 마련을 주문함.

3.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의 구체화 (2022년 상반기)

가. 제12대 제35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2.01.26.)

- 도민 상생형 태양광 확대: 강OO 에너지산업국장은 2022년 업무보고에서 영농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인근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도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사업'(햇빛연금 모델)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힘.
- 수익 배분 지침 요구: 신OO 위원은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시 조합 운영과 수익금 배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함.

4. 제 12 대 의회 개원과 '교육 기본소득'의 등장 (2022년 7월)

가.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07.19.) - 교육감 공약 천명

- 전남교육 기본소득 선언: 김OO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함.

- 목적: 지역 소멸을 막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나. 제3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7.) - 초기 쟁점 및 논란

- 재원 및 실효성 논란: 최OO 위원과 김OO 위원은 교육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 재원으로 ‘교육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속 가능성을 질의함.
- 용어의 적절성 비판: 김OO 위원은 ‘교육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교육의 질 향상(방과후 학교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와 이견을 보임.
- 교육감의 반박: 김OO 교육감은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 수당(월 5~7만 원)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소멸 지역 16개 군부터 우선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입증하겠다고 답변함.

이 구간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의 한계 지적, ‘농어촌 기본소득’의 구체적 제안, 그리고 ‘교육 기본소득’이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학생교육수당’으로 축소·변경되어 도입되는 과정 상세

5. 농어민 수당 현실화 및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안 (2022년 하반기)

가. 제12대 제3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10.19.)

-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 원 인상 요구
  - 박OO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5년째 연 60만 원에 동결되어 있어, 폭등하는 물가와 농업 경영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을 위해 수당을 현재의 2배인 연 120만 원 수준으로 즉각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등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재정 여건상 당장의 인상은 어렵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
- 소멸위험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제안
  - 이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2,000명 미만의 소멸 위험 지역(전남 66개 면 해당)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 내외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기존의 선별적 복지나 연 1회 지급되는 농민수당의 한계를 넘어, 해당 지역 거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국가적 모델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기본소득 재원 마련
  - 박OO 의원은 전남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이익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 재생에너지 공영사’ 설립을 주장함.
  - 에너지 개발 수익을 특정 기업이 아닌 도민 전체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6. 교육 기본소득 논쟁과 햇빛연금의 한계 지적 (2023년 상반기)

가. 제12대 제3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02.01.)

- 교육기본소득 개념 및 재원 적절성 논란
  - 김OO 의원은 김OO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기본소득’이 선진국에도 없는 개념이며,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영역이라고 지적함.
  - 특히 교육부 교부금에는 지역소멸 대응 항목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법적 근

거가 모호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 재원으로 삼아 현금성 복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함.

- 김OO 교육감은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으나,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과 재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함.

나. 제12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3.02.02.)

• 햇빛연금의 기본소득화 및 현실화 주문

- 신OO 위원은 신안군의 태양광 이익 배당(일명 햇빛연금)이 분기별 30~5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이를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함.
- 단순한 용돈 수준을 넘어 귀농·귀촌의 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함.

• 이익 공유 조례의 확산

- 최OO 위원은 신안군의 이익 공유 조례 모델을 타 시군으로 확산하고, 도 차원에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전남 도민 전체가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7. ‘학생교육수당’으로의 전환과 제도적 후퇴 (2023년 중반)

가. 제12대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06.14.)

• 기본소득 국제대회 지원

- 강OO 위원은 사회적 흐름이 농업직불금 등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가

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지원을 통해 전남이 기본소득의 정책 방향을 선도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함.

나. 제12대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07.12.)

- 명칭 변경: 교육기본소득 → 학생교육수당
  - 박OO 의원은 당초 공약이었던 ‘전남교육 기본소득’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학생교육수당’으로 변경된 경위를 질의함.
  - 황OO 부교육감은 보건복지부와 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보편성·무조건성 원칙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해 명칭과 대상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함.
- 바우처 지급 방식 결정
  - 교육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당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지역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밝힘.
  -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를 전제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

8. 수당 지급의 불평등 논란과 보편적 확대 요구 (2023년 하반기)

가. 제12대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09.15.)

- 보편적 복지 후퇴 비판 및 확대 촉구
  - 박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당초 취지보다 후퇴한 것을 강하게 비판함.

- 김OO 교육감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완전한 무상교육’과 실질적인 교육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위해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과 22개 시군이 재원 마련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함.

나. 제12대 제37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1.30.)

• 지역별 차등 지급에 따른 학생 간 차별 심화

- 정OO 위원은 학생교육수당이 2024년부터 지급될 때, 인구소멸지역(16개 군) 학생에게는 월 10만 원, 그 외 지역(목포, 순천, 여수 등) 학생에게는 월 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점을 지적함.
- 이는 같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학생들 간에 박탈감을 조성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개선을 요구함.

• 집행부의 입장 및 향후 과제

- 교육청은 예산 부족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 있음을 시인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차별 없는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임OO 위원은 교육청의 수당 정책만으로는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만원 주택’ 등 주거·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 구간은 2024년을 중심으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제동, ‘에너지 기본소득’의 구체화, 그리고 재정 악화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과 ‘출생기본수당’을 둘러싼 재

원 배분 갈등

## 9.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불공정' 논란과 청원 채택 (2024년 상반기)

가. 제12대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4.30.)

- 불공정 시범사업 개선 청원 가결
  - 박OO 의원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결과 재석 42명 중 찬성 36명으로 채택됨 .
  - 청원의 핵심 요지: 전남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공모 절차 없이 부실한 연구용역에만 의존하여 특정 지역을 내정했다는 의혹과 불공정성을 제기함.
  - 도의회의 요구: 도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감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원점 재검토와 투명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을 공식 이송함.

나. 제12대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4.06.18.)

- 에너지 기본소득의 사회안전망 역할론
  - 강OO 에너지산업국장은 이재명 대표 등이 주장하는 일반적 기본소득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어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이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회 안전망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 확충을 호소함.

## 10. 에너지 이익 공유(햇빛·바람연금) 로드맵 구체화 (2024년 중반)

가. 제12대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4.07.17.)

-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 보고
  - 정OO 에너지산업국장은 발전 수익이 특정 사업자가 아닌 도민에게 골고루 환류될 수 있도록, 도민 펀드나 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함.
- 햇빛연금의 현실화 주문
  - 신OO 위원은 신안군의 햇빛연금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나. 제12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07.18.)

-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윤OO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곡성군과 영광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 군 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함 .
- 출생기본수당 시행
  -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생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현재 3,5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도민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함 .

## 11. 재정 위기와 농어민 수당 vs 출생 수당 갈등 (2024년 하반기)

가. 제12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7.18.)

- 민생지원금 형평성 문제

- 서OO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려(10개 시군 지급, 12개 미지급) 도민 간 박탈감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최소 10만 원씩이라도 공평하게 지급했어야 한다고 비판함 .

- 농어민 수당 인상 촉구

- 박OO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5년째 연 60만 원에 묶여 있고 타 시도가 인상 및 개인별 지급으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함.

나. 제12대 제3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09.05.)

- 도정질문: 재원 배분의 딜레마

- 박OO 의원은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수당이 동결된 사유를 추궁함.
- 김영록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출생기본수당’(18년간 지원) 도입에 따른 막대한 도비 부담으로 인해 당장 농어민수당까지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함.

- 가구원 수 비례 지급 제안

- 김OO 의원은 현재 가구당 60만 원 정액 지급 방식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12. 2025년 예산안 심사와 농업 민생 4법 규탄 (2024년 말)

### 가. 제12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4.11.25.)

-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 규탄
  -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필수 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건의안을 의결함.
  - 이는 기본소득 논의와 별개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에 대해 도의회가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임.

### 나. 제12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4.)

- 농어민 수당: 가구 → 개인 전환 요구
  - 김OO, 박OO 의원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수당이 또다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함.
  - 특히 박OO 의원은 경기, 충남, 제주 등이 이미 '개인(농어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을 언급하며, 전남도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과 정책 효능감을 위해 지급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
- 학생교육수당의 확대와 과제
  - 2025년부터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확대 지급되는 '전남 학생교육수당' 예산을 심사하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이 구간은 2024년 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기본소득성 정책(농민 수당, 학생수당) 간의 재원 배분 갈등과, 2025년 초 전남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연구 조직 신설 및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과정

13.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책 간 우선순위 갈등 (2024년 11월~12월)

가. 제12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11.) - 시정연설

- 김OO 도지사 시정연설: 2025년 도정 핵심 과제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제시하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2024년생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 시행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를 약속함.
- 김OO 교육감 시정연설: '전남학생교육수당'을 2025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씩 확대 지급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나. 제12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4.)

- 농어민 공익수당 동결 비판: 김OO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농가 경영이 악화되었음에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6년째 60만 원으로 동결 편성된 점을 지적함.
- 지급 단위 전환(가구→개인) 요구: 박OO 의원은 경기, 충남, 제주 등이 이미 농어민 개인별 지급으로 전환했음을 언급하며,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과 정책 효능감을 위해 전남도 즉각적인 제도 개선(가구 단위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
- 학생교육수당 형평성 논의: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지급되는 학생교육수당 예산을 심사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타 지자체 복지 정책과의 중복 및 형평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

다. 제12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4.12.) - 대정부 건의

-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규탄: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필수 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건의안을 의결,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함.

#### 14. 기본소득 추진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준비 (2025년 1월~2월)

##### 가. 2025년 전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2025.01.)

- 기본소득연구센터 신설: 전남연구원은 2025년 1월,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이론적 토대 마련과 시범사업 설계를 전담할 ‘기본소득연구센터’를 공식 신설함 .
- 재원 동반형 모델 연구: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위해 ‘재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 사례와 전남의 대응 방향’ 연구 (2025. 6. 완료 예정)를 핵심 과제로 선정함 .
- 시범도입 용역 수행: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의 요청으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중임.

##### 나. 제12대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1.24.)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이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3천명 미만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국가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함.
-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정OO 의원은 농촌 지역의 필수 시설(병원, 약국, 마트) 소멸에 대응하여, 시장 논리가 아닌 주민 기본권 차원에서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함.

## 15. 에너지 기본소득 비전 구체화 (2025년 3월)

가.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025.03.)

- 연 1조 원 에너지 기본소득 목표: 에너지산업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등을 통해 연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도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비전을 브랜드 시책으로 설정함.
- 실현 공동결의문 채택: 국회 비전 선포식을 통해 도와 22개 시군이 ‘기본소득 실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력을 다짐함.
- 도민 펀드 및 조례 확산: 발전 수익 공유를 위해 NH농협 및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전남 도민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 ‘이익공유 조례’ 제정을 독려함 (9개 시군 완료).
- 임차농 보호 법제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임차농이 발전 부지에서 농업을 지속할 경우 ‘공익직불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함.

## 16.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 및 논란 (2025년 3월)

가. 제12대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03.11.)

- 조례안 심사: 전 도민에게 재산·소득·노동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사함 .
- 주요 쟁점 및 우려:
  - 포괄적 위임: 농어민수당 등과 달리 지급 대상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이 지적됨.

- 절차적 미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됨.
- 가결: 집행부는 시범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위원회는 논의 끝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원안 가결함.

나. 제12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20.)

- 반대 토론 (박OO 의원): 해당 조례안이 공모 절차 없이 부실한 용역에 의해 특정 지역(영광, 곡성)만을 선정한 ‘불공정한 시범사업 조례’라고 규정하며,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강력히 반대 토론을 함.
- 최종 의결: 표결 결과 재석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됨.
- 의의: 이로써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체 중 최초로 포괄적인 기본소득 도입과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이 구간은 2025년 3월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의 최종 제정과 그 직후 불거진 시범사업 선정 관련 불공정 논란(청원),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

17.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 및 갈등 (2025년 3월)

가. 제12대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03.11.)

- 조례안 심사 및 가결
  - 주요 내용: 전 도민에게 재산·소득·노동과 관계없이 개별적, 정기적으로 현

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기된 우려: 검토보고서는 해당 조례가 농어민수당처럼 구체적인 지급액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며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점에 대해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를 표명함.
- 의결: 집행부는 시범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위원회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원안 가결함.

나. 제12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20.)

• 반대 토론 (박OO 의원)

- 박OO 의원은 해당 조례가 공모 절차 없이 부실한 용역에 의해 특정 지역 (영광, 곡성)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사실상 '불공정한 시범사업 조례'라고 규정함 .
-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력히 반대 토론을 진행함.

• 최종 의결

- 표결 결과 재석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됨. 이로써 전남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포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

18. 시범사업 '불공정 선정' 논란과 의회의 제동 (2025년 5월)

가.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 (2025.05.08.~09.)

- 청원 제기 (화순군민)
  - 청원인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공개적인 시군 공모 과정 없이, 부실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특정 지역(영광, 곡성 추정)을 내정했다고 비판함,
  - 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밀실 행정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와 투명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함.
-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및 의결
  - 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감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함.,
  - 시범지역 선정 논란을 해소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본회의에 부의(이송)하기로 의결함.

## 19. 2025년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종합 현황

### 가. 연구 및 추진 체계 (전남연구원·에너지산업국)

- 기본소득연구센터 가동: 2025년 1월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재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수익 창출형) 연구가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임,
- 에너지 기본소득 로드맵: 2030년까지 연 1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며, 2025년 3월 ‘기본소득 실현 공동결의문’ 채택 및 6월 ‘신재생에너지 도민펀드’ 협약 체결 등 구체적 실행 단계에 진입함.
- 농민 권익 보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임차농이 발전 부지에서 ‘공익직불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항을 마련함,

## 나. 교육 및 농업 분야 기본소득성 정책

- 전남학생교육수당 (확대 시행): 2024년의 차등 지급(지역별 5만/10만 원) 논란을 딛고, 2025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형태로 확대됨,
- 농어민 공익수당 (정체): 타 시도의 인상 및 개인별 지급 전환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재정 부담(출생수당 등)을 이유로 6년째 가구당 연 60만 원에 동결되어 있어 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받고 있음, .
- 출생기본수당 (시행 중): 2024년생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안착하여 3,5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 20. 향후 과제 및 시사점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조례 제정 이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는 의회의 청원 채택 취지를 받아들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 일반 재정 투입(농민수당, 학생수당)과 별개로, 에너지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기금형/펀드형’ 재원 모델(햇빛·바람연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가 전남형 기본소득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장 협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중앙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범사업 실행의 핵심 관건임.

## VI. 전북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농촌 소멸 대응과 독자 모델 모색

### 1.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거주 수당’ 담론의 의제화

- ‘농촌기본소득’의 제안과 정책화 견인: 2023년부터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면 단위 기본소득’(거주 수당)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안됨. 의회는 기존 농업 정책만으로는 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연천군의 인구 증가 사례를 근거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여 2025년 시범사업 공식화와 조례 제정을 이끌어냄.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제기과 도 차원의 책임 강조: 재정 여건이 좋은데도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의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 2. ‘전북형 모델’의 구체화: 조례 제정과 재원 구조

- 전국 최대 규모 시범사업 조례 제정과 법적 완결성: 2025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 1개 면 실험을 넘어선 7개 시·군 대상의 대규모 시범사업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조례에 농촌 거주 주민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보편성’ 원칙을 명시하고, 위원회 산하에 다양한 분과를 두어 농촌 활력과 연계되도록 설계함.

- 독자적인 ‘마을자치연금’ 모델의 지원과 확장: 전북만의 특화 모델인 ‘마을자치연금’(태양광 수익 기반 노후 소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사함. 의회는 재정 투입형 복지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마을 공동체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연계하는 자립형 모델의 확산을 주문함.

## 3. 지급 수단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확장

- 농산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사용처 예외 요구: 정부의 소비 증진 지원금 사용처 제한(연매출 30억 이하)이 마트가 없는 면 단위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읍·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적용을 강력히 촉구함. 이는 향후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자금 역외 유출 문제를 선제적으로 짚어낸 것임.

- 다양한 계층으로의 소득 지원 논의 확장: 농민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창작 활동 보장을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위한 ‘유족수당’,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 소득 지원 논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함. 의회는 단순한 공모 사업이 아닌 조례에 근거한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Ⅶ. 전북도의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상세

### 민선 8기 소득 정책 비전과 기본소득 논의의 태동

#### 1. 제 12대 도의회 개원 및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2022. 07. 08. 제 393회 제 1차 본회의)

- 소득 양극화 극복 비전 제시
  - 김OO 도지사는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공’이라는 비전을 통해 지역·세대·산업 간 격차를 넘어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 농산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안정적 소득’과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강조하며,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함.,
  - 직접적인 ‘기본소득’ 용어 사용보다는 스마트팜 확대, 5대 농업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게 하겠다는 ‘소득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춤.
- 민생 안정 촉구
  - 오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도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선 8기 도정이 민생 안정과 도민 생존권 보장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당부함.

2. 농어민 공익수당 등 집행상 문제점 지적 (2022. 09. 22. 제 3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공익수당 지급 지연 사태 추궁
  - 김OO 위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등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지급 지연 문제를 지적함.
  - 공익수당 성격의 자금은 적기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자금 집행이 해를 넘겨(2022년 3월, 5월) 지연 교부된 사실을 확인함.
  - 나OO 새만금해양수산물국장은 자금 교부 지연을 시인하며, 향후 농어민 공익수당 성격의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함.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산업 지원을 통한 소득 창출 논의 (2022. 12. 07.  
제 3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전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 김OO 위원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 침수안전시설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내 안전산업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소득을 창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해외(일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검증 요구
  - 한OO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업 유치 보조금 사업(5개 기업 각 5억 원)에 대해, 단순 기금 소진이 아닌 실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함.

4. 난방비 폭탄과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 제기 (2023. 02. 02.  
제 398 회 제 3 차 본회의)

- 시·군별 지원 격차와 도 차원의 대책 촉구

- 오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탄과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도내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함.
- 무주군(20만 원), 부안군(30만 원), 정읍시(20만 원), 고창군(20만 원) 등 재정 여건이 되는 지자체는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함.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민 전체 대상 지원 등)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 5.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초 제안 및 의제화 (2023. 07. 제 402 회 제 1 차 본회의)

-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요구

- 오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공식 제안함.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면 단위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인구 증가(322명), 빈집 감소, 상권 활성화 등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함,
- 기존의 농촌 지원 정책만으로는 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면 단위 지역을 선정해 거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감한 정책 도입을 촉구함.
- 이 발언은 이후 민선 8기 전북 도정에서 농촌 기본소득이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지는 시발점이 됨.

#### 6. 농가 소득 구조 분석 및 공익수당 개편 논의 (2023. 11.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4 차 농산업경제위원회)

- 이전소득 의존도 심화와 자생력 강화 필요성

- 김OO 위원은 전북 농가 소득 중 ‘이전소득(공익수당, 직불금 등)’ 비중이 전국 1,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실제 농업 생산 소득은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함.
- 보조금 성격의 소득이 농가 경제를 견인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농업소득 자체를 늘리기 위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 외 소득 창출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함.
- 농민 공익수당 지급 단위 확대(가구→개인)
  - 권OO 위원은 기존 ‘가구(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을 ‘개인(농민)’ 단위로 확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신OO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에 공감하며, 농민단체(4개 단체)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을 농민 개인으로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답변함.
  -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농민 개개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향후 막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임이 논의됨.
-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소득 창출의 허점 지적
  - 권OO 위원은 ‘스마트팜 청년보육’ 사업과 관련하여, 영농 경력이 없는 청년들이 각종 지원사업 혜택(소득 및 창업 지원)만을 노리고 지원하는 문제를 언급함.
  - 실질적인 정착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영농 의지를 면밀히 검증하거나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농촌 기본소득 외에도 필수농자재 지원, 예술인 기본소득,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로 소득 지원 논의가 확장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하는 내용 전개: 기본소득 논의의 구체화와 다양한 계층으로의 확산

## 7.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및 이행 촉구

- 조례 제정의 의의 (2023. 12. 제정)
  - 오OO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비료, 농약, 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이는 농업 생산비를 줄여줌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는 ‘간접적 소득 지원’ 성격을 가짐.
- 조례 이행 및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 촉구 (2024. 06. 24. 제410회 제2차 본회의)
  - 오OO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비 폭등과 소득 하락의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을 위해 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함.
  - 특히 제12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주장해 온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사실상의 농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1년 넘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가능 여부만 검토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질타함.
  - 전북 내 가장 심각한 소멸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지사의 결단을 요구함.

## 8. 문화예술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기본소득·수당 논의

-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제안
  - 김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일랜드의 ‘예술인 기본소득’ 사례를 언급하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함.
  - “끼니 걱정은 예술가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일랜드 장관의 발언을 인용,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함.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투자가 될 것임을 강조함.
-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약속

- 염OO 의원은 도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유족수당’ 지급을 강력히 요청함.
-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대해 유족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역사적 보상 차원의 현금성 지원 가능성을 열어둠.
- 유보통합 격차 해소를 위한 현금성 지원
  - 서OO 교육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간 식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5세 유아에게 월 5만원(급간식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되기 전이라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수당 성격의 지원책임.

#### 9. 농촌 기본소득 연구 본격화 (2024. 09.)

- 공동연구 협약 체결
  -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함.
  - 이는 2023년 의회에서의 제안 이후, 전북형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실무적·학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 10. 2024 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득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점검 (2024. 11.)

##### (1)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4. 11. 11.)

- 농가 소득 증대 체감도 미흡 지적
  - 이OO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농생명지구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함.
  - 전북 농가 소득이 전국 5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언급하며, 발작물 기계화율 제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여

야 한다고 강조함.

- 승계농(청년농) 정착 지원 및 소득 안정
  - 권OO 위원은 기반이 없는 신규 창업농보다 부모의 영농을 물려받는 ‘승계농’의 정착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승계농에게도 청년농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함.
- 기후재난 대응과 소득 보전
  - 오OO 위원은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가 소득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가 부채 해결과 배수 개선 등 근본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을 촉구함.

## (2) 기획행정위원회 (2024. 11. 12. ~ 11. 15.)

- 동부권 면 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안
  - 염OO 위원은 동부권 등 낙후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한 ‘면 단위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안함.,
  -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검증한 뒤, 서남권 등 인구 유출 심화 지역으로 확대하는 모델을 제시함.
- 청년 지원 정책의 소득 보전 효과
  - 박OO 위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서울장학숙 운영’ 등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적 소득 지원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며, 사업 대상 확대(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등)와 집행률 제고를 주문함.
  - 김OO 위원은 ‘청년참여예산’이 실제 청년들의 소득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강조함.

## (3) 문화안전소방위원회 (2024. 11. 13.)

- 예술인 기본소득 실현 압박

- 김OO 위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 감사에서, 예술인들의 열악한 소득 실태를 재차 지적하며 단순 공모사업을 넘어선 ‘예술인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관련 조례 제정과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합법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OO 재단 대표이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냄.

#### 11. 2025년 본예산 심사 및 소득 관련 쟁점 (2024. 12.)

- 공익직불금 및 농민 공익수당 규모 확인
    - 최OO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4년 기준 공익직불금(국비 5,300억)과 농민 공익수당(도·시군비 700억)을 합친 예산 규모가 약 6,015억 원 수준이라고 보고함.
    - 공익직불금 예산이 매년 약 500억 원씩 증액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이 확대 추세를 확인함.
- 이 구간(2025년 1월 ~ 2025년 7월)은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공식화되고,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결되기까지의 입법 및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을 다루고 있음. 또한, 에너지 기본소득, 노인 일자리,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 기본소득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식화와 조례 제정

#### 12.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식화 및 추진 현황 점검 (2025. 02. 05. 제 417회 제 3차 본회의)

-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의제화 배경
  - 서OO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2023년 7월 권OO 의원의 최초 제안부터 2024년 9월 연구 협약 체결, 그리고 2025년 1월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8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짚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례와 비교할 때, 전북의 8개 면 대상 시범사업은

매우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규모라고 평가하며, 단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농촌 소멸 대응책이 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후속 조치를 질의함.

• 노인 및 청년 농업인 소득 지원

- 임OO 의원은 단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넘어,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하는 '전북형 역량활용 노인일자리(일하는 밥퍼)' 사업을 제안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오OO 의원은 기후재난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 비율이 8.4%(2023년 기준)까지 감소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13.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제안 (2025. 04. 16. 제 419 회 제 4 차 본회의)

•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햇빛연금/바람연금)

- 오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산에너지 모델이 도민들의 '에너지 기본소득'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인구 증가 및 247억 원 지급) 사례와 향후 해상 풍력 '바람연금'(연간 3,000억 원 예상) 사례를 제시하며, 송전선로 갈등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에게 수익을 직접 배분하는 모델 도입을 강력히 제언함.

14. 세입 결산 및 일자리·노동자 지원 (2025. 06. 13. ~ 06. 19. 제 419 회 회기)

• 세입 징수와 소득 재분배 기반 (예결특위)

- 김OO 위원은 지난 5년간 결손처분 금액이 약 943억 원에 달하는 등 세수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 실현과 기본소득 등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 서OO 위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도내 이직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재취업을 통한 중장년층의 소득 보전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함.

- 플랫폼 노동자 쉼터 및 식품 사막화 해소 (본회의)
  - 김OO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대리운전, 배달 등)를 위한 복합 쉼터 조성을 촉구하며, 법률·세무 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간접적 소득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어,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15.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검토  
(2025. 07. 07. ~ 07. 08.)

- 조례안 발의 (권요안 의원 등 8명)
  - 목적 및 정의(제2조): 농촌기본소득을 ‘농촌 거주 주민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제3조):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효과 분석 의무화.
  - 추진 체계(제6조):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농민행복, 농촌활력 등 7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업이 단순 지급을 넘어 농촌 활력 제고와 연계되도록 설계함.
  - 재정 부담(제11조):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재정 부담 비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안 검토보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농촌’의 범위를 읍·면 지역으로 구체화하고 타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제4조)이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평가함.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수반이 예상되는 사업임을 명시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음을 확인함.

16. 조례안 심사 및 관련 민생 현안 논의 (2025. 07. 15. ~ 07. 16.  
제 420 회 상임위)

- 거주수당 논의의 결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권OO 의원은 조례안 심사 중, 2022년부터 주장해 온 ‘거주수당(농촌기본소득)’ 논의가 3년 만에 시범사업 조례로 구체화된 것에 소회를 밝힘.
  - 경기도의 한계를 넘어 7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주문하며, 전면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 사용처 확대 촉구 (본회의)
  - 전OO 의원은 정부의 지원금 사용처 제한(연매출 30억 이하)이 소비처가 하나로마트뿐인 농산어촌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읍·면 지역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함..
- 주거 지원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서OO 의원은 ‘전북형 반할주택(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점검하며, 청년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17. 조례안 의결 및 소득 보전 대책 확정 (2025. 07. 17. 제 420 회 제 3 차  
본회의)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가결
  - 임OO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의 심사보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북형 기본소득 추진의 법적 근거가 최종 확정됨.
- 한우 농가 및 침수 피해 소득 보전
  - 한OO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긴급 경영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가 정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함..

- 임OO 의원은 반복되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농가 소득을 위협하고 있다며, 배수 개선 사업 확대와 타작물 재배 유도 시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함.
- 균형발전 및 행정 지원 조례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등이 함께 가결되어, 낙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행정 비용 절감(간접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
-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도입 촉구 (2025. 07. 25.)
  - 도의회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하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함.

이 구간에서는 2025년 7월 제정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과 특징, 타 지자체 사례(경기도)와의 차별성,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 수단(지역화폐/쿠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용처 제한 완화 논의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됨. 농업 소득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제시됨: 조례의 세부 내용 분석과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

## 18.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상세 분석

- 조례의 성격과 정의 (제1조, 제2조)
  - 본 조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임.
  - ‘농촌기본소득’을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권리임을 명시함.
  -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도 포함하여 차별 없는 지급 원칙을 세움.

- 추진 체계 및 위원회 구성 (제5조, 제6조)
  -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7개 분과위원회(농민행복, 농촌활력, 농업소득, 농생명식품 등)를 두도록 규정함.
  -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촌 활력, 농업 소득 증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함.
  -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목표, 자원 조달 방안, 대상 지역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재정 부담 및 사후 관리 (제11조, 제12조)
  -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재정 부담 비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제11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부정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한 환수 조치를 명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함.

## 19. 전북도 농촌기본소득 조례의 특징 및 타 지자체 비교 (심사 및 토론 과정)

- 경기도 연천군 사례와의 차별성
  - 권OO 의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가 수년째 1개 면에서만 시범사업이 머물러 있는 한계를 지적함.
  - 반면, 전북형 모델은 7개 시·군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만큼, 보다 광범위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와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함.
  - 전면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재정 여건상 타당함을 피력함.
- 법적 안정성 확보
  -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 조례가 시범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제4조)한 점이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평가함.

## 20. 기본소득(지원금) 지급 수단의 실효성 논의 (소비쿠폰 사용처)

-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적용 촉구 (2025. 07. 15.)
  - 전OO 의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 사용처 제한 지침(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이 농산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 대도시와 달리 읍·면 단위 농산어촌은 농협 하나로마트 외에는 소비처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사용처 제한은 주민들에게 원정 소비를 강요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초래하고, 지원금(기본소득 성격)의 취지를 퇴색시키므로 읍·면 지역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이는 향후 농촌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용처 문제를 선제적으로 짚어낸 논의로 해석됨.

## 21. 기존 소득 정책의 한계 분석 및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 이전소득 의존도 심화와 농업소득 정체
  - 김OO 의원은 전북 농가 소득 중 공익수당, 직불금 등 ‘이전소득’ 비중이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순수 농업 소득은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함.
  - 보조금 성격의 소득이 농가 경제를 지탱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기본소득 도입과 별개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자생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요구함.
- 동부권 등 낙후지역 대상 ‘면 단위 기본소득’ 제안
  - 염OO 의원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한 ‘면 단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함.
  - 우선 시범적으로 면 단위 주민에게 지급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서남권 등 인구 유출 심화 지역으로 확대하는 모델을 제시함.
- 예술인 기본소득 및 사회적 가치 보상
  - 김OO 의원은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이는 전북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단순 공모사업 방식이 아닌, 조례 제정을 통한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주문함.

## 22. 농가 경영 불안정과 소득 보전 긴급 대책 (2025. 07. 17.)

- 한우 농가 및 침수 피해 대책
  - 한OO 의원은 사료값 폭등과 도매가격 하락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를 위해 긴급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촉구함.
  - 도내 도축 물량의 타 지역 유출로 인한 부가가치 손실(약 3,440억 원)을 지적하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가 정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함.

- 임OO 의원은 반복되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배수 개선 사업 확대 등 안전망 구축을 요구함.

### 23.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원 및 평가 논의

- 세입 징수와 재원 마련 (2025. 06. 13.)
  - 김OO 의원은 지난 5년간 결손처분 금액이 약 943억 원에 달하는 등 세수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기본소득 등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함.
-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도입 촉구 (2025. 07. 25.)
  - 도의회는 정부 정책 수립 시 해당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함.
  - 이는 중앙 정부의 자원 배분 시 낙후 지역의 소득 격차 해소를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임.

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앞서 정리한 개별 논의들을 종합하여 ‘전북형 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의 특징과 차별성,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핵심 쟁점(재원, 소비처,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 논의가 농민을 넘어 사회 전반의 소득 안전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요약·정리함: 전북형 기본소득 모델의 확립과 향후 과제

### 24.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모델의 핵심 특징 및 차별성

-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시범사업 추진
  - 규모의 확장: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1개 면) 사례의 한계를 넘어, 전북은 도내 7개 시·군, 8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와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함.
  - 법적 완결성: 2025년 7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최종 확정

됨.

- 보편적 권리로서의 정의 확립
  - 지급 원칙: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시범지역 거주 주민(외국인 포함)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함.
  - 운영 체계: 단순 현금 살포를 지양하고, ‘농촌기본소득위원회’ 산하에 7개 분과(농민행복, 농촌활력, 농업소득, 농생명식품 등)를 두어 기본소득이 농촌 사회의 활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함.

## 25. 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 쟁점 및 해결 과제

- 지급 수단(지역화폐/쿠폰)의 사용처 현실화
  - 농산어촌 특수성 반영 요구: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제한(연매출 30억 원 이하) 방침이 소비처가 부족한 읍면 지역 현실과 괴리됨을 지적함.
  - 예외 적용 촉구: 하나로마트 외에 소비 시설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에 한해 사용처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내 자금 순환(역외 유출 방지)을 동시에 달성해야 함을 강조함.
- 자원 조달 및 재정 부담
  - 매칭 펀드 방식: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재정 부담 비율 협약 체결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함.
  - 세수 확보 노력: 지난 5년간 결손처분액이 약 94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기본소득 등 복지 자원 마련을 위해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이 필수적임이 지적됨.
-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 평가지표 개발 의무화: 시범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 분석 의무를 부과함.

- 단계적 확대론: 전면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소득 증대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의회의 중론으로 모아짐.

## 26. 기본소득 논의의 사회적 확장 (농민 → 전 도민)

- 농민 공익수당의 진화 (가구 → 개인)
  - 기존 ‘가구(농가)’ 단위 지급 방식이 여성 농민이나 청년 농민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인(농민)’ 단위로 전환하여 농민 개개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함.
  - 2024년 기준 공익직불금과 공익수당 예산 규모는 약 6,015억 원에 달하며, 이는 농가 소득 안전망의 핵심축을 담당함.
- 다양한 계층으로의 소득 지원 확대
  - 예술인: 단순 공모사업을 넘어, 창작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어르신: 단순 공익형 일자리를 탈피해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하는 ‘전북형 역량활용 일자리(일하는 밥퍼)’를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함.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반할주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간접적 소득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안정적 소득 활동 준비)을 유도함,
  - 플랫폼 노동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

## 27. 민생 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한 보완 대책

- 간접적 소득 지원 강화 (필수재 지원)
  - 필수농자재 지원: 비료, 사료값 폭등에 대응해 필수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를 낮추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조례를 이행함.

- 식품 사막화 해소: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함.

- 재해 및 시장 위기 대응

- 한우 및 농작물 피해: 가격 폭락과 침수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유통 구조 개선 및 배수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을 촉구함.
-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도입: 정부 정책 수립 시 낙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인 소득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도입을 건의함.

## 28. 종합 요약 및 의회의 제언

- 민선 8기 도정의 지향점: ‘함께 성공’과 소득 양극화 극복

-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농산어촌의 활력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안정적 소득’이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해 옴.
- 의회는 이러한 비전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술인 지원, 청년 정착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되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입법적 지원(조례 제정)을 수행함.

- 향후 과제

-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전복형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 정립.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 방안 마련.
- 농업 이외의 분야(에너지, 문화예술 등)로의 기본소득 의제 확장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Ⅷ. 경기도 및 전라남도 기본소득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

- 전복형 기본소득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제도화를 진행한 경기도와 전북도와 유사하게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전라남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음.<sup>100)</sup>

표 6. 기본소득 전문가 자문 비교

비교 항목	경기도 기본소득 전문가 자문	전라남도 기본소득 전문가 자문
①재원 마련 및 지속가능성	광역지자체의 조세권 한계를 고려해 기존 예산 활용형과 자체 재원 확보형을 병행해야 하며, 예산 비중 관리와 수익 창출 사업의 지속성이 핵심임.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모델은 가능성이 있으나 계통·REC·재무구조 등 제약 요인이 큼.
②시범사업 확대 대응	광역지자체 주도 시범사업인 경우 인접 지역 확대 요구에 대한 명분 확보가 가능하나, 확대 전 연구·공론화가 필요함.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점진적 확대가 원칙이나, 지방재정 한계로 향후 국가사업 중심 대응이 바람직함.
③농어민 공익수당 등 중복 지급	기존 농가 소득보장 정책의 보완 성격을 고려할 때 중복 지급이 가능하나, 재정 여력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 고려해야 함.	지급 주체와 목적이 달라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책 목적상 병행 가능하다고 판단함.
④주민 공동수익·연금형 모델	전국 확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지역 사례 축적을 통해 주민 요구와 거버넌스 관심이 확대될 수 있음.	시군 단위 자율 모델은 가능하나 전국 확대는 제한적이며, 국민펀드형 등 보완적 접근이 필요함.
⑤기본소득 조례 및 전북 적용 방향	기본소득 조례는 인구소멸 대응의 제도적 기반으로 의미가 있으며, 전북은 주민 설명·홍보와 공유부 인식 제고가 필요함.	조례 집행 과정의 실무적 쟁점을 고려해 지급 대상 결정은 시군 위원회에 위임하고, 주민 교육·역량 강화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0)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현장 조사 전문가, 전라남도의 경우 전남형 기본소득 설계 전문가.

## 1. 경기도 기본소득 전문가 자문

### 1) 기본소득 시책과 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 방식과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의 특징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두고 나누는 체계 전반에 변화가 필요한 ‘재분배 정책’임.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세 제도를 정하고 운용하는 권한이 제한적인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선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해야 함. 결국 광역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 방식으론 ‘기존 예산 활용형’과 ‘자체 자원 확보형’이 있음.
- 기존 예산 활용형은 지자체가 가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자체 자원 확보형은 기존 예산 이외에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이나 어장, 목장, 지하수 등의 지역의 공유부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은 ‘기존 예산 활용형’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기본소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예산의 효율성과 불용 예산 현황(순세계잉여금 등) 등을 고려해 개혁을 통한 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두루 검토해야 함.
- 자체 자원 확보형의 기본소득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함.<sup>101)</sup>

### 2) 특정 면단위(경기도 청산면)에서 혹은 군단위(정부 및 전남도)에서 시행하거나 구상하는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인접 면 혹은 군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본소득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엔 당연히 청산면 인근의 다른 면 주민들도 동일한 기본소득 혜택을 요구하겠지만, 해당 사업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시범사업 지역 한 곳을 직접 선정했고, 광역지자체가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임. 따라서 기초지자체로선 인접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면 지역 주민만을 대

101) 관련 자료: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2022년~2026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유영성 외. 2021. 경기연구원

상으로 지원하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경기도 연천군의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엔 사업 기간이 5년이었고, 2022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월 15만원이 지급될 계획이었음.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최초 계획은 5년 하고, 10년까지 원칙적으로 연장할 계획” “(연장 사안을) 챙겨보겠다”고 밝혀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
-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타 지역 주민의 요구, 수용 여부 검토 등이 이뤄지려면 기존 사례에 대한 분석, 연구,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연천군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3)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현재 농어민기회소득)의 중복 지급 및 수혜를 제한하고 있음.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군단위 수혜 주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전남, 전북)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농어민 공익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이 기존의 농가 소득보장체계(직불금 등)의 불충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직불금과 각종 농민 수당 등은 서로 공존해왔음.
- 농촌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아직 직불금과 농어민수당 등이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중복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는 농촌기본소득의 월 지급액, 지급 주체의 재정 여력, 중앙 정부와 주민 수용성 등을 두루 고려해 중복 여부를 정해야할 것으로 보임.

4)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마을 단위의 자체 공동 수익과 정부 혹은 자치단체나 기업의 수익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익 배분하는 형태의 “연금 지급 방식” 등은 지역사회 및 마을의 생활환경, 전통, 문화, 그리고 자율성 등의 차이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의 기본소득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오히려 여러 지역에서 공동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비슷한 형태의 사업과 수익 배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과거 제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을 통한 기금 조성과 마을주민 수혜 등의 사례가 분석되고 연구되며, 전파된 측면도 있었음.

5) 경기도 및 전남도의 기본소득 기본조례 운영의 장점과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고, 새롭게 전북형 기본소득을 위해 전북도가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가?

- 기존 조례는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 전북도의 경우엔 주민들이 기본소득 정책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설명, 홍보 등을 강화했으면 함. 기본소득은 지역의 자체 재원이 될 수 있는 공유부(햇빛, 바람, 지하수, 어장,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잘 가꾸게 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음.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이 여러 지역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2. 전라남도 기본소득 전문가 자문

### 1) 기본소득 시책과 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 방식과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전략의 한계

- 주민 1인당 연간 100만 원만 지원해도 1만 명당 1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다만 최근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크게 증액되면서 도 본청에서는 자주재원에서 조금씩 여유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2조 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 재생에너지 활용 전략의 가능성과 제도적 제약

- 신안을 비롯해 몇몇 지자체에서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 형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REC<sup>102)</sup>를 받는 형태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모델을 발굴하였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

- 일정 부분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 활용 전략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편이지만 몇 가지 어려움은 예상됨

-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계통 연계 측면에서 용량의 한계로 인해 확장성을 예상하기 어려움.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호남권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 모델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계통연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둘째,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높아지고 발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REC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 시 배분 가능한 공유이익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셋째, 주민들의 참여 시 자기자본보다는 대부분 금융권 대출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본의 건전성 측면과 향후 상환을 고려할 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주민이익공유 모델을 단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만 국한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타지역 주민들의 참여 시 배분하는 공유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모델도 고려해야 함.

2) 특정 면단위(경기도 청산면)에서 혹은 군단위(정부 및 전남도)에서 시행하거나 구상하는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인접 면 혹은

---

102)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약자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

은 군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본소득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 전라남도의 사례

- 2025년 초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시, 2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구 도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음. 당시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의 성과를 분석한 후, 성과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다만 지방재정의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동반형 모델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식으로 덧붙였으나 다른 지역의 주민이나 의원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2025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1년만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되, 정부가 7개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추후 국가사업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지방재정만으로는 기본소득제도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임

3)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현재 농어민기회소득)의 중복 지급 및 수혜를 제한하고 있음.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군단위 수혜 주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전남, 전북)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농어민 공익수당과 중복 여부

- 이에 대해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연구에서 어느 정도 검토한 바 있음. 농어민 공익수당의 수혜 주체는 경영체이고, 전남형 기본소득 수혜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연구진과 전라남도의 판단이었음.
-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전남형 기본소득은 전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목적에서 차별

성이 있음.

- 2025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지급 중인 출생수당은 연구진 검토 단계에서 중복 지급이라고 제외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중복 지급되기도 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마을 단위의 자체 공동 수익과 정부 혹은 자치단체나 기업의 수익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익 배분하는 형태의 “연금 지급 방식” 등은 지역사회 및 마을의 생활환경, 전통, 문화, 그리고 자율성 등의 차이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의 기본소득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민이익공유모델과 기본소득모델의 차별성 감안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 이하에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주민이익공유모델이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임. 다만 전국 단위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펀드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단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국민을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음.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기본소득모델은 재원 마련 측면에서 신규 세원(예를 들어 디지털세, 인공지능세 혹은 법인세 원복으로 확보된 재원 등)과 연계하는 것이 관건임.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로서 기본소득 확대시 선택적 복지 재원의 축소와 연계하는 재정제도 측면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경기도 및 전남도의 기본소득 기본조례 운영의 장점과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고, 새롭게 전북형 기본소득을 위해 전북도가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가?

- 기본소득을 자치법규로 담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예를 들어 몇 년 몇 월부터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민만이 지급 대상인데, 일시적으로(1년 중 수일 이내) 주민등

록을 옮겨 두거나 혹은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급 대상에 대해 조례에 제시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 확정은 시군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 또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선언적 의미만을 담는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좀 더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원기관 혹은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함.

## IX.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시사점

### 1. 제도적 기반: '통합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본 조례 제정 필요

#### • [시사점]:

현재 전북은 시범사업 조례, 공익수당 조례 등 개별 조례만 산재해 있어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함. 경기도가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통해 다른 조례에 대한 우선 적용 원칙을 세우고 위원회를 통합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함.

#### • [실행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기본소득, 마을자치연금, 공익수당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특히 전남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 조례 내에 '시범사업 실시 권한'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향후 청년·예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때마다 별도 조례를 만드는 비효율을 줄여야 함.

### 2. 재원 및 모델: '지역 자원 기반'의 재원 창출형 구조 설계

#### • [시사점]:

전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햇빛연금)'과 전북의 '마을자치연금'은 외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모델임. 단순한 세금 투입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유 자원 수익을 내재화해야 함.<sup>103)</sup>

• [실행 방안]:

새만금 및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수익, 지역 개발 이익 등을 ‘기본소득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적 근거(조례)를 마련해야 함. 태양광 발전 수익의 주민 배당 비율을 명문화하고, 이를 농촌기본소득 재원으로 연동시키는 ‘재원 순환 파이프라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함.

### 3. 정책 설계: ‘소멸 대응’을 위한 중복 지급 허용

• [시사점]:

경기도는 중복 지급을 제한했으나, 전북의 인구 소멸 위기는 훨씬 심각함. 기존의 농어민 공익수당만으로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실행 방안]:

농촌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설계해야 함. 기본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민 수당 등 타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허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두어,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4. 실행 및 관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검증과 환류

• [시사점]: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사 때마다 정책 효과 입증을 요구했음. 전남도의회 ‘불공정 시범사업’ 비판은 투명한 절차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보여줌.

• [실행 방안]:

시범사업 설계 시 반드시 ‘비교집단(통제군)’을 설정하고, 인구 이동, 지역화폐 소비 패턴, 주민 행복도 등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 연구를 의무화해야 함. 또한, 전남에서의 논란과 같은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범지역 선정 기준과 절

---

10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경기도가 특별히 지역사회에서 세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을 발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9월 15일에 공고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년~2027년) 공모 계획은 전국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대상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 신청하도록 하였음

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는 속의 과정을 연구에 포함해야 함.<sup>104)</sup>

## 5. 지급 시스템: 지역화폐 유통 구조의 현실화

### • [시사점]:

경기도와 전북도의회 모두 농촌 지역의 열악한 소비 인프라(하나로마트 유일 등)로 인한 지역화폐 사용 불편 문제를 지적했음.

### • [실행 방안]: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읍·면 단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처 제한 예외 규정(하나로마트 허용 등)’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 동시에 지역 자금이 역외(대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104)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 국가 또는 도시에 가장 잘 도입될 수 있는 방법을 검증하고자 하였음. Guy Standing, Basic Income Pilots: Uses, Limitations and Design Principles, Basic Income Stud 2021; 16(1): 75-99. Standing은 선별된 기존 실험 및 시범사업을 토대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설계, 구현 및 평가를 위한 19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음 진정한 기본소득 1개, 기본소득 설계 7개, 평가및모니터링 11개를 제시함



## 5장: 국회 기본소득 논의 분석 및 기본소득 모형 개발

### I. 제 22 대 국회 기본소득 법안 발의 동향 및 특징

#### 1. '소득 보전'에서 '지역 소멸 대응'으로의 입법 목적 전환

- 과거의 기본소득 논의가 추상적인 복지 확대로 접근했다면, 제22대 국회의 법안들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핵심 입법 목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무 부처를 농식품부가 아닌 지방자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지정함으로써, 농업 정책의 틀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 지급 대상의 확장: '직업(농어민)'에서 '거주(주민)' 중심으로

- 이원택, 주철현 의원안 등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 중심'의 접근을 취하며, 기존 공익직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반면 임미애, 윤준병 의원안 등은 농어업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지 중심'의 보편적 지급을 규정하여, 농촌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함.

#### 3.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감한 지급 수준 제시

- 기존의 지자체 농민수당(월 5만 원 수준)이 소득 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국회 법안들은 월 10만 원에서 최대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수준의 과감한 지급액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윤준병 의원안(연 200만 원), 이개호 의원안(연 240만 원) 등 구체적인 하한선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산 편성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농어촌 거주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주 동기를 부여하도록 설계됨.

#### 4.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적 법안(공론화법)의 병행

- 재원 마련 방안과 노동 유인 저하 등 찬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실체법과 절차법이 동시에 추진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급진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론화 결과가 향후 입법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함.

## II. 국회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제도화 설계 요소

### 1. 거버넌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와 통합 정보시스템

- 대다수 법안은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범부처 협력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 또한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관계 기관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행정 처리를 강조함.

### 2. 재원 조달: 국가 책임 명문화와 특별회계·기금 설치

-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 비율을 50% 이상(윤준병 안) 또는 60% 이상(서삼석 안)으로 법률에 못 박아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함.

-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본소득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정권이나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함.

###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제외 특례

- 기본소득 도입 시 가장 큰 쟁점인 ‘기존 복지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본소득 수령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거의 모든 법안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이는 빈곤층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이는 ‘줬다 뺏는’ 역설을 방지하고,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중첩적’ 성격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임.

### 4. 지역 경제 연계: 지역화폐 지급 원칙과 사용처 제한

- 지급된 기본소득이 대도시나 온라인 쇼핑몰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제 선순환을 도모함.
- 다만, 고령층의 사용 편의나 지역 내 소비처 부족(식품 사막)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지급이나 사용처 예외를 둘 수 있는 유연한 조항을 함께 두어 제도의 수용성을 높임.

## Ⅲ.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시사점

### 1. 제도적 논리 개발: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시범사업’ 격상 전략

#### • [시사점]:

국회 법안들이 농업 정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북형 모델 역시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수단’으

로 자리 매김하여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함.

• [연구 적용]:

현재의 도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국회 발의 법안(이개호, 윤준병 안)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시범사업'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전북의 실험 데이터가 향후 국가 입법의 핵심 근거가 됨을 강조해야 함.

2. 모형 설계: '거주민 전체'로의 단계적 확장 로드맵 수립

• [시사점]:

국회 논의 흐름이 '농어민(직업)'에서 '농어촌 주민(거주)'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전북형 모델 또한 농민수당(범주형)을 넘어 '농촌 주민 기본소득(보편형)'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연구 적용]:

1단계로 소멸 위험이 높은 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 이를 군 단위로 확대하며, 비농업인 거주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승수 효과)를 집중 분석하여 보편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함.

3. 재원 전략: '국비 매칭 의무화' 및 '자체 기금' 투트랙 전략

• [시사점]:

국회 법안들이 국가 부담 비율(50~60%)과 특별회계 설치를 강조하는 것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반증하므로, 전북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 부담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함.

• [연구 적용]: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가용 재원(지방소멸대응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입법 시 '국비 매칭 의무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도 차원의 '기본소득 특별회계/기금 조례' 제정 방안을 연구에 포함해야 함.

#### 4. 제도적 보완: '복지 급여 특례' 및 '데이터 행정' 기반 마련

- [시사점]:

국회 법안의 '기초생활수급 소득 산정 제외' 특례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관철시켜야 함.

- [연구 적용]:

시범사업 참여 주민의 소득·소비·이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조례에 '개인정보 처리 및 시스템 구축'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전담할 '정책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함.

#### 5. 조례 제정 방향: '통합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화

- [시사점]:

개별적인 지원 조례가 산재한 전북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법안들처럼 위원회, 종합계획, 재원, 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함.

- [연구 적용]:

기본 조례에 '다른 조례 우선 적용 원칙'을 두어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하고, 시범사업 실시 권한과 재원 조달(지역 자원 활용 등) 방안을 명문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입법 전략을 제시해야 함.

[종합 결론]

분석 결과,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① 지역 소멸 대응 논리 강화, ② 주민 대상 보편 지급 확대, ③ 국비 지원 근거 데이터 확보, ④ 통합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견인하는 선도 모델'을 설계하고자 함.

#### Ⅳ.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 기반 기본소득 모형 개발 시사점

##### 1. 연구의 핵심 방향: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의 전략적 결합

- 법안의 취지를 활용한 전복형 모델의 정당성 확보함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호남권)와 소비지(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지역에 산업과 주거가 집적된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전복형 기본소득 연구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지역 생존 전략'으로서의 논리를 강화해야 함. 특히 새만금과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가 법안 적용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여,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소멸 대응 자금(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모델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함.

- '공유부' 기반의 자원 조달 패러다임 전환함

전복형 기본소득의 가장 큰 난관인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제1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와 제72조(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풍력 등 공유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공식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이는 세중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알래스카 영구기금처럼 지역의 자원을 도민의 권리로 환원하는 '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으로 자원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2. 모형 설계 및 실행 방안: 4대 지구와 연계한 입체적 모델 구축

###### 가. '배후정주지구' 지정을 통한 완성형 기본소득 생활권 조성

- 주거와 소득이 결합된 '살기 좋은 농촌' 실현

법안 제2조에 따른 '배후정주지구'를 전복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주거(임대주택 특례)와 일자리(RE100 기업), 소득(에너지 배당)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완성형 자립 마을을 조성해야 함. 이는 월 15만 원 수준의 소액 기본소득이 갖는 인구 유입의 한계를 주거비 최소화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보완하여, 청년 농업인과 은퇴자가 어우러져 사는 복합 공동체 모델을 실현하는 방안임.

- RE100 산단 유치와 연계한 이익 공유형 세출 구조 설계  
 법안 제32조의 전력 직거래(PPA) 특례를 활용해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로 늘어나는 법인세 등 지방세수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기본소득 기금’으로 적립하는 자동화된 재정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함. 즉, 기업은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쓰고 지역 주민은 그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상생 모델을 통해, 기업 유치의 낙수효과가 지역민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도록 설계해야 함.

#### 나. 주민 참여 및 배당 방식의 고도화

- 보편적 기본소득형 주민 참여 모델로의 진화  
 법안 제35조의 주민 참여 및 금융 지원 조항을 활용하되, 자본금이 있는 일부 주민만 수익을 가져가는 기존 방식을 넘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분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거주민에게 n분의 1로 배당하는 ‘보편적 모델’을 지향해야 함. 이는 초기 자본이 없는 취약계층도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임.

- 지역화폐와 연계한 순환 경제(Closed Loop) 시스템 구축  
 에너지 발전 수익이나 기업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기본소득 재원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해당 자금이 대도시나 온라인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서 순환되도록 강제해야 함. 법안 제60조의 규제 특례 등을 활용하여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시의 승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임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 3. 법적·제도적 대응 및 거버넌스 전략

#### 가. 선제적 계획 수립 및 조례 체계의 통합

- 전북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법안 통과 즉시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선점하기 위해, ‘전북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그 핵심 평가지표로 ‘발전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기본소득)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재 산재해 있는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등을 이 특별법 체계 하에 연계·통합하는 ‘(가칭)에너지 자립 및 기본소득 통합 지원 계획’을 연구 과제에

포함해야 함.

- 관리 기관 유치 및 디지털 공공 플랫폼 구축

법안 제9조에 따라 설치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를 전북 혁신도시 등에 유치하거나 전북테크노파크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에너지 발전 현황과 기본소득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발전 수익의 투명한 배분과 기본소득 지급 시스템을 연동하는 ‘디지털 공공 플랫폼’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함.

#### 나. 논리 개발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한 ‘보편적 권리’ 논리 강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될 수 있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전 수익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전북 도민 전체의 ‘공유부’로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함.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임을 설득하여 범도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제가 될 것임.

-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국가 정책 견인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비교집단(통제군)을 설정하여 기본소득 지급 전후의 인구 유입, 지역 내 소비 증대, 주민 행복도 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병행해야 함.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이 특별법의 전국 확대나 ‘농어촌기본소득법’, ‘기본소득기본법’ 제정 시 전북의 모델을 국가 표준에 반영하는 강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4. 결론: 전북형 기본소득의 고도화 기회

- 에너지·산업·주거·소득이 융합된 패키지 정책으로의 전환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는 기존의 ‘복지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 ‘에너지 개발 이익이라는 새로운 부의 원천’을 창출하고 이를 주거 및 산업 정책과 결합하는 패키지 전략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은 전북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 기지를 넘어,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미래형 사회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법적·제도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6장: 지역형 기본소득 개발 논리-1

### 1. 복지 규모의 재조정: '보완'을 넘어선 '독자 생존' 전략

#### 1. 중앙정부 복지의 한계 인식과 지역 주도성 강화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복지국가 시스템은 전복과 같이 인구 소멸과 산업 쇠퇴가 가속화되는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전복형 기본소득 연구는 중앙 복지의 단순한 보완재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 고유의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 규모의 재조정' 차원에서 독자적인 사회 정책으로 정립되어야 함.<sup>105)</sup> 이를 위해 지역 주도성은 조례 제정권, 재정 운용 자율성, 기금 설치 권한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며 전복도에 적용할 특례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특례를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함.

#### 2. '지역 사회 계약'의 새로운 정립

• 전복형 모델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전복 도민의 '기본적 삶'과 '지역의 존립'을 지방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지역 사회 계약'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이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능동적인 정책 도구로서 기본소득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임.

#### 3. 중층적 거버넌스 구축

• 복지 재조정 이론에 따라, 전복형 기본소득은 국가 단위의 기초보장제도 위에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적인 소득 보장을 결합하는 중층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이를 통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전복만의 특화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정책 효능감을 극대화해야 함.

---

105) '독자 생존'은 중앙정부 복지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집행 가능한 소득 보장 전략임. 전복형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복지를 축소·대체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앙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확장하는 다층적 소득 안전망에 중점들 두어야 함

## Ⅱ. 장소 기반 정책: '직업'에서 '장소'로의 패러다임 전환

### 1. '사람'이 아닌 '장소' 중심의 접근

- 기존의 농민수당과 같이 특정 직업군(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법은 농촌 지역 전체의 구조적 쇠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멸 위기에 처한 '장소(농촌 마을, 면 단위)'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야 함. 전북형 연구는 거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장소 기반 접근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에 더 효과적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해야 함.
- '장소 기반 정책'은 저발전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의 기회 구조 결핍'에 있다고 보고, 특정 지역 자체에 자원을 투입하여 지역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임.<sup>106)</sup>

### 2. 소멸위험지수 연동형 '지리적 표적화'

- 전북 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읍·면 지역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배후정주지구'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지리적 표적화된 보편성' 전략을 채택해야 함.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구 댐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소 기반 정책의 핵심 원리임.<sup>107)</sup>

### 3. 목적 지향적 변형 모델의 정당화

- 전북형 기본소득은 교과서적인 보편성을 기계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농촌 소멸 대응'과 '에너지 산업 전환'이라는 명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목적 지향적 로컬 모델'임을 강조해야 함. 이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 강화나 지역화폐 의무 사용과 같은 조건부 설계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변형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함.<sup>108)</sup>

106) OECD. "Mechanics of replacing benefits systems with a basic incom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2018.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

107) 유영성 외.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2022년~2026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경기연구원. 2021.

108) 경기도는 청년·기획 지향형으로 청년의 사회적 진입 장벽 완화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 상권

### Ⅲ. 공유부 배당: 재정 자립과 지속 가능성 확보

#### 1. '지역 자원'의 공유부 규정 및 법제화

•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조세 저항이 큰 세금 기반 모델보다는 새만금의 태양광, 서남권의 해상풍력 등 지역 천연자원을 '공유부'로 규정하고 그 수익을 환수하는 전략이 필수적임.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등을 통해 발전 수익을 도민 전체의 자산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sup>109)</sup>

#### 2. 알래스카형 '자원 수익 배당' 모델 구현

•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 것처럼,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을 핵심 모델로 설정해야 함. 이는 외부 자본에 의한 부의 유출을 막고,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도록 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임.<sup>110)</sup>

#### 3.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및 비조세 수입 확대

• 공유부 모델을 확장하여 탄소세, 데이터세, 지역 자원 시설세 등 다양한 형태의 비조세 수입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특히 기업 유치에 따른 낙수효과를 세수가 아닌 기금 출연이나 지분 참여 형태로 전환하여, 기업 활동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주민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함.<sup>111)</sup>

---

활성화를 동시 추구: 전남, 전북은 농촌·공익 지향형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인구 댐 기능을 통한 지방 소멸 방지를 추구해왔음. 나아가 신규 전북형은 전환기·혼합 지향형으로 산업 및 에너지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분담과 지역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109) 재생에너지, 공공자산, 개발이익 등이 '공유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당 수익의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구분되지 않아 제도 설계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공유부는 '자연자원 및 공공자산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조례로 환원 비율이 확정된 부분'이라는 식으로 법적 성격과 귀속 구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10) State of Alaska, Department of Revenue. PERMANENT FUND DIVIDEND DIVISION: Annual Report 2023.;

[https://pfd.alaska.gov/docs/permanentfunddividendlibraries/annual-reports/2023-pfd-annual-report.pdf?sfvrsn=6f6d9c6c\\_1](https://pfd.alaska.gov/docs/permanentfunddividendlibraries/annual-reports/2023-pfd-annual-report.pdf?sfvrsn=6f6d9c6c_1)

111) 유승경. 중앙/지자체의 산업정책 성과 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토론회 자료집. 2023.; <https://alternative.house/20230427-basic-income-financing-plan-yoo/>

- 실제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의 수익은 민간사업자, 공기업, 발전자회사 등에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지방정부로 직접 귀속되는 경우는 제한적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유부 배당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 구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음.
- 공유부 배당이 재정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결론내리기는 어려운데 이는 예상 자원 규모와 연도별 변동성에 대한 정량적 추계가 쉽지 않기 때문임. 특히 에너지 가격, REC 가격, 발전량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논의되어야 함.
- 자원 기반 기금은 선거 주기와 결합될 경우 배당 규모의 변동, 자원 전용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유부 기금은 조례 수준을 넘어 운용 원칙, 사용 제한, 독립적 위원회 구성 등을 명문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sup>112)</sup>
- ‘지속 가능성’은 주로 자원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유부 수익이 특정 산업이나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구조적 위험이 지역 재정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공유부 배당은 단일 자원 의존 모델이 아니라, 지방세·공공자산 임대·기금 수익 등과 결합된 다원적 재정 구조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

#### IV. 지역 순환 경제: ‘돈이 도는’ 경제 생태계 조성

##### 1. 지역화폐 의무화를 통한 ‘누수 효과’ 차단

- 기본소득이 대도시나 온라인 쇼핑몰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수단을 반드시 해당 지역(시·군 또는 읍·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한정해야 함. 이는 복지 지출을 지역 내 소비로 가두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시키는 ‘지역 순환형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기능을 강화함.<sup>113)</sup>

112) 선거를 전후하여 각종 기금이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구성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지급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임.

113) NEF(New Economics Foundation). Plugging the Leaks: Making the most of every pound. nef. 2002.; <https://neweconomics.org/2002/11/plugging-the-leaks>

## 2. LM3(Local Multiplier 3) 기반의 승수 효과 측정

• 단순한 지급률이나 만족도 조사를 넘어, 투입된 예산이 지역 내에서 몇 단계에 걸쳐 순환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측정하는 LM3(Local Multiplier 3) 지표를 도입해야 함. LM3(Local Multiplier 3) 는 영국 신경경제재단(NEF)이 개발한 지역 경제 측정 도구로, 돈이 지역 경제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 ‘3단계(3 Rounds)’ 에 걸쳐 순환하는 과정을 측정하여 승수 효과를 산출함.

- 1단계 (Round 1): 지역에 유입된 초기 자금 (예: 지자체가 지급한 농촌기본소득 총액).
- 2단계 (Round 2): 1단계 자금을 받은 사람(주민)이 지역 내 상점이나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
- 3단계 (Round 3): 2단계 자금을 받은 상점(사업체)이 지역 내 직원 급여, 지역 공급업체 결제 등에 재지출한 금액.<sup>114)</sup>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연천군 청산면)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이 LM3 모델을 적용하여, 기본소득 지급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역 내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도는지(승수 효과)를 측정하도록 설계함. 이를 위해 사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액 중 지역 내 재지출 비율(인건비, 자재비 등)을 파악함.<sup>115)</sup>

• 전복형 연구는 이 지표를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투자임을 수치로 증명하는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함.

114) Sacks, Justin. The Money Trail: Measuring your impact on the local economy using LM3. New Economics Foundation. 2002.;

<https://new-economicsf.files.svdcdn.com/production/files/money-trial.pdf>

LM3 = (1라운드 + 2라운드 + 3라운드) / 1라운드

LM3 = (조직의 매출 + 지역 내 직접 지출 + 지역 내 간접 지출) / 조직의 총 매출

1라운드 (1차 수입): 조직의 매출

2라운드 (지역 내 소비): 임금, 공급업체 비용 중 지역 내 지출

3라운드 (재순환): 2라운드 수혜자들의 지역 내 재지출

115) 장한일 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 분석연구: 1차년도 보고서. 2022. 72쪽; 경기도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구의 설계와 결과\_윤형중\_2023 22nd BIEN Congress.pdf 내 인용; New Evidence on the Effects of Services Trade at the Worker Level. 2025.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new-evidence-on-the-effects-of-services-trade-at-the-worker-level\\_5241e06a/39ef4a9b-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new-evidence-on-the-effects-of-services-trade-at-the-worker-level_5241e06a/39ef4a9b-en.pdf)

### 3. 순환형 지역화폐 시스템의 고도화 (B2B 연계)

- 소비자가 상점에서 쓰는 것(B2C)을 넘어, 상인들이 받은 지역화폐를 다시 지역 내 자재 구매나 도매 대금 결제(B2B)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순환 결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충남 부여군의 사례처럼 가맹점 간 순환 결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화폐가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혈액처럼 계속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함.

- 지역화폐가 현금으로 즉시 환전되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N차 순환(LM3의 3단계 이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승수 효과를 극대화함. 부여 굿프래페이<sup>116)</sup>가 지역 내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인구를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LM3의 원칙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전남 영암군도 2025년부터 이와 유사한 순환 결제 기능을 도입함.<sup>116)</sup>

- NEF의 연구에 따르면, 슈퍼마켓 체인에서 지출된 돈은 80~90%가 지역을 즉시 빠져나가지만, 브리스톨 파운드와 같은 지역 통화로 지출된 돈은 지역 내에서 수차례 더 순환하며 지역 소득 승수(Local Income Multiplier)를 높이는 것으로 입증됨. 이는 추후 전복형 기본소득 모델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됨.<sup>117)</sup>

- 순환형 설계 강화: 지역화폐가 상인들 사이에서도 유통되도록(B2B 결제) 설계하여, 농촌기본소득이 ‘소비 지원금’을 넘어 ‘지역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하도록 고도화해야 함. 지역화폐가 단순히 소비자의 결제 수단(B2C)으로만 사용되고 소상공인이 이를 다시 지역 내 공급업체(B2B)에게 지출하지 않으면 지역 순환 효과는 제한적임. 전복형 기본소득 연구는 농민이나 소상공인이 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지역 내에서 자재 구매, 도매 대금 결제 등에 재사용할 수 있는 공급망 경로를 발굴하고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함.

- 지역 화폐의 감쇄 효과 발생 점검 필요: 브리스톨 사례에서 기업들이 지역화폐로 지방세를 납부하자, 해당 화폐가 지방정부로 회수되어 순환이 멈추는 ‘감쇄 효과(Dampening Effect)’가 발생했음. 감쇄 효과란 순환의 단절을 의미하

116) 양태석. [지역화폐] 6,000억 시장의 생활 플랫폼, 부여 굿프래페이. [지방정부] vo.39; LAB2050. 영암군 농촌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25.

117) Adam P. Marshall, Daniel W. O'Neill. 2018. The Bristol Pound - A tool for localisation. Ecological Economics. Volume 146, April 2018, pp.273-28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17304287?via%3Dihub>

는 것으로 지역화폐가 민간 영역(소상공인, 주민)에서 지속적으로 순환(생산-소비-재투자)하며 승수 효과를 일으키는 대신, 조세나 공과금 납부 등을 통해 발행 기관(지자체, 의회)으로 조기에 회수되어 유통이 멈추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말함.<sup>118)</sup>

- 돈이 지역 시장에서 돌아야 하는데, 다시 정부 금고로 들어가 잠기게 됨으로써 기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승수 효과)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임.

- 조세/공과금 납부 연계 시 ‘재지출’ 기제 마련: 전북형 기본소득이 공과금이나 지방세 납부를 허용할 경우, 전북도가 수취한 지역화폐를 자치단체 금고에 쌓아두지 않고 즉시 공공 조달, 공무원 수당, 복지 지출 등으로 지역 사회에 재투입하는 구체적인 재정 운용 매뉴얼을 연구해야 함.

## V. 전환기 관리: ‘중층적’ 소득 안전망 구축

### 1.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기’ 관점 도입

- 전북이 직면한 농업 중심에서 에너지·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고령 사회에서 소멸 위기로의 인구 구조 변화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환기적 위기’임. 전북형 기본소득은 이러한 거대한 구조 변동 과정에서 도민들이 낙오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판’이자 ‘전환기 관리 수단’으로 정의되어야 함.<sup>119)</sup>

### 2. 기존 복지 대체가 아닌 ‘중층적 추가’ 설계

- 기존의 농민 공익수당이나 기초생활급여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수혜자의 저항과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전북형 모델은 기존 제도를 기본(Base)으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농촌기본소득을 추가로 얹어 주는 ‘중층적 설계’를 채택하여 실질적인 소득 총량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

---

118) Adam P. Marshall, Daniel W. O'Neill. 2018. The Bristol Pound - A tool for localisation. Ecological Economics. Volume 146, April 2018, pp.273-28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17304287?via%3Dihub>

119) Welsh Government. Basic income pilot for care leavers: annual report 2023 to 2024. Gov.Wales. 2024.

<https://www.gov.wales/basic-income-pilot-care-leavers-annual-report-2023-2024>

해야 함.

- 국가 복지만으로는 빈곤 탈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자원 수익을 활용해 소득 기반을 ‘중층적’으로 강화함. 이로 인해 지역 빈곤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둠.<sup>120)</sup>

### 3. 인구 댐으로서의 기능 강화

- 중층적 지급을 통해 농촌 거주민의 소득 수준을 도시 근로자 수준에 근접하게 보전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유출을 막는 ‘인구 댐’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함. 특히 청년이나 귀농인 등 전략적 유입 대상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해야 함.

## VI. 실험주의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의 입증과 확산

### 1. ‘사회 실험’으로서의 시범사업 설계

-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패러다임(선별, 노동 연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므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 앞서 정책 효과(노동 공급, 삶의 질, 지역 경제 등)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사회 실험’ 과정이 필수적임.<sup>121)</sup>
- 전복형 기본소득 도입도 기존 정책의 경로를 벗어나는 혁신적인 시도이므로, 전면 시행에 앞서 ‘사회 실험’ 과정이 필수적임. 연구는 단순한 사업 시행이 아니라, 가설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하는 R&D 차원의 실험주의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함.<sup>122)</sup>

---

120) 브라질 마리카 시는 연방정부의 빈곤 정책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수급자에게, 시 자체 재원(석유 로열티)으로 마련한 지역화폐 ‘뭉부카(Mumbuca)’를 추가로 지급함; Jain Family Institute. The Marica Basic Income Evaluation. JFI. 2022.

<https://www.jainfamilyinstitute.org/projects/marica-basic-income/>

121) Sabel, Charles F. &Zeitlin, Jonathan. "Experimentalist Governance". The Oxford Handbook of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5pp.;

[https://scholar.law.columbia.edu/faculty\\_scholarship/1764/](https://scholar.law.columbia.edu/faculty_scholarship/1764/)

122) 현행 중앙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는 중앙정부가 아닌 경기도의 사회실험에서 출발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전복의 경우에는 익산 성당포구 마을자치연금처럼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로 실험하고, 그 데이터(증거)를 바탕으로 상위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국가)의 정책을 견인하거나 수정해 나가는 ‘상향식 정책 학습’ 과정이 중요함.

## 2. 비교집단 운영과 엄격한 성과 평가

- 정책의 인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시범지역(실험군)과 유사한 환경의 미지급 지역(통제군)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또는 유사 실험 설계를 도입해야 함.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무작위 배정 또는 준실험 설계를 통해 비교집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이러한 방식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제시해야 향후 국가 정책화를 설득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

## 3. 데이터 환류와 민주적 속의 과정 제도화

- 수집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환류 과정을 조례에 의무화해야 함. 또한, ‘공론화위원회’나 ‘시민참여단’을 통해 실험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도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적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함.<sup>123)</sup>

## Ⅶ. 종합 제언: 전복형 모델의 정체성 확립

[결론] ‘전환기·혼합 지향형’ 모델의 완성

- 위의 6가지 논리를 종합할 때, 전복형 기본소득은 경기도형(청년·기회)이나 전남형(농촌·공익)과는 차별화된 ‘전환기 대응형 복합 모델’로 정립되어야 함. 이는 ① 에너지 공유부(자원)와 마을 자치(공동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재원 구조, ② 기존 복지에 기본소득을 더하는 중층적 지급 방식, ③ 지역화폐와 LM3를 통한 지역 순환 경제, ④ 데이터 기반의 실험주의 행정을 포괄하는 혁신적인 정책 패키지여야 함.
- 궁극적으로 전복형 모델은 중앙정부의존적인 복지 체계를 탈피하여,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형 복지 국가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함.

---

123) De Wispelaere, Jurgen. "The Struggle for Strategy: On the Politics of Basic Income Trials". *Politics & Society*, 48(2). 2020. 2-5pp.;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32329220930773>



## 6 장: 지역형 기본소득 개발 논리-2

### I. 경기도형 기본소득 분석: 「청년·기회 지향형」

#### 1. 핵심 철학: 경제적 기본권과 지역 순환 경제의 결합

• 경기도형은 토지, 데이터 등 사회적 공통 자산(공유부)에 대한 배당 권리를 강조하며, 청년 세대의 기회 보장(복지)과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지-경제 융합 모델’로 설계되었음.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지역 내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경제 정책임을 입증하려는 시도임.

#### 2. 운영 특성: 지역화폐 강제성 및 포화 실험

• 지급 수단을 반드시 사용처(연매출 10억 이하)와 사용 기간(3개월)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의무화하여,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골목상권에서 순환되도록 강력하게 설계함. 또한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원에게 지급하는 ‘포화 실험’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음.

#### 3. 정책의 진화: 기본소득에서 ‘기회소득’으로의 전환

• 초기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향에서 나아가, 민선 8기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예술인, 장애인, 아동돌봄 등)을 지원하는 ‘기회소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함. 이는 재정적 한계 속에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가치 보상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임.

### II. 전남형 기본소득 분석: 「농촌·공익 지향형」

#### 1. 핵심 철학: 공익적 가치 보상과 자연 자원 수익 공유

• 농어업이 창출하는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농어민 공익수당)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의 풍부한

자연 자원(햇빛, 바람)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공유부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 이는 농촌의 소멸 위기를 지역 자원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임.

## 2. 운영 특성: 농어민 중심의 범주형 지원과 자원 배당

• 주로 농어민 경영체(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형’ 성격이 강하여 개별성 원칙에는 미흡하나, 신안군 등에서 발전소 인근 주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며 보편성을 강화하고 있음.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햇빛연금)’ 등 주민 참여형 발전 수익을 활용하여 재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3. 제도적 기반: 기본 조례 제정 및 출생 지원 강화

• 2025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생기본수당’(18세까지 지급)을 도입하여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함. 다만,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음.

# Ⅲ.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연구 시사점

## 1. 정체성 확립: ‘전환기·혼합 지향형’ 모델 정립

• [시사점]:

전북형 모델을 경기도(청년)나 전남(농어민)의 아류가 아닌, 인구 소멸과 에너지 산업 전환이라는 ‘이중의 전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독자적 유형으로 정립해야 함.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전북의 구조 전환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안전판’이자 ‘미래 투자’임을 강조하는 논리임.

• [실행 방안]:

연구 보고서와 조례에 ‘전환기 대응’ 목적을 명시하고, 기존 농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에너지 산업 수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핵심 정체성으로 설정해야 함.

## 2. 정책 설계: 기존 복지 대체가 아닌 '중층적 추가' 설계

### • [시사점]: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중복을 금지한 것과 달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북은 기존의 '농민 공익수당'(보상) 위에 '농촌기본소득'(권리)을 얹어주는 '중층적 설계'를 채택해야 함. 이는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므로(보상 vs 생존권) 중복 지급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기반함.

### • [실행 방안]:

조례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3. 재원 조달: '에너지 공유부'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

### • [시사점]:

지방세(일반회계)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음. 전남 신안군 사례와 알래스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새만금 및 서남권 해상풍력 등 지역 특화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부'로 규정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명시적으로 연계해야 함.

### • [실행 방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활용하여, 개발 이익과 기금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적립하는 '전북형 공유부 배당 파이프라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함.

## 4. 경제 효과: LM3 기반의 '지역 순환형' 경제 시스템 구축

### • [시사점]: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와 같이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특히 투입된 예산이 지역 내에서 몇 단계 회전하는지를 측정하는 LM3(Local Multiplier 3) 지표를 도입해야 함.

• [실행 방안]:

연구 단계에서부터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승수 효과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소상공인 간 거래(B2B)에서도 지역화폐가 순환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5. 거버넌스: '실험주의'와 '공론화'의 제도화

• [시사점]:

전남의 시범사업 불공정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전북형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 이를 위해 조례에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과학적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통제군) 운영'을 의무화해야 함.

• [실행 방안]:

시범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인구 유입, 행복도 등) 결과를 예산에 반영(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정책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선점해야 함.

6. 지급 대상: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의 단계적 확장

• [시사점]:

전남형이 가구 단위 지급으로 인해 여성과 청년을 소외시킨 한계를 극복해야 함. 전북형 연구는 초기에는 가구 단위 수용성을 고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 단위' 지급으로 전환하여 청년과 여성 농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실행 방안]:

청년 농어민에게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개별 구성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인구 유입 유인을 강화하고 가족 내 평등을 실현해야 함.

IV. 결론: 전북형 기본소득으로의 전략적 자리 매김

• [모델의 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전북형 기본소득은 ① 에너지 공유부와 마을 자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재원, ② 기존 복지에 기본소득을 더하는 중층적 지급, ③ 지역화폐와 데이터 행정을 통한 지역 순환 및 검증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기 대응형 복합 모델」로 정의되어야 함.

• [정책 목표]:

이는 단순히 타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복이 직면한 ‘지역 소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의존적인 복지 체계를 탈피하여 지역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지방분권형 복지 국가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함.



## 7 장: 전복형 기본소득 이행 방향

### I. 「기본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융합 기반 시사점

#### 1. 연구의 철학적 토대: '최소한의 생존'에서 '기본적인 삶'으로의 대전환

-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 확장함]

현 정부의 '기본사회'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 삶의 필수 요소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함. 이는 UN SDGs의 목표 1(빈곤 퇴치) 및 목표 10(불평등 감소)과 맥을 같이하며, 전복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시혜적 수당이 아닌 도민 누구나 누려야 할 '경제적 기본권'이자 '인권'임을 연구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함.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모델 설계]

SDGs의 핵심 구호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복형 모델은 기존 농민수당의 한계인 '가구 단위' 지급을 '개인 단위'로 전환하여 여성과 청년 농민의 배제를 막아야 함. 동시에 기본사회론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두터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포용적 설계가 필요함.

#### 2. 자원 조달 전략: '공유부'와 '에너지 정의'의 실현

- [에너지 기본권과 공유부 배당의 결합함]

기본사회론은 햇빛, 바람 등 자연 자원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한 '에너지 연금'을 핵심 자원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SDGs 목표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달성과 직결됨. 전북 연구는 새만금과 서남권 해상풍력 등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전복형 공유부'로 법제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을 구체화해야 함.

- [탄소 중립과 소득 보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

SDGs 목표 13(기후변화 대응)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탄소 배당' 논리를 전복형 모델에 적용해야 함. 이는

농촌 지역의 기후 위기 피해를 보상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기회소득’ 형태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됨.

### 3. 실행 방안 및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구현

- [‘기본 주거’와 결합된 살기좋은 농촌 모델 구축]

기본사회론이 주거, 금융, 의료를 포괄하는 ‘기본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과 SDGs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을 연계하여, 전복형 모델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주거(빈집 재생)+소득(기본소득)’ 패키지를 제공해야 함.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마을을 ‘에너지 자립형 기본사회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임.

-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의무화]

SDGs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한정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함. 전복형 모델 또한 지역 내 승수 효과(LM3)를 극대화하는 순환형 경제 모델을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함.

- [데이터 기반의 민주적 거버넌스(Partnership) 구축]

SDGs 목표 17(파트너십)과 기본사회론의 ‘숙의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전복형 연구는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실험처럼,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주민 삶의 변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를 제안해야 함.

### 4. 종합 제언: ‘전복형 기본사회’ 로드맵

- [단계적 이행 전략: 소멸 대응에서 보편적 권리로함]

1단계로 소멸 위험 지역(면 단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생존’을 도모하고, 2단계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배당’을 도입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3단계로 이를 도민 전체의 ‘기본사회 권리’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함. 이는 SDGs의 2030 목표 달성과 기본사회 비전을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경로가 될 것임.

표 7. 정책 실행·지표 연계 매핑: SDGs/기본사회/기본소득

구분	지속가능발전	기본사회	전북형 기본소득 정책설계
정책 목표	SDG 1(빈곤 종식), SDG 10(불평등 완화), SDG 11(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소득 기본권·거주 기본권 보장	농촌·지역 단위 기본소득을 통한 정주 기반 확보
정책 수단	지역 포용성 강화, 지역 격차 완화	최소 소득선 제도적 보장	정기·개별·무조건적 소득 지급
성과 지표	빈곤율 감소, 정주율·인구 유지율	삶의 안정성·생활 지속성	인구 유입, 지역 소비 증가, 소득 안정
관리 방식	지속가능발전 성과 평가 체계	사회적 기본권 이행 점검	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 분석 및 환류

• [정책 목표 측면]

- SDGs는 빈곤·불평등·지역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이 직면한 인구 소멸과 농촌 공동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기본사회는 이러한 목표를 추상적 가치가 아닌 보장해야 할 기본권의 목록으로 재구성하며, 소득과 거주 안정은 그 출발점에 해당함.
- 전북형 기본소득은 농촌·지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보장함으로써, SDGs와 기본사회 목표를 지역 정책 단위에서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함

• [정책 수단 측면]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핵심은 ‘포용성’이며, 이는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이 아닌 거주 자체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접근을 요구함.
- 기본사회는 이러한 포용성을 ‘최소 소득선 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하며, 노동 여부나 자격 심사를 전제로 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전북형 기본소득은
  - > 정기성
  - > 개인 단위 지급
  - > 무조건성
 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 선별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설계되어야 함

• [성과 지표 측면]

- 기존 복지 정책은 수급자 수나 집행률 중심의 행정 지표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음.
- 본 매핑 구조에서는 성과를
  - >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는 빈곤율·정주율
  - > 기본사회 차원에서는 삶의 안정성·생활 지속 가능성
  - > 기본소득 정책 차원에서는 인구 유입·지역 소비·소득 안정 효과로 구분하여 다층적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함.
- 이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존속과 사회 안정의 성과 지표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 틀로 활용 가능함

• [관리 방식 측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정책의 수립뿐 아니라 성과 점검과 환류 체계를 구축을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기본사회 관점에서는 소득 보장이 실제로 기본권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점검 체계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전복형 기본소득은
  - > 비교 집단 설정
  - > 장기 추적 데이터 축적
  - > 정책 효과의 연차별 분석 및 조정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체계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 구조는 향후 국가 단위 제도 확산 또는 법제화 논의에서 핵심적인 실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종합적 시사점]

- 본 정책 실행·지표 연계 매핑은 전복형 기본소득을
  - >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실현 수단이자
  - > 기본사회의 핵심 인프라 정책으로 위치 지우는 역할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전복형 기본소득은 개별 시범사업을 넘어, 전복형 기본사회 로드맵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 Ⅱ. 제도적 기반 구축: '통합 기본 조례' 제정 및 법적 체계 정비

### 1. 최상위 규범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 추진

- 현재 산재해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마을자치연금 등 개별 조례를 포괄하는 최상위 규범인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보해야 함.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보편성'에 두되, 시범사업과 공유자원형 모델을 포괄하는 유연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 정책의 확장성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함.

- 특히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이 조례가 다른 개별 지원 조례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해야 함.

### 2. '중층적 지급' 허용을 위한 특례 조항의 명문화

-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중복 수령을 금지한 것과 달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북은 기존 '농어민 공익수당'(보상) 위에 '농촌기본소득'(생존권)을 추가로 얹어주는 '중층적 설계'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기본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열어두어야 함.

- 이는 두 제도의 정책 목적이 상이함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임계 소득 수준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조례 제정 시 의회와 도민을 설득하는 핵심 논리로 활용해야 함.

###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과 연계한 자원 조항의 구체화

- 단순한 선언적 자원 조항을 넘어, 국회 발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개발이익 재투자) 및 제72조(특별회계)와 연동된 구체적인 자원 조항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 즉, '공유자원형 기본소득'의 정의를 검토하고, 새만금 및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수익이 기본소득 계정으로 자동 전입되도록 하는 '재정 파이프라인'을 법제화해야 함.

- 1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 조례를 수정하는 경우 (재원 조성)에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전입금 및 지역 개발 이익 환수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하여, 지방재정(도비/시군비)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자본의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로 환원시키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함.<sup>124)</sup>

### Ⅲ. 거버넌스 및 추진 체계: ‘실행력’과 ‘민주성’의 동시 확보

#### 1.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 단순 자문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지급액 결정, 타 지원금과의 중복 허용 범위 등 핵심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함. 위원회 산하에 기획재정,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야 함.
- 특히 전남의 시범사업 불공정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위원회 구성 시 도의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

#### 2.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지원단’ 운영

- 정책의 과학적 검증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전담할 ‘기본소득 정책지원단’ 운영 근거를 조례 제8조에 마련하고, 전북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원단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인구 이동 패널 조사, 지역화폐 승수 효과 분석(LM3), 비교집단 관리 등 고도의 R&D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등 국가 정책화를 요구할 때 전북의 모델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강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임.

<sup>124)</sup> 지방재정법상 설치·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여야 함. 즉 지방재정법 체계 안에서 목적·재원·운영·결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3. '속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절차 제도화

-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조례 제6조에 '기본소득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하여 시민참여단 구성, 속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이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필수 과정임.

- 공론화 과정에서는 '세금형 기본소득'이 아닌 '공유부(에너지) 배당'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여 조세 저항을 줄이고, 도민들이 지역 자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제적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

## IV. 시범사업 설계 및 실행: '소멸 대응'과 '에너지 자립'의 결합

### 1. '배후정주지구'를 활용한 완성형 시범사업 모델 적용

-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배후정주지구'를 시범사업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야 함. 이곳에 RE100 기업 유치(일자리), 에너지 제로 주택(주거), 기본소득(소득)이 결합된 '전북형 유토피아' 모델을 적용하여 인구 유입의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에 창출해야 함.

-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발전지구' 및 '마을자치연금 운영 마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외부 지원 없이도 자체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자립형 모델의 확산을 유도해야 함.

### 2. '면 단위 포화 실험'과 비교집단 운영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례와 같이, 특정 면 지역 주민 '전원'에게 지급하는 '포화 실험'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측정해야 함. 동시에 인구·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비지급 지역을 '비교집단(통제군)'으로 선정하여 비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순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함.

- 지급 수단은 반드시 해당 읍·면 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한정하되, 농촌의 소비 여건(하나로마트 유일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 제한의 예외를 두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함. 이를 통해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3. 시·군과의 ‘재정 분담 협약’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장·군수와 ‘재정 분담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례 제10조에 규정해야 함.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도가 전액 부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기업 유치와 연계하여 산단 입주 기업이 지역 공헌 차원에서 기본소득 재원에 기여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상생 협약’ 모델을 도입하여 민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함.

## V. 성과 관리 및 확산 전략: 데이터 환류와 국가 정책 견인

### 1. 엄격한 성과 평가 및 예산 환류 시스템 가동

- 조례에 따라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 배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평가는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인구 유입률, 지역 내 소비 증감, 주민 행복도, 공동체 신뢰 지수 등 다차원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함.
-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지역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기반 시설 지원 등)를 제공하여 지자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2. '전북형 모델'의 국가 표준화 및 입법 건의

-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실증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논의를 주도하고 전북의 모델이 '국가 표준 모델'로 채택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특히 에너지 자원 공유와 기본소득을 연계한 전북의 사례를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함.
- 중앙정부(행안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지원단'을 중심으로 공모 요건에 부합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전북이 '기본소득 시범 실시 지구'로 지정받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3. 단계적 로드맵에 따른 정책 확장성 확보

- [1단계: 도입기] 기본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면 단위 시범사업 실시 및 데이터 확보.
- [2단계: 확산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발생 시점(2027년 이후)에 맞춰 '에너지 배당' 본격화, 마을자치연금과 결합한 복합 모델 확산.
- [3단계: 정착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전역 또는 농촌 전역으로 대상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과 통합 또는 중층적 체계 완성, 국가 정책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 달성.

표 8. [상세 비교표] 경기도형 vs 전남형 vs 전북형 기본소득(안)

비교 항목	경기도형	전남형	전북형 안
<b>1. 정책 정체성</b>	농촌·농민·청년·기회 지향형	농촌·공익 지향형	전환기 혼합 지향형
핵심 철학	경제적기본권, 순환경제, 공유부(토지/데이터) 배당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결합	공익적 가치, 자원 공유, 농어업 공익가치 보상 및 자연자원(햇빛/바람) 이익 공유	구조 전환 대응, 중층적 설계, 인구소멸·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및 이익 공유
<b>2. 지급 대상</b>	범주형 + 지역 한정 보편형	직업 범주형 (일부 지역형)	지역 보편형 (확장성 내포)
주요 타겟	- 만 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시범마을(청산면) 실거주민 전원 - 농민	- 농어업 경영체 (농어민 공익수당) - 신안군 등 발전소 인근 주민	- 소멸위기지역(면) 전 주민 - 에너지 발전지구 및 마을연금 지역
지급 단위	개인 단위 (청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기회소득 등)	가구(경영체) 단위 중심(농어민수당은 가구당 지급 원칙) 가구 단위에서 개인단위로	가구(경영체) 단위 중심(농어민수당은 가구당 지급 원칙)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한계 극복
거주 요건	도내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시범사업은 실거주 엄격 확인)	신청 전년도 1년 이상 거주(경영체 등록 필수)	거주 기간 요건 유연화 가능(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b>3. 재원 구조</b>	일반회계 + 데이터 배당	지방비 + 자원 수익	혼합형 (Hybrid Finance)
주 재원	- 도비 70% + 시군비 30% - 일반회계(조세) 의존도 높음	- 도비 40% + 시군비 60% - 지방재정 부담 가중 우려	- 도비+시군비 (매칭 협약) - 신·재생에너지 자원공유화 기금
보조 재원	- 국토보유세, 데이터 배당 등 신규 세원 발굴 모색(연구 단계)	- 태양광·풍력 발전 이익 공유(신안군 햇빛연금 사례 등)	- 마을자치연금 자체 수익 - 지역개발 이익 환수금 명시
지속가능성	세출 구조조정에 의존하여 재정 압박 시 중단 위험 존재	자원 수익 모델(햇빛연금)로 재정 자립도 보완 시도 중	에너지 기금 및 마을 수익 결합으로 재정 부담 완화 및 지속성 확보
<b>4. 지급 방식</b>	지역화폐 (강제성 높음)	지역상품권 + 현금	지역화폐 + 현금 (유연성)
지급 수단	- 지역화폐 의무화 (사용처 제한) -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 사용 불가	- 지역사랑상품권 위주 지급 - 일부 시군 현금 병행 지급	- 지역화폐 원칙, 필요시 현금 허용 - 수급자 편의와 지역 순환 동시 고려

소멸 시효	지급일로부터 3개월 (단기 소멸)	반기별/연별 지급 (상대적 장기)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조정 가능)
<b>5. 중복 수급</b>	원칙적 불가 (택일)	사실상 분리 운영	중복 허용 명시
정책 관계	- 농민기본소득 vs 농촌기본소득 중복 수령 금지 (하나만 선택)	- 농어민수당과 별개 정책으로 간주되나 재정상 통합 압박 존재	- 기존 공익수당 + 기본소득 (중첩) - '위원회 심의' 거쳐 중복 허용 명문화
설계 논리	동일 성격의 현금성 지원 중복은 재정 낭비라는 입장 견지	제도 목적(보상 vs 권리)이 다르므로 중복 가능하나 재정이 문제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본+추가' 소득 보장 효과 극대화 전략 채택
<b>6. 제도/거버넌스</b>	행정 주도 + 위원회 자문	개별 조례 중심	통합 조례 + 숙의/과학 행정
근거 법규	- 기본소득 기본 조례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기본소득 기본 조례(최근 제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 통합적 근거 및 특례 규정 포함
의사 결정	-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자문) - 도지사 결정 권한 강함	-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 대상자 선정 중심 운영	- 기본소득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 - 중복 지급 여부 및 범위 결정권 부여
공론화	- 정책 축제(박람회) 및 인식 조사, 활동가 교육 - 연구용역 중심의 논의	- 주민청구 조례 운동 등 민간 주도 논의 활발	- '공론화 절차' 조례에 명시 (제6조)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의무화
<b>7. 성과 관리</b>	사후 평가 중심	만족도 조사 중심	사전 설계된 데이터 검증
평가 방식	- 경기연구원 등을 통한 사후 분석 - 정책 효과(소비 등) 위주 분석	- 단순 만족도 조사 및 지급 현황 통계 관리	- '비교집단(통제군)' 운영 의무화 (제11조) - 데이터 수집/환류 강제
글로벌 유사	(도시형, 지역화폐 결합 실험)	미국 알래스카 (PFD)(자원 수익 배당의 원형)	브라질 마리카 (Maricá)(자원 수익+지역화폐+중층적 급여)

표 9.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상세 해설

장/조문	조문 핵심(요지)	작성 이유·핵심 쟁점	참고 근거·연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기본소득 지급으로 생활안정·사회적 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유자원 이익 공유, 지속가능발전 기여	복지 범주를 넘어 ‘지역소멸 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명시함. <b>신재생에너지(공유자원) 이익 공유</b> 를 목적에 포함해 지속가능성·당위성 강화함.	전남 기본조례 목적(생활기반·지역경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지역소멸 목적). 전북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개념 차용. 정부 공모(2025) ‘지역자원 창출형’ 반영.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 취지 연계 가능(김원이 등, 2025)
제2조 정의	① 기본소득: 재산·소득·노동과 무관하게 개인·정기 지급(금전/지역화폐), 시범은 지역·연령·대상 우선 가능 ② 공유자원형 기본소득: 태양광·풍력 등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반 ③ 지역화폐: 전북 지역사랑상품권	기본소득 <b>보편 정의 유지</b> + 시범사업 <b>유연성 단서</b> 확보함. ‘공유자원형’ 별도 정의로 전북형 정체성 및 에너지 조례 연계 강화함.	경기도 기본조례 정의(보편 지급). 전북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정의 참조. 경기도 시범사업 실거주 요건 사례 반영. 정부 공모(지역자원 창출형) 대응
제3조 도지사 책무	기본소득 시책 지속 추진 노력 및 자원 확보. 정책의 인구유입·정착 효과 분석. 기존 사회보장 금전 지원과 관계 정립	단순 지급이 아니라 <b>효과 분석 의무</b> 및 <b>기존 제도와</b> 의 관계 정립 <b>의무</b> 를 명시해 행정 책임성 강화함.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효과 분석). 사회보장기본법(제도 신설 협의 취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연계로 국비·특별회계 확보 의무화 보완 가능(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취지 언급)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은 본 조례 우선. 농어민공익수당 등 타 지원금과의 <b>중복 지급 여부</b> 는 위원회 심의로 결정 가능	경기도(중복 금지)와 달리 전북은 <b>중복 가능성</b> 을 열어 인구소멸 대응의 정책 유연성 확보함. 다만 위원회 심의로 안전장치 등.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중복지원 금지). 전북 농촌기본소득 시범 조례 추진 취지. 경기도 청산면 중복 수령 금지 운영 사례
제2장 계획 수립 및 공론화			
제5조 종합계획(5년)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기본방향·목표, 시범 대상·범위, 타 제도 관계·중복 범위, 지역자원 기반	계획 단계에서 <b>중복 범위와 지역자원 재원</b> 을 명시해 예측 가능성 및 공모 대응력 강화함.	전남 기본조례(지원계획). 전북 마을자치연금 조례(자체수익). 정부 공모(지역자원

장/조문	조문 핵심(요지)	작성 이유·핵심 쟁점	참고 근거·연계
	재원조달(에너지·마을 재원), 효과 분석·평가 포함		창출형) 요건 대응. 특별법안(개발이익 재투자·특별회계) 검토 반영 여지
제6조 공론화	시민참여단·토론회·여론조사 등 공론화 가능. 결과를 정책에 반영 의무	대규모 재정·사회적 영향 정책 특성상 <b>사회적 합의 절차를 조례로 제도화함.</b>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용혜인 등) 취지 반영. 타 지자체 조례의 선언적 한계 보완
제3장 추진 체계			
제7조 기본소득위원회	도지사 소속 위원회 설치. 종합·실행계획, 시범지역·지급액, 타 지원금 중복 범위, 평가결과 활용, 공론화 반영 등 심의	중복 범위를 <b>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해</b> 전복형 운영의 탄력성 확보함. 위원회 실권 강화함.	경기도 기본조례(위원회). 전남 조례는 위원회 있으나 중복 조정 권한 명시 약함(비교 논리)
제8조 정책지원단	연구·조사·데이터 분석 조직 운영. 효과 분석, 공모 대응 논리, 데이터 수집·관리, 통제군 운영 지원	실증·평가·공모 대응을 전담할 <b>전문조직을 기본조례에 격상함.</b>	전북 농촌기본소득 시범 조례(지원단). 정부 공모(성과평가 요구). 경기도는 연구기관이 실질 수행(사례 비교)
제4장 시범사업 및 재정 협력			
제9조 시범사업·우선지원	특정 지역·계층 시범 가능. 인구감소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마을자치연금 마을 우선 선정 가능. 위원회 심의로 공익수당 등과 별개로 추가 지급 가능	전북의 강점(에너지·마을연금)과 연계해 <b>자체 재원형·지속가능 모델</b> 지향함. 중복 지급 근거를 재확인함.	전북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전북 마을자치연금 조례. 경기도 청산면 사례. 정부 공모(지역재원 창출형) 대응
제10조 재정지원·협약	도가 시군 경비 지원 가능. 분담비율·역할 협약 체결. 재정자립도 고려해 차등 적용 가능	재정이 열악한 시군 참여 유도를 위해 <b>협약 기반 탄력 분담 구조</b> 설계함.	경기도 농촌기본소득(분담비율 공고). 전북 농촌기본소득 시범 조례(협약)
제5장 데이터·성과평가			
제11조 데이터 관리	동의 기반 소득·소비·이동 데이터 수집 활용. 통제군(비교집단) 선정·분석 가능	과학적 검증을 위해 <b>비교집단 운영</b> 근거를 명문화함.	경기도 시범 조례(비교주민). 개인정보 알람 절차 등 운영 사례
제12조 효과평가·환류	매년 전문기관 평가 의무. 성과지표(인구유입·소비·행복 등) 개발 적용.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예산에 반영 의무	평가를 형식이 아닌 <b>예산·계획으로 환류</b> 하도록 의무화해 지속성·책임성 강화함.	경기도 기본조례(평가 및 반영). 정부 공모(성과평가 계획) 심사 대응
제6장 재원 및			

장/조문	조문 핵심(요지)	작성 이유·핵심 쟁점	참고 근거·연계
보칙			
제13조 자원 조성	도비·시군비·국비 + 에너지 기금 전입금·개발이익 환수금 활용 가능(공유이익 재원화)	전북형 차별점인 <b>재생에너지 이익 공유</b> 를 자원 조항에 명시해 지속가능성과 수용성 동시 확보함.	전북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기금 용도). 특별법안(개발이익 재투자·특별회계) 명시로 국비 근거 강화 보완 가능(김원이 등, 2025)
제14조 수급권 보호	수급권 양도·담보 제공 금지, 압류 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 목적임.	농어촌기본소득 법률안(윤준병 등) 압류 금지 취지
제15조 지급 중지·환수	부정수급·전출·사망 등 발생 시 지급 중지, 부당 지급액 환수	재정 누수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목적임.	경기도 시범 조례(지급 중지·환수)
제16조 시행규칙 / 부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공포일 시행	집행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여 운영 유연성 확보함.	일반 조례 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상세 해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 내 공유자원을 활용한 이익을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작성 이유]

-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 소멸 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공유자원)’ 이익 공유를 명시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당위성을 확보함.

### [참고 근거]

-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1조: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 의원 등): 지역소멸 방지 목적 명시.
-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개발이익 공유 개념 차용.

### [기타 설명]

- 경기도 기본소득법은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전북안은 전남 조례 및 정부(농식품부) 시범사업의 핵심 취지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명시하여 차별화함.
- 특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2025)’에서 ‘지역재원 창출형(신재생에너지 등)’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목적 조항에 반영함으로써 국비 확보 논리를 강화함.<sup>125)</sup>

---

125) 향후 법적 연계성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취지인 '지산지소형 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별도로 조례의 목적에 명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전북형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전략 산업(에너지자립도시)의 일환임을 강조할 수 있음(김일이 등 27인, 202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연령, 대상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2. “공유자원형 기본소득”이란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말한다.<sup>126)</sup>
3. “지역화폐”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작성 이유]

- 기본소득의 보편적 정의를 유지하되, 시범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둬. 전북만의 ‘공유자원형’ 정의를 신설하여 에너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임.

[참고 근거]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2조: 보편적 지급 정의.
-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개발이익 정의 참조.

[기타 설명]

- 경기도는 ‘재산·소득·노동과 관계없이’라는 보편성을 강조하나, 실제 시범사업(농촌기본소득)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연천군 청산면). 전북안은 이를 반영하여 시범사업 시 대상 제한 가능성을 열어둬.
- 정부 공모계획 상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자원형 기본소득’을 별도로 정의하여 전북형 모델의 정체성을 확립함.

---

126) 향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금 및 제72조에 따른 특별회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전 도민에게 공유하는 기본소득을 포함할 수도 있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sup>127)</sup> ② 도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적 금전 지원 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작성 이유]

- 단순 지급을 넘어 ‘인구 유입 효과 분석’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를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참고 근거]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4조: 정책 효과 분석 의무.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협의 의무.

[기타 설명]

- 경기도는 시범사업 조례에서 ‘정책 효과 분석’을 책무로 규정하고, 실제 전문기관(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정밀한 패널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전북안은 여기에 더해 ‘기존 제도(농민수당 등)와의 관계 정립’을 명시하여, 중복 지급 논란이나 재정 비효율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함.

---

127) 추후 자원 확보의 구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도지사의 책무를 막연한 '자원 확보'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정책과의 연계'로 구체화하여, 국비 및 특별회계 확보 노력을 의무화함(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임: ② 도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인구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지원 시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기본소득의 중복 지급 여부를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작성 이유]

- 경기도(중복 불가 원칙)와 차별화하여,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북은 ‘농어민 공익수당’ 등과 중복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함.

#### [참고 근거]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16조: 타 기본소득과 중복지원 금지.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기존 수당과 별개 지급 추진.

#### [기타 설명]

- 경기도 사례: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 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중복 수령을 금지하여 하나만 선택하게 함(시범사업 지침서).
- 전북형 특징: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당만으로는 인구 유입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중복 지급 허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단,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둠.

## 제2장 계획 수립 및 공론화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시범사업 추진 대상 및 범위
3.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의 관계 설정 및 중복 지급 범위
4.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마을 자체 자원 수익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원 조달 방안<sup>128)</sup>
5. 정책 효과 분석 및 평가 계획

### [작성 이유]

- 종합계획에 ‘중복 지급 범위’와 ‘지역 자원(에너지, 마을 자체 자원) 활용 자원’을 명시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을 도모함.

### [참고 근거]

-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4조: 지원계획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자체 수익 활용 모델.

### [기타 설명]

- 경기도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 조달 방안을 포함함.
- 전북안은 정부 공모사업(농어촌기본소득)의 ‘지역 자원 창출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및 마을 자체 자원 수익을 재원으로 명시하도록 함.

---

12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및 특별회계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제6조(기본소득 공론화)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재원 마련 방안, 지급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도민의 의견을 기본소득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 이유]

-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의 특성상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속의 민주주의 절차를 조례에 제도화함.

[참고 근거]

-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등):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운영.

[기타 설명]

-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소득 공론화법안」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함.
-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 조례에는 명시적인 ‘공론화’ 절차 규정이 없거나 선언적 수준임. 전북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임.

### 제3장 추진 체계 (위원회 및 지원단)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①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변경
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급액 결정
3.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익수당 등 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허용 범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책 효과 분석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공론화 결과의 정책 반영

#### [작성 이유]

-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중복 수급 허용 범위’를 명시하여, 전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부여함.

#### [참고 근거]

- 「경기도 기본 소득 기본 조례」 제7조: 위원회 기능.

#### [기타 설명]

- 경기도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구 성격이나, 전북안은 중복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 전남 조례 역시 위원회를 두나, 구체적인 중복 수급 조정 권한은 명시하지 않음.

제8조(기본소득 정책지원단 운영)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의 전문적인 연구·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정책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패널 조사 등)
2.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 논리 개발 및 시범사업 성과 지표 개발
3. 데이터 수집·관리 및 비교집단(통제군) 운영 지원

[작성 이유]

- 실무 연구를 전담할 조직을 명문화함. 특히 정부 시범 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논리 개발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부여함.

[참고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조례」 제10조: 정책지원단 근거.
- 정부 공모계획: 성과평가 계획 요구.

[기타 설명]

-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등이 실질적인 지원단 역할을 수행함.
- 전북안은 기존 농촌기본소득 조례의 장점인 '정책지원단'을 기본 조례로 격상하여, 데이터 분석 및 정부 공모 대응의 전문성을 확보함.

## 제4장 시범사업 및 재정 협력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우선지원) ① 도지사는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구 감소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발전지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자치연금 운영 마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sup>129)</sup> ③ 시범사업의 경우,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농어민 공익수당 등과 별개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작성 이유]

- 전북의 에너지 및 마을연금 조례와 연계하여 ‘전북형 모델’을 구체화하고, 중복 지급의 근거를 재확인함.

### [참고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조례」: 발전지구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마을 연금.

### [기타 설명]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인구소멸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
- 전북안: 단순 인구소멸지역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와 ‘마을연금 운영 마을’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여, 자체 자원 조달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지향함(정부의 지역자원 창출형 공모 요건 충족).

---

129) 추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할 수 있음: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지정된 배후정주지구 또는 마을자치연금 운영 마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및 협약)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해당 시장·군수와 재정 부담 비율, 역할 부담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재정 부담 비율은 시·군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작성 이유]

-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약’을 통한 유연한 재정 부담 구조를 설계함.

[참고 근거]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11조: 재정부담 비율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협약 체결 명시.

[기타 설명]

- 경기도는 도지사가 부담 비율을 제시(공고)하는 하향식 방식이 강함.
- 전북안은 시·군의 재정 여건이 열악함을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 기초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임.

## 제5장 데이터 관리 및 성과 평가

제11조(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하여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소득, 소비, 이동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과학적 검증을 위하여 기본소득을 지급 받지 않는 비교집단(통제군)을 선정하여 조사·분석할 수 있다.

### [작성 이유]

- 정책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했던 ‘비교주민’ 제도를 도입, 데이터 확보의 근거 마련.

### [참고 근거]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7조: 비교주민 선정.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경기도): 데이터 분석 근거.

### [기타 설명]

- 경기도는 시범사업 조례에 ‘비교주민’을 명시하고 실제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패널 조사를 수행함.
- 전북안은 이를 기본 조례에 담아 데이터 행정의 기반을 강화함.

제12조(정책효과 평가 및 환류) ① 도지사는 매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에는 인구 유입, 지역 내 소비 변화, 주민 행복도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분에 반영(환류)하여야 한다.

[작성 이유]

-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계획에 반영되도록 ‘환류’를 의무화함.

[참고 근거]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8조: 평가 실시 및 반영.
- 정부 공모계획: 성과평가 계획의 구체성 요구.

[기타 설명]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시 ‘성과평가 계획’이 주요 심사 항목임. 이에 전복안은 평가와 환류를 의무화하여 공모 선정 경쟁력을 높임.

## 제6장 재원 및 보칙

제13조(재원 조성 및 관리) ① 기본소득의 재원은 도비, 시·군비, 국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전입금 및 지역 개발 이익 환수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sup>130)</sup>

### [작성 이유]

- 전북형 기본소득의 핵심 차별점인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재원 조달 방법으로 명시함.

### [참고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조례」: 기금의 용도.

### [기타 설명]

- 기존 지자체(경기, 전남) 조례는 일반회계 중심이나, 전북안은 ‘에너지 기금’을 명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임.

---

130) 추후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수 있음; 자체 기금등에 의존하는 한계를 넘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개발이익 재투자)와 제72조(특별회계)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함.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핵심 조항임 (김원이 등 27인, 2025. 특별법안).

제14조(수급권 보호 및 압류 금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작성 이유]

-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

[참고 근거]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제18조: 압류 금지.

[기타 설명]

- 국회 발의된 다수의 기본소득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조항으로, 수급자의 실질적 혜택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부정 수급,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작성 이유]

- 재정 누수 방지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

[참고 근거]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14조: 지급 중지 및 환수.

[기타 설명]

- 경기도는 전출, 사망,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 중 거주 요건 위반을 엄격히 관리함. 전북안도 이를 준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1. 법률안 및 조례/조례안/공고문

134311716\_1840.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_210402.pdf

2021-2133\_(공고문) 2022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

2022-266\_2022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사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_220207

2022-510\_2022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일정  
공고(공고문)\_220307

2022-614\_2022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일정  
공고(공고문)-수정\_220314

2023-422\_2023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서\_230221

2023-422\_2023년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문\_230221

2024-423\_2024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서(시군시달)\_240220

2024-423\_2024년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문\_240220

2025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 공고

2025-236\_2025년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문\_250131

2025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안)\_250131

250211\_민주연구원\_[사례집] 기본사회 소책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경기도조례)(제6642호)(20200715)\_제정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경기도조례)(제6930호)(20210316)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기도기획재정위원회)\_200612\_본회의통과\_200624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경기도조례)(제5962호)(20181113)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경기도조례)(제6116호)(20190429)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경기도조례)(제6930호)(20210316)\_폐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사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_220207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제7226호)(202111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제7226호)(20211102)\_현재

규제영향분석서(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_210304

기본사회\_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제3차 토론회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_2025061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_20250612\_정무위원회\_검토보고서\_20250801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_20250612\_제22대국회  
제428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전체회의) (2025.08.2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81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 공고  
(2025.9.1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의원 등 11인)\_20241208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의원 등 11인)\_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의원 등 11인)\_20241220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_20250912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_20250708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의원 등 13인)\_2024120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김원이 등 27인. 2025.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전라남도조례)(제6229호)\_20250403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4836호)(20210101)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089호)(20220415)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144호)(20221104).pdf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4691호)(20191011)\_제정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399호)(20240118)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509호)(2024053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723호)(20250307)\_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849호)(20250808)\_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592호)(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548호)(20240705)

제2021-16호(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_210304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의원·신정훈의원 등  
29인)\_2025082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의원·신정훈의원 등  
29인)\_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2025.11.1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의원·신정훈의원 등  
29인)\_행정안전위원회\_검토보고서\_20251101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_20250626

## 2. 의회 회의 자료

### 1) 전라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79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7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7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9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12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2022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7회 제1차 본회의, 2023년 2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3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제1차 본회의, 2023년 7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5회 제5차 농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11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6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3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6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1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2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7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3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7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7월 25일

## 2)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50회 제2차 본회의, 2021.02.23  
경기도의회, 제351회 제2차 본회의, 2021.04.14  
경기도의회, 제351회 제3차 본회의, 2021.04.15  
경기도의회, 제351회 제4차 본회의, 2021.04.29  
경기도의회, 제352회 제2차 본회의, 2021.06.09  
경기도의회, 제352회 제3차 본회의, 2021.06.10  
경기도의회,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18  
경기도의회, 제353회 제2차 본회의, 2021.07.20  
경기도의회, 제354회 제4차 본회의, 2021.09.15  
경기도의회, 제356회 제1차 본회의, 2021.11.02  
경기도의회, 제356회 제2차 본회의, 2021.11.03  
경기도의회, 제356회 제3차 본회의, 2021.11.04  
경기도의회, 제35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경기도의회, 제356회 제5차 본회의, 2021.12.16  
경기도의회, 제35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16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1차 본회의, 2022.02.07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 2022.03.22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2차 본회의, 2022.03.23  
경기도의회, 제3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24  
경기도의회, 제360회 제2차 본회의, 2022.06.29  
경기도의회, 제363회 제3차 본회의, 2022.09.22  
경기도의회, 제363회 제4차 본회의, 2022.10.07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1차 본회의, 2022.11.01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22.11.02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8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30  
경기도의회, 제367회 제2차 본회의, 2023.03.15  
경기도의회, 제367회 제3차 본회의, 2023.03.16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2차 본회의, 2023.06.14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본회의, 2023.06.15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23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26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1차 본회의, 2023.09.05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14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15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16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0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4차 본회의, 2023.09.21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2차 본회의, 2023.11.08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1.29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1.30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1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5차 본회의, 2023.12.21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21  
경기도의회, 제373회 제3차 본회의, 2024.02.20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 2024.06.12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 2024.06.27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2차 본회의, 2024.09.03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9.20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9.21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4차 본회의, 2024.11.28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3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5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6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7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12  
경기도의회, 제380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27  
경기도의회, 제381회 제1차 본회의, 2024.12.30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25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 2025.06.27.

### 3)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53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날짜 미상)  
 전라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1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1년 11월 4일 (추정)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1년 11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8일  
 전라남도의회, 제359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59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2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64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7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64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7월 (날짜 미상)  
 전라남도의회, 제3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7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9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29일  
 전라남도의회, 제366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68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3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70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차 교육위원회, 2023년 11월 (날짜 미상)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5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10월 17일  
전라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11월 7  
일  
전라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11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8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88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8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88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3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4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4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9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5월 8일  
전라남도의회, 제390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개회식 본회의, 2025년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5년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7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5년 7월 (날짜 미상)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7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3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9월 9일

## 2. 문헌/자료 상세링크URL (알파벳순)

<https://alternative.house/20230427-basic-income-financing-plan-yoo/>

[https://api.resourcegovernanceindex.org/system/documents/documents/000/000/505/original/2021\\_RGI\\_Mexico\\_mining\\_profile\\_English.pdf?1631086355](https://api.resourcegovernanceindex.org/system/documents/documents/000/000/505/original/2021_RGI_Mexico_mining_profile_English.pdf?1631086355)

<https://asgam.com/2021/04/12/macau-government-to-expedite-wealth-partaking-scheme-in-2021/>

<https://astanatimes.com/2023/09/kazakhstans-national-fund-to-allocate-funds-to-children/>

<https://basicincome.org/news/2025/02/ubi-taiwans-single-parent-basic-income-reaches-a-new-milestone/>

<https://basicincome.org/topic/wealth-partaking-scheme/>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dallas-targeted-eviction-prevention-program-fund/>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eastern-band-of-cherokee-indians-casino-revenue-fund/>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family-goal-fund-new-york-city/>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houston-equity-fund/>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san-francisco-housing-stability-fund/>

<https://borgenproject.org/universal-basic-income-in-iran/#:~:text=Iran%20started%20their%20universal%20basic,income%20per%20person%20per%20day>

<https://bristoluniversitypressdigital.com/gsc/view/journals/gscj/4/2/article-p208.xml>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https://corralrosales.com/en/amendments-to-general-regulations-of-t>

[he-mining-law/](#)  
<https://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https://d-nb.info/1042713464/34>  
<https://ebci.com/>  
<https://eiti.org/countries/ecuador>  
<https://eiti.org/countries/peru>  
<https://eiti.org/countries/zambia>  
<https://eiti.org/documents/facing-resource-curse-norways-oil-development-program>  
[https://en.wikipedia.org/wiki/Chinggis\\_Fund](https://en.wikipedia.org/wiki/Chinggis_Fund)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27s\\_Account\\_Program\\_\(Saudi\\_Arabia\)](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27s_Account_Program_(Saudi_Arabia))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_Potawatomi\\_Nation](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_Potawatomi_Nation)  
[https://en.wikipedia.org/wiki/Shakopee\\_Mdewakanton\\_Sioux\\_Community](https://en.wikipedia.org/wiki/Shakopee_Mdewakanton_Sioux_Community)  
[https://en.wikipedia.org/wiki/Subsidies\\_in\\_Iran](https://en.wikipedia.org/wiki/Subsidies_in_Iran)  
[https://en.wikipedia.org/wiki/Timor-Leste\\_Petroleum\\_Fund](https://en.wikipedia.org/wiki/Timor-Leste_Petroleum_Fund)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by\\_country#:~:text=Iran%20was%20the%20first%20country,to%20reduce%20inequality%20and%20poverty](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by_country#:~:text=Iran%20was%20the%20first%20country,to%20reduce%20inequality%20and%20poverty)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  
[https://en.wikipedia.org/wiki/Wealth\\_Partaking\\_Scheme](https://en.wikipedia.org/wiki/Wealth_Partaking_Scheme)  
<https://f4gi.org/pilot/chicago-future-fund/>  
<https://f4gi.org/pilot/community-love-fund/>  
<http://farmbincome.gg.go.kr/contents/page/introducepolicy2/view?contentsId=1013>  
<https://farmbincome.gg.go.kr/main>  
[https://gropedia.com/page/timor\\_leszte\\_petroleum\\_fund](https://gropedia.com/page/timor_leszte_petroleum_fund)  
<https://guaranteedincome.us/baltimore>  
<https://ideas.repec.org/p/zbw/diedps/152016.html>

<https://international.thenewslens.com/article/180994?plan/>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32329220930773>

<https://namu.wiki/w/자원의%20저주>

<https://natural-resources.canada.ca/natural-resources-indigenous-peoples/national-benefits-sharing-framework>

<https://neweconomics.org/2002/11/plugging-the-leaks>

<https://new-economicsf.files.svdcn.com/production/files/money-trial.pdf>

<https://news.gov.bc.ca/factsheets/province-first-nations-pursue-economic-development>

<https://news.nate.com/view/20250925n30866?mid=n1101>

<https://pfd.alaska.gov/>

[https://pfd.alaska.gov/docs/permanentfunddividendlibraries/annual-reports/2023-pfd-annual-report.pdf?sfvrsn=6f6d9c6c\\_1](https://pfd.alaska.gov/docs/permanentfunddividendlibraries/annual-reports/2023-pfd-annual-report.pdf?sfvrsn=6f6d9c6c_1)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9638268/>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reforming-colombias-extractive-sector-royalty-distributions-key-changes-and-coronavirus>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resource-governance-index-drives-reform-uganda>

[https://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nrgi\\_undp\\_exec-summary.pdf](https://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nrgi_undp_exec-summary.pdf)

<https://resourcegovernanceindex.org/country-profiles/UGA/oil-gas>

[https://scholar.law.columbia.edu/faculty\\_scholarship/1764/](https://scholar.law.columbia.edu/faculty_scholarship/1764/)

<https://sdgs.un.org/2030agenda>

<https://sf.gov/topics/housing>

<https://shakopeedakota.org/>

<https://snuacwebzine.snu.ac.kr/?p=6188>

<https://snuacwebzine.snu.ac.kr/?p=6188>

<https://takunseminar.ws.hosei.ac.jp/wp/wp-content/uploads/2014/09/Paper-for-ARSA-2014revised-version-by-OKANOUCHI.pdf>

<https://truthout.org/articles/this-program-gives-direct-cash-support-t>

[o-incarcerated-women/](#)  
<https://ubitaiwan.org/en/>  
<http://weforum.org/stories/2025/06/japan-local-resources-power-resilient-future-through-tradition-and-innovation/>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2Fpol.20190299>  
<https://www.almendron.com/tribuna/wp-content/uploads/2016/04/Report-on-Unconditional-Cash-Transfer-Pilot-Project-in-Madhya-Pradesh.pdf>  
<https://www.bia.gov/sites/default/files/dup/assets/as-ia/raca/pdf/14%20-%20Quapaw%20Tribe.pdf>  
[http://www.bignam.org/BIG\\_pilot.html](http://www.bignam.org/BIG_pilot.html)  
<https://www.blackresiliencefund.com/>  
<https://www.bog.gov.gh/ghana-petroleum-funds/about-petroleum-fund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mongolias-quest-to-balance-human-development-in-its-booming-mineral-based-economy/>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5/11/tribal-casinos.html?fbclid=IwY2xjawPWWDpleHRuA2F1bQIxMABicmlkETFkRzZHeDBZZ09wRHU5Z1do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g4cRaOlGfGjMWWUzG3KYncTW3pVAKI9JQBOMSi50MH8HyU7areVV-fv6lnB\\_aem\\_BeklblzhfiBjzFZipHhafw](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5/11/tribal-casinos.html?fbclid=IwY2xjawPWWDpleHRuA2F1bQIxMABicmlkETFkRzZHeDBZZ09wRHU5Z1do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g4cRaOlGfGjMWWUzG3KYncTW3pVAKI9JQBOMSi50MH8HyU7areVV-fv6lnB_aem_BeklblzhfiBjzFZipHhafw)  
<https://www.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https://www.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https://www.deseret.com/2004/11/1/19858947/kuwaitis-get-oil-bonus/>  
<https://www.economicsecurityil.org/chicago-future-fund>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43247>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43247>  
<http://www.ontario.ca/page/resource-revenue-sharing>  
<https://www.gg.go.kr/>  
<https://www.gi305.org/>

<https://www.gov.wales/basic-income-pilot-care-leavers-annual-report-2023-20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9895.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9895.html>

<https://www.ictinc.ca/blog/resource-revenue-sharing-and-aboriginal-peoples>

<https://www.iea.org/policies/18033-canada-national-benefits-sharing-framework>

<https://www.iksan.go.kr/>

<https://www.iksan.go.kr/>

<https://www.ilo.org/media/410956/download>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6/10/cf-timor-lestes-opportunity-to-turn-its-wealth-into-economic-development>

<https://www.immigration.gov.tw/5475/5478/141457/141990/400936/>

<https://www.investopedia.com/terms/k/kazakhstan-national-fund.asp>

<https://www.ippr.org/articles/a-citizens-income-and-wealth-fund-for-the-uk-lessons-from-alaska>

<https://www.jainfamilyinstitute.org/projects/marica-basic-income/>

<https://www.kuna.net.kw/ArticleDetails.aspx?id=2138389&language=en>

<https://www.lifeinnorway.net/oil-fund-facts/#:~:text=The%20fund's%20returns%20have%20made%20significant%20contributions,supporting%20various%20public%20services%20and%20welfare%20programs>

<https://www.local2030.org/library/221/Natural-Resource-Revenue-Sharing.pdf>

<https://www.mayorsforagi.org/>

<https://www.mof.gov.mn/>

<https://www.nbim.no/en/about-us/about-the-fund/>

<https://www.nbim.no/en/news-and-insights/submissions-to-ministry/2025/review-of-norges-banks-management-of-the-government-pension-fund-global/>

<https://www.nbim.no/en/news-and-insights/submissions-to-ministry/2025/review-of-norges-banks-management-of-the-government-pension-fund-global/>

[on-fund-global/](#)

<https://www.nigc.gov/office-of-general-counsel/laws-and-regulations/indian-gaming-regulatory-act/>

<https://www.nytimes.com/2012/08/09/us/more-casinos-and-internet-gambling-threaten-shakopee-tribe.html>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9/11/using-extractive-revenues-for-sustainable-development\\_cd22e52c/a9332691-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9/11/using-extractive-revenues-for-sustainable-development_cd22e52c/a9332691-en.pdf)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new-evidence-on-the-effects-of-services-trade-at-the-worker-level\\_5241e06a/39ef4a9b-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new-evidence-on-the-effects-of-services-trade-at-the-worker-level_5241e06a/39ef4a9b-en.pdf)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support-materials/2020/10/rural-well-being\\_8d2d0140/Rural-Well-Being-policy-highlights-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support-materials/2020/10/rural-well-being_8d2d0140/Rural-Well-Being-policy-highlights-en.pdf)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o-benefit-from-plenty-lessons-from-chile-and-norway\\_238030862800.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o-benefit-from-plenty-lessons-from-chile-and-norway_238030862800.html)

[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12/05/WP\\_M\\_46.pdf](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12/05/WP_M_46.pdf)

<https://www.potawatomi.org/>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17304287?via%3Dihub>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17304287?via%3Dihub>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29513347>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29513347>

<https://www.sf.gov/departments-housing-stability-fund-oversight-board-about>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ressource>

[.ressourceId=53854](#)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ecuador-mining>

[https://www.ugandainvest.go.ug/wp-content/uploads/2016/02/Uganda\\_Public\\_Finance\\_Management\\_Act\\_2015\\_3.pdf](https://www.ugandainvest.go.ug/wp-content/uploads/2016/02/Uganda_Public_Finance_Management_Act_2015_3.pdf)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payments-ecosystem-services-getting-started>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10/30/20938236/basic-income-brazil-marica-suplicy-workers-party>

<https://www.wsaw.com/2021/06/24/ho-chunk-legacy-payments-continue-uninterrupted/>

<https://www.yeonggwang.g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16500054>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16500054>

<http://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natural-resource-stewardship/consulting-with-first-nations/first-nations-negotiations/economic-and-community-development-agreements>

<https://www2.gov.bc.ca/gov/content/industry/forestry/forest-tenures/timber-harvesting-rights/first-nations-woodland-licence>

### 3. 문헌/자료 상세링크URL (본문 인용순)

<https://sdgs.un.org/2030agenda>

<https://www.ilo.org/media/410956/download>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support-materials/2020/10/rural-well-being\\_8d2d0140/Rural-Well-Being-policy-highlights-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support-materials/2020/10/rural-well-being_8d2d0140/Rural-Well-Being-policy-highlights-en.pdf)

<https://www.ippr.org/articles/a-citizens-income-and-wealth-fund-for-the-uk-lessons-from-alaska>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https://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2Fpol.20190299>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https://pfd.alaska.gov/>

<https://www.blackresiliencefund.com/>

<https://guaranteedincome.us/baltimore>

<https://www.mayorsforagi.org/>

<https://www.economicsecurityil.org/chicago-future-fund>

<https://f4gi.org/pilot/chicago-future-fund/>

<https://f4gi.org/pilot/community-love-fund/>

<https://truthout.org/articles/this-program-gives-direct-cash-support-to-incarcerated-women/>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dallas-targeted-eviction-prevention-program-fund/>

<https://ebci.com/>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eastern-band-of-choerokee-indians-casino-revenue-fund/>

<https://www.nigc.gov/office-of-general-counsel/laws-and-regulations/indian-gaming-regulatory-act/>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5/11/tribal-casinos.html?fbclid=IwY2xjawPWWDpleHRuA2F1bQIxMABicmlkETFkRzZHeDBZZ09wRHU5Z1doc3J0YwZhcHBfaWQQMjlyMDM5MTc4ODIwMDg5MgABHg4cRaOlGfGjMWWUzG3KYncTW3pVAKl9JQBOMSi50MH8HyU7areVV-fv6lnB\\_aem\\_BeklblzhfiBjzFZipHhafw](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5/11/tribal-casinos.html?fbclid=IwY2xjawPWWDpleHRuA2F1bQIxMABicmlkETFkRzZHeDBZZ09wRHU5Z1doc3J0YwZhcHBfaWQQMjlyMDM5MTc4ODIwMDg5MgABHg4cRaOlGfGjMWWUzG3KYncTW3pVAKl9JQBOMSi50MH8HyU7areVV-fv6lnB_aem_BeklblzhfiBjzFZipHhafw)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family-goal-fund-new-york-city/>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houston-equity-fund/>

<https://www.sf.gov/departments-housing-stability-fund-oversight-board-about>

<https://sf.gov/topics/housing>

<https://basicincomepilots.com/listing/san-francisco-housing-stability-fund/>

<https://www.mof.gov.mn/>

<https://www.brookings.edu/articles/mongolias-quest-to-balance-human-development-in-its-booming-mineral-based-economy/>

[https://en.wikipedia.org/wiki/Chinggis\\_Fund](https://en.wikipedia.org/wiki/Chinggis_Fund)

<https://www.gi305.org/>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9895.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16500054>

<https://www.yeonggwang.go.kr/>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29513347>

<https://www.iksan.go.kr/>

<https://snuacwebzine.snu.ac.kr/?p=6188>

<http://farmbincome.gg.go.kr/contents/page/introducepolicy2/view?contentsId=1013>

<https://www.gg.go.kr/>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10/30/20938236/basic-income-brazil-marica-supply-workers-party>

[https://en.wikipedia.org/wiki/Subsidies\\_in\\_Iran](https://en.wikipedia.org/wiki/Subsidies_in_Iran)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by\\_country#:~:text=Iran%20was%20the%20first%20country,to%20reduce%20inequality%20and%20poverty](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by_country#:~:text=Iran%20was%20the%20first%20country,to%20reduce%20inequality%20and%20poverty)

<https://borgenproject.org/universal-basic-income-in-iran/#:~:text=Iran%20started%20their%20universal%20basic,income%20per%20person%20per%20day>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ressource.ressourceId=53854>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27s\\_Account\\_Program\\_\(Saudi\\_Arabia\)](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27s_Account_Program_(Saudi_Arabia))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9638268/>

<https://www.wsaw.com/2021/06/24/ho-chunk-legacy-payments-continue-uninterrupted/>

[https://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nrgi\\_and\\_p\\_exec-summary.pdf](https://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nrgi_and_p_exec-summary.pdf)

<https://shakopeedakota.org/>

<https://www.nytimes.com/2012/08/09/us/more-casinos-and-internet-gambling-threaten-shakopee-tribe.html>

[https://en.wikipedia.org/wiki/Shakopee\\_Mdewakanton\\_Sioux\\_Community](https://en.wikipedia.org/wiki/Shakopee_Mdewakanton_Sioux_Community)

<https://www.bia.gov/sites/default/files/dup/assets/as-ia/raca/pdf/14%20-%20Quapaw%20Tribe.pdf>

<https://www.potawatomi.org/>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_Potawatomi\\_Nation](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_Potawatomi_Nation)

[https://en.wikipedia.org/wiki/Wealth\\_Partaking\\_Scheme](https://en.wikipedia.org/wiki/Wealth_Partaking_Scheme)

<https://asgam.com/2021/04/12/macau-government-to-expedite-wealth-partaking-scheme-in-2021/>

<https://basicincome.org/topic/wealth-partaking-scheme/>

<https://d-nb.info/1042713464/34>

<https://www.kuna.net.kw/ArticleDetails.aspx?id=2138389&language=en>

<https://www.deseret.com/2004/11/1/19858947/kuwaitis-get-oil-bonus/>

<https://www.nbim.no/en/about-us/about-the-fund/>

<https://www.nbim.no/en/news-and-insights/submissions-to-ministry/2025/review-of-norges-banks-management-of-the-government-pension-fund-global/>

<https://www.lifeinnorway.net/oil-fund-facts/#:~:text=The%20fund's%20returns%20have%20made%20significant%20contributions,supporting%20various%20public%20services%20and%20welfare%20programs>

<https://namu.wiki/w/자원의%20저주>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o-benefit-from-plenty-lessons-from-chile-and-norway\\_238030862800.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o-benefit-from-plenty-lessons-from-chile-and-norway_238030862800.html)

<https://eiti.org/documents/facing-resource-curse-norways-oil-development-program>

<https://www.nbim.no/en/news-and-insights/submissions-to-ministry/2025/review-of-norges-banks-management-of-the-government-pension-fund-global/>

<https://ideas.repec.org/p/zbw/diedps/152016.html>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ecuador-mining>

<https://corralrosales.com/en/amendments-to-general-regulations-of-the-mining-law/>

<https://eiti.org/countries/ecuador>

[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12/05/WP\\_M\\_46.pdf](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12/05/WP_M_46.pdf)

[https://api.resourcegovernanceindex.org/system/documents/documents/000/000/505/original/2021\\_RGI\\_Mexico\\_mining\\_profile\\_English.pdf?1631086355](https://api.resourcegovernanceindex.org/system/documents/documents/000/000/505/original/2021_RGI_Mexico_mining_profile_English.pdf?1631086355)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resource-governance-index-drives-reform-uganda>

<https://resourcegovernanceindex.org/country-profiles/UGA/oil-gas>

<https://www.local2030.org/library/221/Natural-Resource-Revenue-Sharing.pdf>

[https://www.ugandainvest.go.ug/wp-content/uploads/2016/02/Uganda\\_Public\\_Finance\\_Management\\_Act\\_2015\\_3.pdf](https://www.ugandainvest.go.ug/wp-content/uploads/2016/02/Uganda_Public_Finance_Management_Act_2015_3.pdf)

<https://www.investopedia.com/terms/k/kazakhstan-national-fund.asp>

<https://astanatimes.com/2023/09/kazakhstans-national-fund-to-allocate-funds-to-children/>

<https://eiti.org/countries/zambi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9>

[/11/using-extractive-revenues-for-sustainable-development\\_cd22e52c/a9332691-en.pdf](#)

<https://www.bog.gov.gh/ghana-petroleum-funds/about-petroleum-funds/>

<https://bristoluniversitypressdigital.com/gsc/view/journals/gscj/4/2/article-p208.xml>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6/10/cf-timor-lestes-opportunity-to-turn-its-wealth-into-economic-development>

[https://en.wikipedia.org/wiki/Timor-Leste\\_Petroleum\\_Fund](https://en.wikipedia.org/wiki/Timor-Leste_Petroleum_Fund)

[https://gropedia.com/page/timor\\_leste\\_petroleum\\_fund](https://gropedia.com/page/timor_leste_petroleum_fund)

<https://eiti.org/countries/peru>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reforming-colombias-extractive-sector-royalty-distributions-key-changes-and-coronavirus>

[http://www.bignam.org/BIG\\_pilot.html](http://www.bignam.org/BIG_pilot.html)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43247>

<https://centreforpublicimpact.org/public-impact-fundamentals/basic-income-grant-big-in-namibia/>

<https://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43247>

<https://natural-resources.canada.ca/natural-resources-indigenous-peoples/national-benefits-sharing-framework>

<https://www.iea.org/policies/18033-canada-national-benefits-sharing-framework>

<http://www.ontario.ca/page/resource-revenue-sharing>

<http://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natural-resource-stewardship/consulting-with-first-nations/first-nations-negotiations/economic-and-community-development-agreements>

<https://www.ictinc.ca/blog/resource-revenue-sharing-and-aboriginal-peoples>

<https://news.gov.bc.ca/factsheets/province-first-nations-pursue-economic-development>

<https://www2.gov.bc.ca/gov/content/industry/forestry/forest-tenures/timber-harvesting-rights/first-nations-woodland-licence>

[- 222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payments-ecosystem-services-</a></p></div><div data-bbox=)

[getting-started](#)

<https://takunseminar.ws.hosei.ac.jp/wp/wp-content/uploads/2014/09/Paper-for-ARSA-2014revised-version-by-OKANOUCI.pdf>

<http://weforum.org/stories/2025/06/japan-local-resources-power-resilient-future-through-tradition-and-innovation/>

<https://international.thenewslens.com/article/180994?plan/>

<https://www.immigration.gov.tw/5475/5478/141457/141990/400936/>

<https://basicincome.org/news/2025/02/ubi-taiwans-single-parent-basic-income-reaches-a-new-milestone/>

<https://ubитайwan.org/en/>

<https://farmbincome.gg.go.kr/main>

<https://news.nate.com/view/20250925n30866?mid=n11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9895.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16500054>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29513347>

<https://www.iksan.go.kr/>

<https://snuacwebzine.snu.ac.kr/?p=6188>

<https://www.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

<https://www.degrowth.info/blog/universal-basic-income-in-india-a-promising-experience>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

<https://www.almendron.com/tribuna/wp-content/uploads/2016/04/Report-on-Unconditional-Cash-Transfer-Pilot-Project-in-Madhya-Pradesh.pdf>

<https://farmbincome.gg.go.kr/main>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3/mechanics-of-replacing-benefits-systems-with-a-basic-income_850fc0f3/ec38a279-en.pdf)

[850fc0f3/ec38a279-en.pdf](#)  
[https://pfd.alaska.gov/docs/permanentfunddividendlibraries/annual-reports/2023-pfd-annual-report.pdf?sfvrsn=6f6d9c6c\\_1](https://pfd.alaska.gov/docs/permanentfunddividendlibraries/annual-reports/2023-pfd-annual-report.pdf?sfvrsn=6f6d9c6c_1)  
<https://alternative.house/20230427-basic-income-financing-plan-yoo/>  
<https://neweconomics.org/2002/11/plugging-the-leaks>  
<https://new-economicsf.files.svdcdn.com/production/files/money-trial.pdf>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new-evidence-on-the-effects-of-services-trade-at-the-worker-level\\_5241e06a/39ef4a9b-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new-evidence-on-the-effects-of-services-trade-at-the-worker-level_5241e06a/39ef4a9b-en.pdf)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17304287?via%3Dihub>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17304287?via%3Dihub>  
<https://www.gov.wales/basic-income-pilot-care-leavers-annual-report-2023-2024>  
<https://www.jainfamilyinstitute.org/projects/marica-basic-income/>  
[https://scholar.law.columbia.edu/faculty\\_scholarship/1764/](https://scholar.law.columbia.edu/faculty_scholarship/1764/)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32329220930773>

#### 4. 기사/단행본/논문/보고서 (국내)

- 강성수. (2025).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아시아경제, 2025.09.25.
- 금민 외. (2021).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도
- 김동욱. (2021).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고 연금도 받고..., 세계일보, 2021.03.29.
- 김주영.오병기. (2025). 재일동반기본소득모델의 사례와 전남의 대응 방향. JINI 이슈리포트(2025.6.23.).
- 박경철, (2016). 충남형 농촌주민기본소득제 도입 연구. 충남연구원.
- 박경철. (2024). 농촌마을 공동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영향분석. 농촌지도와개발(vol.31, No.4).
- 신기현. (2019).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험과 농민수당 도입 경향.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
- 신기현. (2021). 한국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평가에 관한 연구: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Vol.26, No.1.
- 신기현. (2022).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설계와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
- 신기현. (2023). Kie, Hyun Shin. "Is a Sustainable Basic Income Possible: Comparative Analysis of Sustainability of 3 Pilots Related to Rural Areas in Korea" Country Case Studies on Basic Income BIEN Congress in Seoul, 2023.
- 신기현. (2024). 한국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
- 신안군. (2022). 신안소식(2022 여름, Vol.83)
- 신안군. (2024). 2024년 신안군 정부혁신 실행계획.햇빛연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2024.4)
- 양태석. (2024). [지역화폐] 6,000억 시장의 생활 플랫폼, 부여 굿드래페이. [지방정부] vo.39.
- 여수시. (2025).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 한국지방행정발전연구원.
- 오병기 외. (2019).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광주전남연구원.

유승경. (2023). 중앙/지자체의 산업정책 성과 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토론회 자료집.

유영성 외. (2021).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2022년~2026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경기연구원. 2021.

윤형중. (2023). 경기도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구의 설계와 결과 \_22nd BIEN Congress.pdf

장한일 외. (202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 분석연구: 1차년도 보고서.

LAB2050. (2025). 영암군 농촌기본수당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5. 기사/단행본/논문/보고서 (국외)

- Adam P. Marshall, Daniel W. O'Neill. (2018). The Bristol Pound - A tool for localisation. *Ecological Economics*. Volume 146, April
- Ayala-García, J., & Dall'erba, S. (2021). The natural resource curse: Evidence from the Colombian municipalities. *Papers in Regional Science*, 100(2), 581-603.
- Roy, Brotoni. (2016). "Universal Basic Income in India ? a promising experience," <https://degrowth.info/>
- De Wispelaere, Jurgen. (2020). "The Struggle for Strategy: On the Politics of Basic Income Trials". *Politics & Society*, 48(2).
- Standing, Guy. (2021). Basic Income Pilots: Uses, Limitations and Design Principles, *Basic Income Stud* 2021; 16(1): 75-99.
- ILO. (2019).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Work for a brighter future.
- Indigenous Corporate Training Inc. (2013). Resource revenue sharing and Aboriginal people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Timor-Leste's opportunity to turn its wealth into economic development. 2025.06.10.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3). Ecuador - Mining. U.S. Department of Commerce.
- Jain Family Institute. (2022). The Marica Basic Income Evaluation. JFI.
- Shin, Kie Hyun. (2023). "Is a Sustainable Basic Income Possible: Comparative Analysis of Sustainability of 3 Pilots Related to Rural Areas in Korea" Country Case Studies on Basic Income BIEN Congress in Seoul, 2023
- KlasRobinson Q.E.D. (2012, May 15). Quapaw Tribe of Oklahoma: Economic impact of Downstream Casino Resort. Bureau of Indian Affairs
-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2021). Uganda: Oil and gas (2021 Resource Governance Index).
- NEF(New Economics Foundation). (2002). Plugging the Leaks: Making the most of every pound.
- OECD. (2018). "Mechanics of replacing benefits systems with a basic

- incom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 OECD. (2020). Rural Well-being: Geography of Opportunities.
- OECD. (2025). New Evidence on the Effects of Services Trade at the Worker Level.
- Okanouchi, T. (2014). The Idea of Basic Income Guarantee in Rural Japan. In Paper for ARSA Conference in Laos.
- Prochazka, T. (2025). UBI Taiwan’s single-parent basic income reaches a new ‘milestone’. Basic Income Earth Network. 2025.02.07.
- Sabel, Charles F. &Zeitlin, Jonathan. (2012). "Experimentalist Governance". The Oxford Handbook of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Sacks, Justin. (2002). The Money Trail: Measuring your impact on the local economy using LM3. New Economics Foundation. 2002.;
- State of Alaska. (2023). Department of Revenue. PERMANENT FUND DIVIDEND DIVISION: Annual Report 2023.
- Torry, Malcolm. (2017). What’s a definition? And how should we define ‘Basic Income’? A paper for the BIEN Congress in Lisbon, 2017.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elsh Government. (2024). Basic income pilot for care leavers: annual report 2023 to 2024. Gov.Wales.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인쇄일 : 2025년 10월 14일

발행일 : 2025년 10월 14일

---

발행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지방자치연구소  
Ⓢ 561-7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01호  
전화 : (063) 270-3611  
팩스 : (063) 270-3661  
E-mail : jjy2703611@daum.net

---